

포스트 코로나 | **Post COVID-19**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

“

과연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Business as Usual”이라는 말처럼 이전의 연속적이며 선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전에 즐기던 것들,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달라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잃고, 혹은 새롭게 얻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하는 것은 아닐까?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에서도 인간에게 위기를 가져다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간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기껏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80여 개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팬데믹(Pandemic)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 털어 감염병과 인간은 상시적으로 공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이 발발할 때마다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의 치열한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그 재앙은 대규모적이었으며, 이는 다시 대규모의 사회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1340년대 페스트의 발생으로 당시 유럽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로 임금이 치솟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산업혁명의 출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페스트는 농업자본주의를 촉진시키고 이는 다시 산업자본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인류의 경제는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때는 약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는데, 이 수치는 제1차 세계 대전 사망자 1,700만 명 보다 3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앙은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현장을 본격적으로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한 대량생산체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지금껏 소극적인 대처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현실에서 세계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방역을 위해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봉쇄(Lockdown)조치를 강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이 강화되어,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또한 비대면 사회(Un-tact Society)가 일반화되어 기존의 경제활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으로 이것이 가능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국가의 역할과 기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변화, 동양문화에 대한 재평가 등이 예상되는 변화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생명과 경제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제를 일정 부분 희생하고 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분명한 학습기회를 가진 시기였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라는 자기증식능력이 없는 미생물이 우리가 사는 문명사회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의 출현에 대해서 인간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하는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의 축적기반을 다시 회고하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욱 잘 보기 위해 많은 과학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19’도 극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경험을 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정도의 “넥스트 노멀(Next Normal)”로 자리 잡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직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내놓아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보고서는 시론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내놓은 사회 변화에 대한 많은 예측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충북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더 많은 집단지성의 축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제Ⅰ장	팬데믹의 충격	
충격		
	제1절 21세기 감염병과 코로나19	15
	1. 21세기 감염병의 세계화	15
	2. 코로나19 팬데믹	19
	제2절 팬데믹이 불러온 충격	25
	1. 2020년 세계 경제 충격	25
	2. 한국의 경제상황과 위협요인	30
	3. 충북의 경제 전망	34
제Ⅱ장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 전망	
전망		
	제1절 넥스트 노멀 시대의 도래	39
	1.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일상	39
	2. 몇 가지 뚜렷한 변화 트렌드	48
	3. 분야별 사회 변화 전망	53
	제2절 정부 정책 동향과 시사점	56
	1. 코로나19 정부의 대응	56
	2.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 방향	63
	3. 충북의 정책수립 방향설정	72
제Ⅲ장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전략과제	
과제		
	제1절 산업경제	77
	1. 현상과 이슈	77
	2. 전략과제	84
	제2절 고용·일자리	90
	1. 현상과 이슈	90
	2. 전략과제	95
	제3절 과학기술	100
	1. 현상과 이슈	100
	2. 전략과제	106

제4절 농축산	112
1. 현상과 이슈	112
2. 전략과제	118
제5절 도시공간	125
1. 현상과 이슈	125
2. 전략과제	129
제6절 교통물류	136
1. 현상과 이슈	136
2. 전략과제	142
제7절 문화관광	150
1. 현상과 이슈	150
2. 전략과제	158
제8절 환경	169
1. 현상과 이슈	169
2. 전략과제	175
제9절 보건복지	179
1. 현상과 이슈	179
2. 전략과제	184
제10절 행정	191
1. 현상과 이슈	191
2. 전략과제	200

제Ⅳ장	넥스트 충북, 미래 설계	
시행		
제1절 전략방향 설계		215
1. 전략과제 구조화		215
2. 대응 전략 체계도		226
제2절 '넥스트 충북'을 위한 제언		228
1. 사업추진체계 구축		228
2. 정책연계를 통한 동력 확보		230
참고문헌		235



〈표 Ⅰ-1〉 21세기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18
〈표 Ⅰ-2〉 감염성 질환의 발생원인	20
〈표 Ⅰ-3〉 주요국의 경제활동과 코로나19 감염	21
〈표 Ⅰ-4〉 국내외 주요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	24
〈표 Ⅰ-5〉 세계 경제 전망(IMF)	27
〈표 Ⅰ-6〉 주요국 실업률 전망	28
〈표 Ⅰ-7〉 가계신용 추이	32
〈표 Ⅰ-8〉 코로나19 사태의 강도에 따른 시나리오	34
〈표 Ⅱ-1〉 한 나라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행) 다른 나라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열)	50
〈표 Ⅱ-2〉 온라인 소비 변화	54
〈표 Ⅱ-3〉 산업경제 분야 변화전망	55
〈표 Ⅱ-4〉 사회문화 분야 변화전망	55
〈표 Ⅱ-5〉 시도별 코로나 대응조직	58
〈표 Ⅱ-6〉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정책논의 내용	59
〈표 Ⅱ-7〉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정책논의 내용	60
〈표 Ⅱ-8〉 비상경제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정책논의 내용	60
〈표 Ⅱ-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정책논의 내용	61
〈표 Ⅱ-10〉 제2차 추경예산 확정 결과	67
〈표 Ⅲ-1〉 비제조업 경기지수	77
〈표 Ⅲ-2〉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	78
〈표 Ⅲ-3〉 충북의 소비자심리 동향	78
〈표 Ⅲ-4〉 충북의 신용카드 사용액 동향	79
〈표 Ⅲ-5〉 제조업 경기지수	80
〈표 Ⅲ-6〉 품목별 수출	80
〈표 Ⅲ-7〉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산업의 변화	83
〈표 Ⅲ-8〉 주요국 실업률 전망	90
〈표 Ⅲ-9〉 노동시장 유연성의 종류 및 내용	98
〈표 Ⅲ-10〉 5G 이동통신 분야 코로나19 영향 요인	106
〈표 Ⅲ-11〉 서비스업종별 코로나19 관련 이슈 및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108
〈표 Ⅲ-12〉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과제	111
〈표 Ⅲ-13〉 청주시 시내버스 1/4분기 승차건수 현황	136
〈표 Ⅲ-14〉 2019년 대비 2020년 동 기간 택시 수입금 비교	136
〈표 Ⅲ-15〉 코로나19 발생 전후 시외버스업체 1주일 승객수 현황	137

〈표 Ⅲ-16〉 오송역 1/4분기 이용객 현황	137
〈표 Ⅲ-17〉 청주공항 1/4분기 운행현황	138
〈표 Ⅲ-18〉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 동향 및 업계 피해현황	152
〈표 Ⅲ-19〉 '20년 4월 국립공원 탐방객 수	158
〈표 Ⅲ-20〉 청주시 재활용선별장의 반입 및 선별량(1월~4월)	171

〈표 Ⅲ-21〉 청주시 생활폐기물의 세부 분류별 변화	172
〈표 Ⅲ-22〉 충청북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79
〈표 Ⅲ-23〉 2030년 의료인력 수급전망(2017년 기준)	183
〈표 Ⅲ-24〉 온나라(On-nara) 시스템 개발 및 보급연혁	191
〈표 Ⅲ-25〉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193
〈표 Ⅲ-26〉 비대면 민원서비스별 민원서류(전체) 발급건수('20.2~3.)	194
〈표 Ⅲ-27〉 재난 관련 법령	196
〈표 Ⅲ-28〉 피라미드형 지성과 집단지성 비교	205
〈표 Ⅲ-29〉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10

〈표 Ⅳ-1〉 산업경제 부문 전략과제	216
〈표 Ⅳ-2〉 고용·일자리 부문 전략과제	217
〈표 Ⅳ-3〉 과학기술 부문 전략과제	218
〈표 Ⅳ-4〉 농축산 부문 전략과제	219
〈표 Ⅳ-5〉 도시공간 부문 전략과제	220
〈표 Ⅳ-6〉 교통물류 부문 전략과제	221
〈표 Ⅳ-7〉 문화관광 부문 전략과제	222
〈표 Ⅳ-8〉 환경 부문 전략과제	223
〈표 Ⅳ-9〉 보건복지 부문 전략과제	224
〈표 Ⅳ-10〉 행정정보 부문 전략과제	225



〈그림 I-1〉 메르스 확진자 변화	17
〈그림 I-2〉 코로나19	19
〈그림 I-3〉 세계항공노선도(2018년 ICAO)(좌)와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도(우)	22
〈그림 I-4〉 코로나 발생 현황	22
〈그림 I-5〉 충청북도 코로나 발생 현황	23
〈그림 I-6〉 코로나19 이후 회복패턴 전망	29
〈그림 I-7〉 감염병 충격 전이경로	31
〈그림 I-8〉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악화 요인	33
〈그림 II-1〉 합동결혼식과 마스크 키스	39
〈그림 II-2〉 마스크 대란 끝, '마스크 5부제' 시행	40
〈그림 II-3〉 강도다리 활어회 드라이브스루 인기폭발	41
〈그림 II-4〉 한국발 입국제한, 막혀버린 국경	41
〈그림 II-5〉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42
〈그림 II-6〉 4차례 개학 연기 끝 온라인 개학	43
〈그림 II-7〉 방역관리 속에 진행된 총선	43
〈그림 II-8〉 프로야구 무관중 개막	44
〈그림 II-9〉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45
〈그림 II-10〉 사상 첫 온라인 공채 시험	45
〈그림 II-11〉 포스트 코로나 30가지 생존법칙	46
〈그림 II-12〉 몇 가지 뚜렷한 변화 트렌드	48
〈그림 II-13〉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과 경과 추이	56
〈그림 II-14〉 비상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체계	57
〈그림 II-15〉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61
〈그림 II-16〉 제1차 코로나 대응정책 방향과 주요내용	63
〈그림 II-17〉 업종·분야별 정책적 지원대책 내용(1)	64
〈그림 II-18〉 업종·분야별 정책적 지원대책 내용(2)	65
〈그림 II-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향과 정책내용	66
〈그림 II-20〉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과 과제	68
〈그림 II-21〉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69
〈그림 II-22〉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1)	70
〈그림 II-23〉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2)	71

〈그림 Ⅲ-1〉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국가 네트워크	81
〈그림 Ⅲ-2〉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인 소비형태 변화	84
〈그림 Ⅲ-3〉 충북형 공공배달업 관련 언론보도	86
〈그림 Ⅲ-4〉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88
〈그림 Ⅲ-5〉 충북 2030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89
〈그림 Ⅲ-6〉 고용률(15~64세) 증감 추이	91
〈그림 Ⅲ-7〉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추이	91
〈그림 Ⅲ-8〉 고용률(15~64세) 변화 추이	92
〈그림 Ⅲ-9〉 실업률 변화 추이	92
〈그림 Ⅲ-10〉 제조업 취업자 수 변화 추이	92

〈그림 Ⅲ-11〉 30~39세 취업자 수 변화 추이	92
〈그림 Ⅲ-12〉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 변화 추이	93
〈그림 Ⅲ-13〉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수 변화 추이	93
〈그림 Ⅲ-14〉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장 변화	94
〈그림 Ⅲ-15〉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95
〈그림 Ⅲ-16〉 ICT 부문 GVC 무역 네트워크	97
〈그림 Ⅲ-17〉 충북형 뉴딜 개념도	99
〈그림 Ⅲ-18〉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105
〈그림 Ⅲ-19〉 외국인근로자 입국 연기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	115
〈그림 Ⅲ-20〉 시설원에 분야 스마트팜 구성도	120

〈그림 Ⅲ-21〉 농업용 드론	120
〈그림 Ⅲ-22〉 진천군 농산물 꾸러미 온라인 판매	121
〈그림 Ⅲ-23〉 시군구별 도시공원시설 접근성	127
〈그림 Ⅲ-24〉 스마트 교육환경 선도모델 사업계획	129
〈그림 Ⅲ-25〉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	132
〈그림 Ⅲ-26〉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설계사례	134
〈그림 Ⅲ-27〉 연도별 오송역 1/4분기 이용객 추이	137
〈그림 Ⅲ-28〉 버스 내 코로나19 전파 사례	139
〈그림 Ⅲ-29〉 스마트 에코셀터 설치사례	143
〈그림 Ⅲ-30〉 시내버스 차내 혼잡도 구분기준(서울특별시)	144

〈그림 Ⅲ-31〉 우정사업본부 자율주행 이동우체국(상), 아마존 자율주행 배송로봇(하)	149
〈그림 Ⅲ-32〉 시나리오별 국제 관광객 도착량	150
〈그림 Ⅲ-33〉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지역	151
〈그림 Ⅲ-34〉 문화예술 세부업종별 매출	152
〈그림 Ⅲ-35〉 콘서트 실황 영상 이용권을 제공한 베를린 필하모닉	153
〈그림 Ⅲ-36〉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투어 캡처	154



〈그림 III-37〉 국내/해외 여행계획보유률(좌) 및 여행의사(우)	155
〈그림 III-38〉 영국 BBC Radio4 프로젝트 Science Museum	156
〈그림 III-39〉 정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159
〈그림 III-40〉 청주전시관 조감도	160

〈그림 III-41〉 청주 오송 국제회의복합지구(안)	162
〈그림 III-42〉 오송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162
〈그림 III-43〉 미국 리버티과학관 내 의학 전시관	163
〈그림 III-44〉 충북형 의료관광 계획(안)	165
〈그림 III-45〉 2020 화랑미술제 x 네이버 아트윈도 특별 기획전	166
〈그림 III-46〉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상위 10가지 위험	169
〈그림 III-47〉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과 한국의 대기오염도 변화(1월(좌), 2월(우))	170
〈그림 III-48〉 청주시 재활용선별장의 반입량과 선별량 변화(1월~4월)	172
〈그림 III-49〉 청주시 재활용선별장의 1~4월 종류별 선별량 변화	172
〈그림 III-50〉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공터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173

〈그림 III-51〉 도시에 종속적인 농촌의 공간, 사회 구조	174
〈그림 III-52〉 소비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처리의 LCA과정	176
〈그림 III-53〉 생태놀이터	177
〈그림 III-54〉 분산형 공간	178
〈그림 III-55〉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180
〈그림 III-56〉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좌), 공공기관 병상수 비율(우)	182
〈그림 III-57〉 중국 라오닝성 의사의 우한시 환자 원격진료	190
〈그림 III-58〉 국가 전염병 재난 발령단계	192
〈그림 III-59〉 비대면 업무시스템 이용	193
〈그림 III-60〉 감염병 대응 관련 법체계	195

〈그림 III-61〉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199
〈그림 III-62〉 정부 공통 행정업무시스템 구성	201
〈그림 III-63〉 한국형 공개강좌 K-MOOC	203
〈그림 III-64〉 챗봇 서비스 전체 개념도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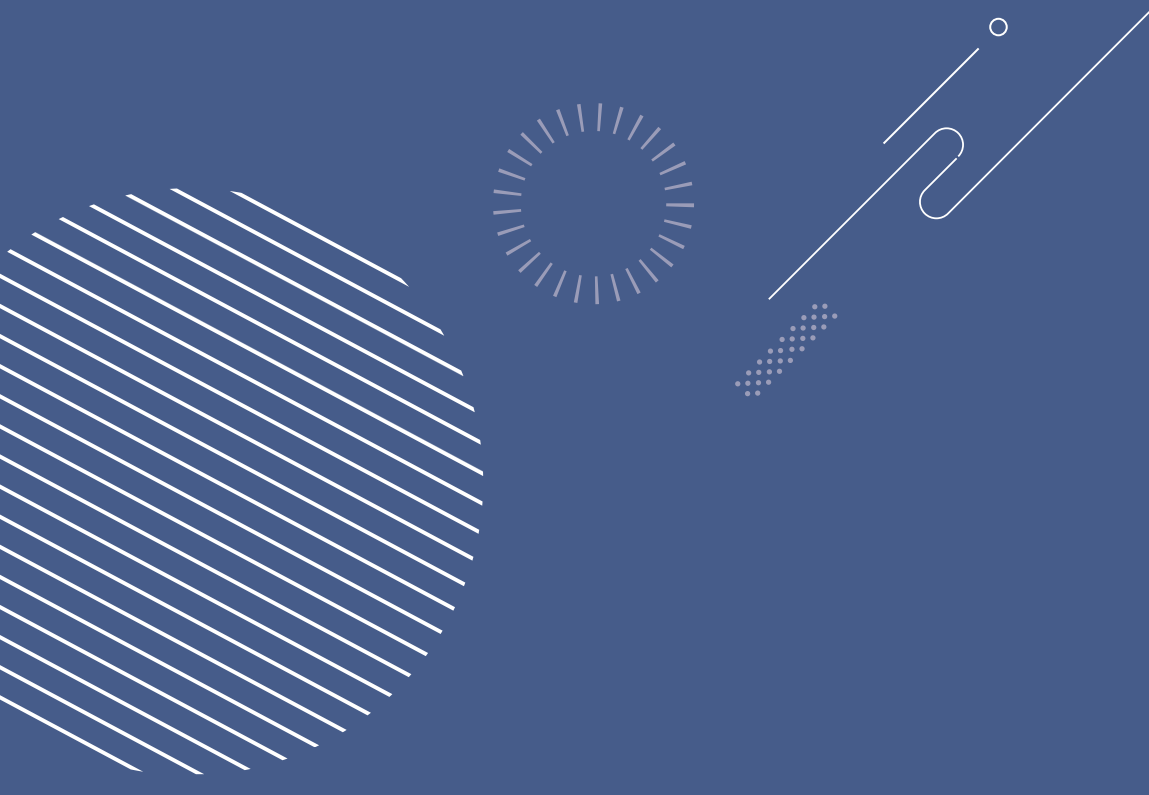
〈그림 IV-1〉 넥스트 충북 전략과제 구조화 과정	215
〈그림 IV-2〉 ‘넥스트 충북’ 대응 전략 체계도(Type 1)	226
〈그림 IV-3〉 ‘넥스트 충북’ 대응 전략 체계도(Type 2)	227
〈그림 IV-4〉 The Great Reset by COVID-19	231
〈그림 IV-5〉 충북형 뉴딜 사업의 방향성 확장	234

충격

팬데믹의 충격

제1절 | 21세기 감염병과 코로나19

제2절 | 팬데믹이 불러온 충격





코로나19는 비단 감염병 위기일 뿐 아니라,
임박한 세계 경제 질서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재편,
즉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Mckinsey & Company, ‘Beyond coronavirus:
The path to the next normal’, 2020.3., 일부 발췌

제 1 장

팬데믹의 충격

제1절 21세기 감염병과 코로나19

1. 21세기 감염병의 세계화

1 인류와 감염병

■ 기록된 최초의 감염병은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 역사에 처음 기록된 팬데믹은 541년~750년까지 이어진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며, 그 이후 △14세기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 약 2억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페스트, △1918~1919년 세계적으로 5,000만~1억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1969년 사이에 약 100만~4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독감’ 등이 과거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기록되어 있음

■ 우리나라 감염병의 역사

- 가장 무서웠던 감염병은 ‘천연두’로서 조선시대에 아동 사망의 40%는 천연두가 원인임
 - 임진왜란 전 1,200만이었던 조선의 인구는 600~700만으로 줄어들었다가 고종 때에 이르러 1,400만 수준이 되었는데 인구가 대량으로 줄어든 것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문이 아니고 현종 때 창궐한 감염병이 가장 큰 원인¹⁾
- 그 외에 ‘서반아 감기’로 불렸던 스페인 독감에 14만 명이 사망하였고(환자 수 288만 4천명, 전체 인구 16.3%), 결핵은 1920~30년대 우리나라 인구의 1/4을 감염시킬 정도로 창궐하였으며, 불과 60~70년 전만 해도 1년에 콜레라로 1만 명, 장티푸스로 1만 명, 그리고 일본뇌염으로 2천 명이 사망했을 만큼 국민건강의 가장 큰 위협이었음²⁾

1) K스피릿, <http://www.ikoreanspirit.com>

2) 장철훈, 감염병 전쟁 어디까지 왔나, Future Horizon 44권 1호, 2020

2 우리나라 주요 감염병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SARS)

- (개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SARS), 사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인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associated coronavirus)에 의해 감염됨
 -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질병을 사스로 명명했으며, 2002년 11월 처음 발견되어 2004년 7월 공식적으로 박멸
- (우리나라에의 영향과 결과) 한국에서는 3명의 감염자에 그쳤고 그 3명도 완치되었으며, 비록 격리병원에 격리진료실과 격리병실도 없었지만, 초기부터 중국에까지 열감지기를 보내 비행기 탑승 전부터 철저히 체온을 측정하고, 격리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평가됨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H1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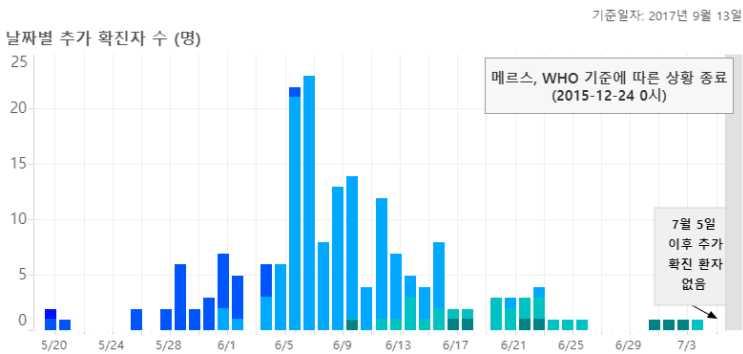
- (개요)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H1N1)을 2009년에 부르던 말로써, 홍콩 독감, 코로나19와 같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으로 선언한 질병 세 가지 중 하나임
- (우리나라에의 영향과 결과) 2009~2010년 기준 총 759,678명이 감염되어 총 270명이 사망하여 인구 대비 감염자 수로 전 세계 8위를 차지했으며, 치사율은 0.035%로 세계치사율보다 훨씬 낮은 치사율을 기록함(현재는 계절독감 수준)
 - 2009년 5월초 3명의 확진환자가 발견되었으나 완치되어 퇴원
 - 2009년 7월 총 감염자수 2천명 이상, 2009년 8월 15일 첫 사망자 발생
 - 2009년 10월 30일 타미플루 보급(전국 약국)
 - 2009년 11월 3일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 - 심각으로 변경
 - 2009년 11월 11일 신종플루 예방접종 실시
 - 2009년 ~ 2010년까지 약 1년간 국내 사망자 총 263명
 - 2009년 8월 15일~연말까지 5개월간 확진환자 70만 명 이상 (1일 약 5천 명의 확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 (개요)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메르스)은 2012년 9월 24일 이집트의 바이러스 학자인 알리 모하메드 자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견함

- (우리나라에의 영향과 결과) 정부는 총력적으로 메르스 유행에 대응하였고 역학 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 등 방역조치, 환자 진단, 치료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유행은 종결되었으나, 2015년 메르스 유행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많은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됨

-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한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에 사업을 하는 68세 남자가 2015년 4월 24일 중동지역을 방문하여 2주간 체류 하다 귀국하였는데, 이후 메르스 첫 환자로 확진
-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 사례 발생 후 같은 해 12월 23일 유행 종료를 선언한 날까지 총 16개의 병원에서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하고 16,693명을 격리
- 환자들 중 44.1%는 병원에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들이고, 32.8%는 환자를 병간호한 사람, 13.4%는 의료인
- 환자 중 83.2%가 다섯 건의 슈퍼 전파사건(Super-Spreading Event)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질병관리본부, 2015)



[그림 1-1] 메르스 확진자 변화

자료 : KBS 뉴스, <https://dj.kbs.co.kr/resources>, 2015.6.19.

3 21세기 감염병의 세계화와 과제

■ 21세기 주요 감염병

- 20세기 들어서면서 위생과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와 각종 백신이 등장하는 등 의학기술의 발달로 감염병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지속해서 줄어들어 인류가 감염병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감염병이 재출현하고 기존에 없었던 신종 감염병들이 속출하고 있음

- 인류는 21세기를 막 들어선 시점인 2002년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SARS)을 시작으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3년 살인진드기,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을 비롯해 2020년 지카바이러스, 코로나19까지 몇 년 간격으로 대규모 전염병을 겪고 있음
 - 신종플루는 감염자 수가 163만 명을 넘었고, 메르스는 치사율이 40%에 이르렀으며, 감염병의 세계화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
- 2000년대 초반 사스와 조류독감의 위기를 겪으면서 제정된 국제보건규칙 IHR(2005)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 선언을 시작한 이래 지카, 에볼라 및 소아마비 등 다섯 번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다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일임

새로운 과제 : 감염병의 대응과 통제

- 21세기 인류는 감염병에 대해 전례 없이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인구 증가, 대규모 가축사육, 밀립 파괴와 야생동물 접촉, 기후 변화로 인한 매개 곤충 서식지 확대, 교통의 발달과 인구의 이동, 생물 다양성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수많은 원인들이 새로운 병원체의 신속한 전파를 부채질
- 최근 신종 감염병과 재출현 감염병 유행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행기를 이용한 이동이 일상화되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넓은 지역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됨
- 감염병 발생 양상이 과거와 달라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과 유행 통제는 21세기 우리가 풀어야 하는 새로운 보건학적 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표 1-1 | 21세기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구분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사스)	신종플루(H1N1)	메르스(MERS)
집중 발생 시기	2002년 11월 ~ 2003년 7월	2009년 4월 ~ 2010년 5월	2012년(사우디아라비아), 2015년(한국)
확산 지역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한국 등 15개국	세계 대부분 지역	중동·북아프리카와 한국을 비롯한 27개국
감염자·사망자 수와 치사율	8,096명 감염, 774명 사망, 치사율 9.6%	확진된 감염자 163만2258명 공식 사망자 1만9633명 치사율 0.01~0.5% 추정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감염자 1,227명, 사망자 449명, 치사율 37%
바이러스와 매개동물	박쥐에서 옮겨온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	유라시아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결합된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박쥐를 거쳐 낙타를 통해 전해진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사람 간 전염	비말(침방울 등) 통해 전염	비말(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	비말(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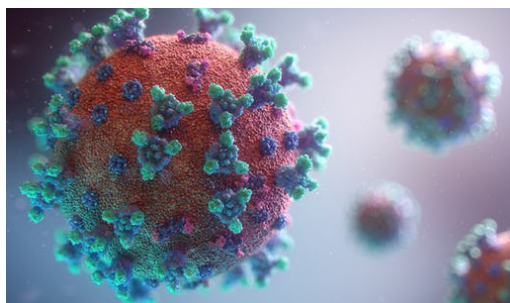
자료 : 위키사전, WHO, ECDC 등

2. 코로나19 팬데믹

1 코로나19 정의 및 특징

■ 코로나19 정의

-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COVID-19는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2019년도를 의미함
 - 2020년 1월 20일 ‘국제 바이러스 분류학 위원회’는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균주를 ‘제2형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식 명명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2월 11일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OVID - 19’로 명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를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으로 공식 명명
- (조직) RNA 바이러스로 30 킬로베이스(Kb)⁴⁾ 길이의 단일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같은 세포에 2개의 바이러스가 감염될 경우, 코로나19는 재조합이 가능함
 - 코로나19는 동물을 감염시키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으나, 사람을 감염시키는 종류는 HCoV-229E, HCoV-OC43, HCoV-NL63, HCoV-HKU1, SARS-CoV 및 MERS-CoV 등 여섯 종류로 발표
 - 우한에서 발생한 이번 코로나19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그림 1-2] 코로나19

자료 : IDTechEx, Where Is the Future of COVID-19 Diagnostics?, 2020

3) 이하 본문에서는 ‘코로나19’로 통일하여 명기

4) DNA나 RNA의 크기를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염기수 1,000개를 단위로 하여 나타낸 것으로, 1,000개의 염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1kb라고 표기(네이버 지식백과)

■ ‘코로나19’ 특징

-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실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 이후 3개월 만에 110개국으로 급속히 확산됨
 - 우한시의 특징 : 역사적으로는 적벽대전 발생지, 대도시, 각종 야생동물이 거래·도축되는 중국재래시장 등이 존재하고, 춘절을 앞둔 시기여서 바이러스 확산의 최적 환경
-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는 발병이 되어야 숙주 밖으로 배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증상이 없이도 배출되는(무증상 감염) 특성을 가짐
 -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처방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전의 감염병에 비해 경제활동에 치명적 제약 야기

■ 감염성 질환의 발생 및 확산 원인

- 감염성 질환의 발생원인은 미생물 자체가 그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인간의 행동에 그 원인을 두고 있음
- 그동안 세계화의 촉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의 활발로 팬데믹의 장기간 지속 가능성이 높게 예측됨
 - 세계 해외여행객(입국자 기준) : 1950년 0.3억 명 → 1960년 0.7억 명 → 2018년 14.1억 명
 - 세계 교역규모 : 1950년 0.1조 달러 → 1960년 0.3조 달러 → 2018년 39.3조 달러
- ‘코로나19’는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데, 인간의 행동 양식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 확산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통제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음

표 1-2 | 감염성 질환의 발생원인

미생물 자체의 원인	1. 미생물의 자기증식 본능에 의한 적응과 변화
인간 행동의 원인	1. 인간의 노화 및 수혈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
	2. 도시화와 인구 밀집으로 인한 바이러스 활동의 최적지 제공
	3. 여행과 무역의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확산
	4. 열악한 가축 집단사육환경
	5. 인간과 가축에 대한 항생제 남용
	6. 생태계 파괴
	7.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자료 : 연구진 재구성

2 코로나19 발생 현황

WHO의 3월 11일 세계 대유행(Pandemic) 선언

- WHO는 2020년 1월 30일 비상사태 선포, 3월 11일 세계 대유행(Pandemic) 선언함
 - 1948년 WHO의 설립 이후 공식적인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 2019년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3차례
- 선진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6,162,953명 사망자는 371,709명으로 치사율은 평균 6.0%를 기록하고 있음
 - 현재 1만 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식적으로 완전히 박멸된 것은 1977년 천연두바이러스 단 1건에 불과
 - 대다수 바이러스가 불안정한 유전구조인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예상되며, 발생주기가 대략 4~7년 정도로 점점 짧아질 것으로 예측
- 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 패턴은 '중국 → 선진국 → 인구밀집 저개발국 →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코로나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림 I-3]에서와 같이 경제활동의 활발함을 대표하는 세계 항공망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분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I-3 | 주요국의 경제활동과 코로나19 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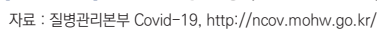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GDP 비중	제조업 비중	수출 비중	제조품 수출 비중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사망자
미국	24%	16%	8%	8%	1,283,829	77,178
중국	16%	29%	13%	18%	82,887	4,633
일본	6%	8%	4%	5%	15,628	601
독일	5%	6%	8%	10%	170,588	7,510
영국	3%	2%	2%	3%	211,364	31,241
프랑스	3%	2%	3%	4%	138,421	26,230
인도	3%	3%	2%	2%	56,342	1,886
이탈리아	2%	2%	3%	3%	217,185	30,201
브라질	2%	1%	1%	1%	145,328	9,897
캐나다	2%	0%	2%	2%	66,434	4,569
한국	1.9%	3.3%	2%	4%	10,840	256

자료 : IBRD(World Databank), 질병관리본부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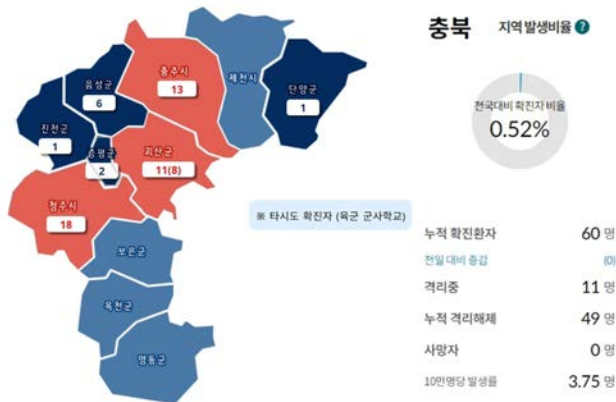


- 2020년 6월 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541명(해외유입 1,266명 (내국인 89.3%)), 격리해제자는 총 10,446명, 격리자는 총 823명으로 집계됨
- 전체 확진자 중 여성이 58.16%를 차지하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71.6% 발생, 20-29세가 27.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59세가 17.86%를 차지함
- 전체 사망자중 남성이 52.9%를 차지하며, 치명률도 남성이 2.98%로 여성의 1.91%보다 높음
 - 80세 이상이 사망자의 48.90%를 차지하며 치명률 26.65%



충청북도 발생 현황

- 2020년 6월 2일 0시 현재, 전체 확진자는 60명(전국의 0.25%)이며 사망자는 없음
 - 격리환자는 11명, 완치환자는 49명, 충북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3.75명
- 확진자 수는 청주시가 18명(3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주시 13명(21.6%), 괴산군 11명(18.3%) 순으로 집계됨
 -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경우 확진자 없음



[그림 1-5] 충청북도 코로나 발생 현황 (2020.6.2.기준)

자료 : 질병관리본부 Covid-19, <http://ncov.mohw.go.kr/>

3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과 대응

-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 겨울에 재창궐 가능성도 높음⁵⁾
 - '20.5.31. 현재 총 214개 국가 및 지역에서 환자 708만 명, 사망자 40만 명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매일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양상
 - 코로나19는 '20년 여름에 확산 속도가 둔화되며 종식될 듯하다가, 가을을 기점으로 급증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고, 백신이 개발되거나 65~70%의 인구를 감염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세계는 유행병(Epidemic)의 시작 부분의 끝 지점에 있을 뿐이며(The End of the Beginning),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Michael Osterholm)⁶⁾

5) 뉴스원, [바이러스 대란-②] 코로나 팬데믹 어디까지 왔나, 2020.4.20.

6)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Novel Coronavirus(COVID-19)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 코로나19가 일시적 유행 후 소멸하는 신종질환이 아니라 HIV와 같은 풍토 바이러스(Endemic Virus)가 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⁷⁾
- 엔데믹(Endemic·주기적 발병) : 특정한 지역에서 환자가 꾸준히 생기는 '토종' 감염병⁸⁾
- 코로나19의 근본적 해결책은 신약개발 또는 백신이나, 현재로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는 백신 출시에는 통상 5~10년이 소요되며,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단기간 내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안전성 검증을 위해 3단계의 임상 시험)⁹⁾
 - 백신이 만들어져 최종 승인까지는 10억~20억불이 투자되는 반면 실패확률 90% 상회
- 한편 치료제 개발 역시 시간 단축을 위해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단계를 대신하여 기존 에볼라·신종플루 등 기존 약 활용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이 역시 최소 18개월, 통상 수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임

표 1-4 | 국내외 주요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

구분	기업체	개발동향
치료제 (국내)	셀트리온	6개월 내 치료용 항체 확보 및 환자 투여 계획
	일양약품	일부 신약에서 치료 후보물질 발견, 유효성 확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제 코로나19 치료제로의 활용 계획
	코미팜	코로나19 사망 유발 폐렴 억제 신약 개발 추진
	셀리버리	개발 중인 패혈증 치료제의 코로나19 치료 가능성 타진
	이윤메드	신약 후보물질 코로나19 환자에게 첫 처방
치료제 (해외)	노바셀테크놀로지	국내 CRO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에브비(미)	HIV치료제 '칼레트라'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중국 등 임상 9건 진행
	존슨앤존슨(미)	HIV치료제 '프레지스타'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중국에서 연내 임상
	길리어드 사이언스(미)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용 임상 6건 진행
백신 (국내)	후지필름/도아마화학(일)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 코로나19 치료용 중국임상 진행, 일본 활용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후보물질 제작 국책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스마젠	국제백신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으로 백신 개발 착수
백신 (해외)	지플러스생명과학	식물에서 백신 후보물질 발견 확인, 동물 실험 준비
	모더나 세러퓨틱스(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미국에서 임상 진행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미국에서 임상 진행

자료 : 중앙일보, 코로나 치료제 '상반기 임상 결과' vs '연내 개발 어려워', 2020.3.21.

7) CNN, Coronavirus may 'never go away,' says WHO official, 2020.5.13.

8) The Scinece Times, 모든 균종을 뜻하는 '팬데믹', 2020.3.17.

9) 동아닷컴, 코로나 백신 개발 1년 이상 걸려...빠른 시간내 사용 불가능, 2020.3.26.
중앙일보, 백신 출시에 보통 5~10년 걸리지만, 코로나19는 단축 가능, 2020.4.11.

제2절 팬데믹이 불러온 충격

………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중(2020.5.10.)

1. 2020년 세계 경제 충격

1 세계 경제 전망

■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기본 시나리오

- 당초 기대되었던 단기간 내 회복은 점차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이고, 세계경제 둔화폭은 '80년대 초 및 '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크고 속도도 빠를 것이라는 전망임(-3.5%p ↓)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추가 하강위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JP Morgan),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은 '21년 하반기나 가능하다고 진단 (Pitch)
 - 시장에서는 기업투자 부진과 장기간 실업을 피할 수 있다면, 코로나19가 생산 능력에 미치는 구조적인 훼손을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나, 코로나19는 이전 전염병과 달리 전 세계 경제활동에 광범위하게 영향
- 이번 침체는 역사상 가장 단시간 내에 침체(2분기)로 진입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08년 금융위기보다 은행부문 피해가 적다는 점은 빠른 반등을 지지하는 요인이나, 피해가 서비스업에 집중된 만큼 고용 회복이 경기 반등에 필수(UBS)

■ IMF는 '20년 세계경제 -3.0%로 위축 예상

-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악화되어 '20년 - 3.0%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①과거 충격과 달리 이번 팬데믹 사태는 노동공급 급감, 사업장 폐쇄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생산성 저하 등이 야기되며, ②금융시장 충격, 실업률 상승으로 디폴트 리스크 고조, 국제금융시장 연계를 통해 증폭되고 있고, ③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들의 산업활동, 소매업, 고정자산 투자 등이 급락되는데 기인

■ 주요국 경제 전망

- 미국(-4.4%p ↓) : 코로나19로 소비 감소(여행·여가·요식 부문), 공급망 붕괴, 금융여건 악화가 경제위축을 심화하고, 대량실업 사태를 지속시킬 것으로 우려
 - 4~5월 7주간 실업자 3,3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Goldman Sachs)
 - 미국 실업률 4.4%(20.3월 기준)으로 10년만 최악 기록
 - 3월 실업급여 청구건수 1,000만 건, '20.4월(10%), 5월(16%) 전망(역대 최고치는 '82년 Oil Shock의 10.8%)
- 유로존(-6.4%p ↓) :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기침체폭이 커질 우려
 - 재정위험 공동부담에 대한 일부 국가의 의지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Citi)
- 중국(-3.5%p ↓) :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으나 '20.1분기 급격한 경기위축 불가피
 - 재정정책 대응이 부진한 가운데 정상화 지연,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약화 등이 하방압력(GS)
- 일본(-2.9%p ↓) : 올림픽 연기로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도쿄 봉쇄
 - 도쿄 및 인근 3개현의 GDP 비중(30%)을 고려할 때, 도쿄 봉쇄 시 일본경제에 상당한 타격 예상(GS, Nomura)
 - '20.4.8.~5.6. 1개월간 도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오사카, 효고현 및 후쿠오카현 대상조치 : 봉쇄조치로 인한 피해는 1개월간 도쿄 5조엔, 인접지역 포함시 8.9조엔 상당 GDP 감소 전망

■ 경기침체 현실화(IMF, '20.4.)

- 실제 IMF '20.4월 보고서에서 급격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 OECD 국가(36개) 중 한국의 ①금년 성장률 하향 조정폭(Δ 3.4%p)은 가장 작은 수준이며, ②금년 성장률 전망치(-1.2%)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최근 지표가 하락 가능성 존재)

| 표 | -5 | 세계 경제 전망(IMF)

(단위 : %)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19년 실적	'20년 전망			'21년 전망		
		'20.1.(A)	'20.4.(B)	조정폭 (B-A)	'20.1.(C)	'20.4.(D)	조정폭 (D-C)
세계	2.9	3.3	-3.0	△6.3	3.4	5.8	2.4
OECD	1.7	1.6	-6.1	△7.7	1.6	4.5	2.9
신흥국	3.7	4.4	-1.0	△5.4	4.6	6.6	2.0
미국	2.3	2.0	-5.9	△7.9	1.7	4.7	3.0
EU	1.7	1.6	-7.1	△8.7	1.7	4.8	3.1
독일	0.6	1.1	-7.0	△8.1	1.4	5.2	3.8
프랑스	1.3	1.3	-7.2	△8.5	1.3	4.5	3.2
이탈리아	0.3	0.5	-9.1	△9.6	0.7	4.8	4.1
스페인	2.0	1.6	-8.0	△9.6	1.6	4.3	2.7
영국	1.4	1.4	-6.5	△7.9	1.5	4.0	2.5
일본	0.7	0.7	-5.2	△5.9	0.5	3.0	2.5
캐나다	1.6	1.8	-6.2	△8.0	1.8	4.2	2.4
한국	2.0	2.2	-1.2	△3.4	2.7	3.4	0.7
중국	6.1	6.0	1.2	△4.8	5.8	9.2	3.4
인도	4.2	5.8	1.9	△3.9	6.5	7.4	0.9
러시아	1.3	1.9	-5.5	△7.4	2.0	3.5	1.5
브라질	1.1	2.2	-5.3	△7.5	2.3	2.9	0.6
멕시코	-0.1	1.0	-6.6	△7.6	1.6	3.0	1.4
사우디	0.3	1.9	-2.3	△4.2	2.2	2.9	0.7
홍콩	-1.2	1.5	-4.8	△6.3	2.5	3.9	1.4
대만	2.7	1.9	-4.0	△5.9	2.1	3.5	1.4
베트남	7.0	6.5	2.7	△3.8	6.5	7.0	0.5
호주	1.8	2.3	-6.7	△9.0	2.6	6.1	3.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4, 2020

2 세계 고용 전망

전 세계 근로자 33억 명에 영향(ILO, '20.4.)

-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 근로자 33억 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근로자 중 81%가 사업장의 폐쇄 권고 등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살고 있음

'20년 주요국 실업률 0.6%p ~ 6.9%p 상향 조정(IMF, '20.4.)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10월 전망치보다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6.9%로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됨(일본은 0.6%p 상향 조정)
- 한국의 실업률의 경우 0.3%p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가장 적게 조정됨

| 표 1-6 | 주요국 실업률 전망 (단위 : %, %p)

구분	'19년	'20년 전망		
		'19년 9월 전망(A)	'20년 4월 전망(B)	차이(B-A)
미국	3.7	3.5	10.4	+6.9
유로존	7.6	7.5	10.4	+2.9
독일	3.2	3.3	3.9	+0.6
프랑스	8.5	8.4	10.4	+2.0
이태리	10.0	10.3	12.7	+2.4
캐나다	5.7	6.0	7.5	+1.5
영국	3.8	3.8	4.8	+1.0
중국	3.6	3.8	4.3	+0.5
일본	2.4	2.4	3.0	+0.6
한국	3.8	4.2	4.5	+0.3

자료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일문일답], 2020.5.1., 재구성

3 경제 충격에 따른 회복 패턴 전망

-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크게 ① V자형, ② U자형, ③ Nike형, ④ Z자형 등 4가지 전망이 있으며, 이외에도 ⑤ 2차 팬데믹 등으로 경기가 재차 추락하는 더블 덩(이중 침체)의 'W형'이나 ⑥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L자형'의 전망도 있음
-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V자형으로 전염병이 급속히 사라지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유형(예 : 1975년 1차 오일쇼크)이나 그 기대는 급속히 줄어드는 양상

- 현재는 침체가 장기화되어 회복세가 지연되는 U자형(2015년 사스, 메르스)이나 일부 회복되었다가 2차 유행되는 유형(스페인 A형 독감)인 Z자형, 경기회복이 V자형보다는 늦어지고 U자형보다는 빨라지는 유형(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운데 'U자형 또는 나이키형'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¹⁰⁾

- 한편 그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상황이 반전하여 오버슈팅 과정을 거친 후 기존의 흐름으로 회귀하는 'Z자형'의 가능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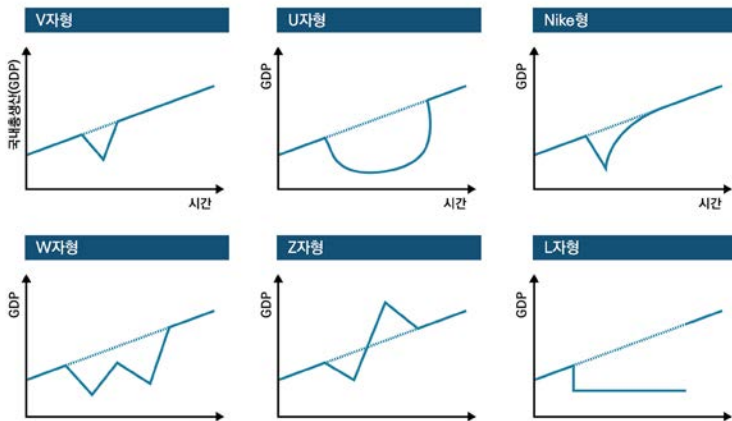
-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20년 하반기 혹은 '21년 재발할 가능성 등도 상존되는 상황임

- 그 논거는 중국, 한국 등은 코로나가 일정 부분 안정화되는 반면 러시아, EU는 그 기세가 여전하며, 건조한 저온에서 활성화 정도가 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남반구(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에서 확산되거나 변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기인

- 나이키형 혹은 U자형의 회복 어떤 것도 정부의 강력한 부양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정도로 사태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나이키형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임(WSJ, 2020)

- 각국 정부에서 동시다발적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데는 최소 1년 내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심지어는 과거 수준으로 복귀는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이 기존 경제 패러다임의 근간을 흔들며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



[그림 1-6] 코로나19 이후 회복패턴 전망

자료 : 국민일보, '나이키형도 낙관적' 끝없는 추락... '자형' 경기전망까지 등장, 2020.5.13.
하나금융그룹, HIF월간 산업 이슈, 2020.4.

10) 브루킹스연구소 내용을 국민일보('20.5.13)에서 재인용

2. 한국의 경제상황과 위협요인

1 한국의 경제상황

과거의 경제위기와 다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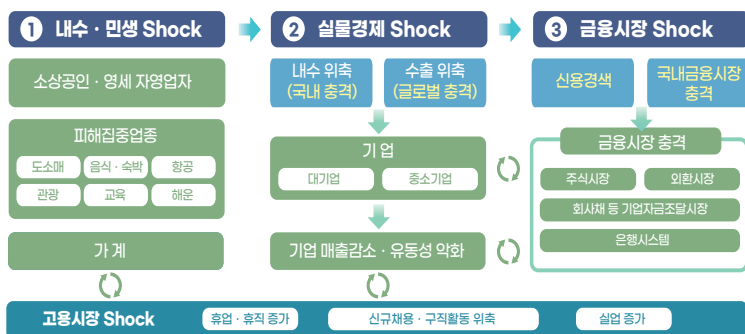
-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기업의 부채문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경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임
 - 세계 각국의 공조와 협력으로 극복
 -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안정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가 뉴노멀(New Normal)로 정착
-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코로나19'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경제활동 자체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위기로, '실물경제의 충격 → 금융시장 충격 → 총체적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감염병 특성상 격리,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동원칙으로 정착되면서 경제적 거래활동의 극심한 위축을 가져와 수요 감소
 - 초기에는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수요위축에서 시작하여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으로 전가되면서 고용감소를 초래, 이는 다시 생산자 및 가계부분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총체적 경제위기로 확산
 - 총체적 경제위기 가속화 요인으로 국가 간 폐쇄(Lockdown)가 장기화되면서 국제거래가 급감하여 세계경제 위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음

'20년 1/4분기 한국경제 상황

- 1/4분기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한 내수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출이 비교적 호조를 보여 -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선방함
- 그러나 2/4분기 이후에는 방역의 성공으로 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되나 팬데믹의 본격적 영향으로 인해 수출의 극심한 침체 예상되어 한국경제의 위기는 심화될 전망이다

■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 경로

- 공급충격 : 제조업 심장부에 속하는 동아시아(중국, 한국 일본 등)의 충격 →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
- 총수요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더욱 극단적으로는 Lockdown)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 대면 서비스업(도소매, 음식숙박, 문화관광 등) 수요 위축 → 내구재로의 수요 감소 확산'을 통한 총수요 감소
- 공급과 수요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세계적 경기침체로 확산되는 상황임
 - 한 예로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합의로 인한 석유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수요 감소가 더욱 크기 때문으로 진단
 - 최근 디플레이션 상황을 의심하는 이유도 총 공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기불황의 관측에 기인
- 최악의 상황은 유망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하고, 실업자의 상흔효과(경제 위기에 따른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경제회복 이후에도 무능한 인력으로 낙인되어 취업이 어려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임
 - 2019년 이자보상비용(영업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자비용)이 음(-)인 기업이 698개(전체 상장사의 34%)에 이르고 있는데,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또한 실업자의 상흔효과의 발생으로 실업의 장기화 가능성 내재



[그림 1-7] 감염병 충격 전이경로

자료 : 관계부처합동,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2020.4.22.

2 한국경제의 위협요인

■ 금융부문을 통한 위기 증폭

- 실물위기가 금융부문의 위기로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신흥국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신용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 해외자본의 유출 심화로 주가 및 통화 가치 폭락
-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리스크가 다시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져 세계적(국가적) 공황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임

■ 가계부채 위험성 증대

- 과거 가계부채 규모가 작을 때에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어 일정부분 성장효과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의 규모(Stock)가 급증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소규모 자영업자의 과잉투자 발생에 따른 가계부채의 가계소득 창출능력 저하, 금융시스템 취약성 증가 등으로 소비 위축이 나타나며 이는 다시 기업투자의 위축을 초래함
-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약 56% 정도임을 감할 때, 부동산 경기의 위축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촉진시켜 가계소비 침체에 의한 경기침체, 금융기관 부실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월 9.3조원, 3월 9.6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2019년 월평균 5.3조원 증가)
 - 3월 기업대출도 18.7조원 증가하여 2009년 이래 최대 폭을 기록

| 표 1-7 | 가계신용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계 신용 (증가율)	1,019.0 (5.7)	1,085.3 (6.5)	1,203.1 (10.9)	1,342.5 (11.6)	1,450.6 (8.1)	1,536.7 (5.9)	1,600.1 (4.1)
GDP 대비	67.9	69.4	72.6	77.1	79	81.2	83.6
가계소득 대비	122.6	125.4	130	136.6	147.6	149.2	152.5(e)

자료 : KOSIS, 각년도

■ 소득 양극화 심화 가능성

- 단기에서 통상적으로 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 및 단순 근로자 등이 대면수요 위축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도 고용 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하락 가능성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소득 악화로 인해 소득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근로유연제 채택 가능성에 따른 양극화 가능성이 존재)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권고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대기업 및 가능 업종은 임금 및 직장의 보전이 가능했으나, 그렇지 못한 업종이나 소기업 근로자들은 많은 실직이 발생함
 - 옥스퍼드·취리히대학 연구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봉 2만\$ 미만 근로자의 실직률은 16%, 연봉 5만\$ 이상의 실직률은 7%에 불과했는데, 이 차이는 재택 근무의 유무에 따라 결정
 - 우리나라도 재택근무 가능성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 및 소득보존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청년 고용률 하락세 뚜렷) 청년 고용률은 2020년 4월 40.9%로 전년동기에 비해 -2.0%p, 청년 실업률은 9.3%로 전년동기에 비해 -2.2%p를 나타냈는데, 이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신규 입직자의 구직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존 고용유지 근로자와 신규입사 청년 근로자 간의 격차 심화 가능성 존재

감염병 위험 노출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및 고용위험	잠재요인 : 디지털 격차
감염병 취약계층	소득 취약계층	디지털 소외계층
감염위험 노출 및 수입 감소 ⇒ 직종별, 고연령층 등	실업위험, 신규취업제한 ⇒ 영세자영업자, 시간제근로자, 여성, 편부모가구 등	정보취득 · 학습기회 · 적응 한계 ⇒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등

[그림 1-8]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악화 요인

자료 :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이유

- 노동시장 특성상 실업률 급상승과 고용률 하락은 경기가 회복되어도 당분간 지속 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을 대체하려는 기술진보가 발생하여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많은 수의 기업파산은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 실물위기에서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이미 금융위기로 전이되었으며, 개별국가의 저금리·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달러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어 다시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됨
- GVC 교역은 세계 GDP의 23%, 세계 교역량의 74%에 이를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 세계경제 전체의 회복 없이는 특정 국가의 성장도 어려운 상황임

| 표 | -8 | 코로나19 사태의 강도에 따른 시나리오

구분	조기종식	일시적 경기둔화	경기침체	극심한 경기침체
양상	과거 사스·메르스 추세와 유사한 전개	1~2분기 성장을 타격, 3분기 이후 회복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실물과 금융의 복합적 위기)
특징	이후 빠른 경제회복으로 영향은 1분기에 제한	중국의 회복세, 특정 산업 영역에 피해 집중	국가별 폐쇄조치가 길어짐 세계적 영향력 확대	코로나 재유행으로 1형의 장기간 경제침체

주 : 전문가들은 현 단계를 일시적 경기둔화와 경기침체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
자료 : 삼정 KPMG경제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 방향, 2020.3.

3. 충북의 경제 전망

1 전망

경제 전망(GRDP)

- 회귀분석 결과 한국경제성장률 1% 변동 시 충북 실질 GRDP 성장률 1.24% 변동되어, 충북은 한국경제 변동의 민감성이 비교적 높은 편임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20년 상반기에 종식되고 IMF의 예측대로 한국경제가 2020년 -1.2%, 2021년 3.4%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충북의 '20년 실질 GRDP 성장률은 2.0%(과거 전망치 대비 4.2%p 감소), '21년은 7.1%로 전망됨 (과거 전망치보다 0.9%p 증가 전망)

고용전망(실업률, 고용률)

- 오쿤의 법칙(Okun's Law)으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1% 경제성장률은 0.18%의 실업률 변화를 유발하였음
- 이를 근거로 2020년 충북 실업률은 3.6%, 고용률은 68.0%로 전망되었음

■ 수출 전망(수출액)

- 회귀분석결과 세계 경제성장률 1% 변동 시 충북 수출은 약 1.65%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토대로 예측하면 '20년 충북 수출은 - 10.4% 감소(-25.4억\$), '21년 5.9% 증가(14.4억\$)할 것으로 전망됨

2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한 충북지역 피해 추정

- 당초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정부분 조기 수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는 각종 제한 조치에 의한 충격으로 소상공인들 주요 업종인 요식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국경 폐쇄에 의한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로 제조업에도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
 - 도내 대면 서비스업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722.9억원, 총생산액은 872억원, 부가가치는 488억원 손실, 취업자 수는 1,829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¹¹⁾
- 코로나19에 의한 도내 피해는 11,116곳이 총 4,17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 증가세가 예상됨¹²⁾
 - 실제 1분기 메르스와 유사한 충격이 지속될 경우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장기화되는 양상

-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은 해외 보다는 국내 충격이 작고 서비스업종 보다는 제조업종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 내수업종, 제조업종 중심의 충북 경제의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는 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중소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규모 제조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제반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온 점은 우려스러운 상황임
 -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충북경제 특성상 이번 사태가 주는 충격이 적지 않으며,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모든 분야에 걸쳐 시차를 두고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1) 충북연구원, 코로나19가 충북 경제에 미치는 손실·효과 분석보고서, 2020.2.

12) 충청북도 보도자료, 코로나19 충북 피해상황, 2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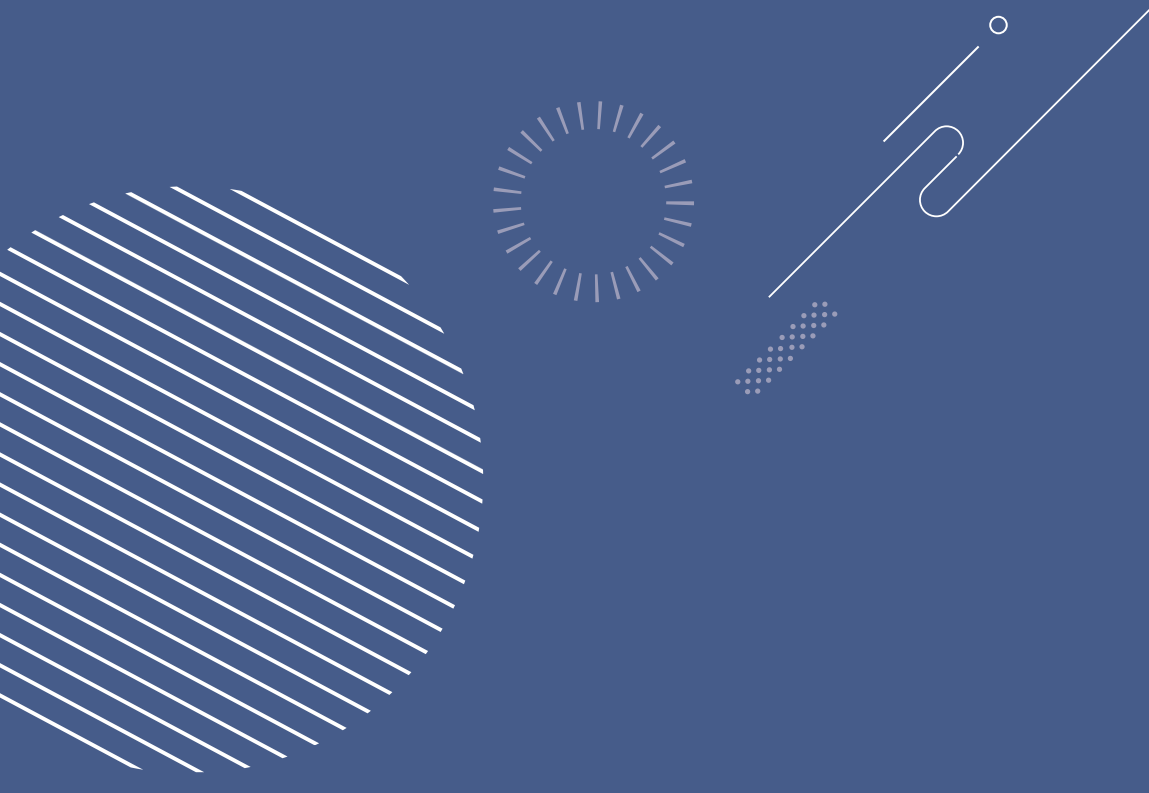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충북 경제 위기...피해 규모 4천억원 넘어, 2020.4.4.

전망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 전망

제1절 | 넥스트 노멀 시대의 도래

제2절 | 정부 정책동향과 시사점





코로나19는 비단 감염병 위기일 뿐 아니라,
임박한 세계 경제 질서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재편,
즉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Mckinsey & Company, ‘Beyond coronavirus:
The path to the next normal’, 2020.3., 일부 발췌

제II장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 전망

제1절 넥스트 노멀 시대의 도래

1.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일상

1 의미 있는 일상의 변화 순간들¹³⁾

■ 합동결혼식과 마스크 키스(2020.2.23.)

- 2020년 2월 23일 필리핀 바콜로드시 정부 주최로 220쌍의 예비부부가 합동 결혼식을 올리며, 마스크를 쓴 채 키스를 하는 장면이 해외토픽으로 소개됨
 - 매해 진행되는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 가장 대표적인 신체접촉인(그것도 신혼부부의) 키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쓴 채 이루어지는 모습은, 특정 계층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언택트'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상징하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음



[그림 II-1] 합동결혼식과 마스크 키스

자료 : SBS 뉴스, 마스크 쓴 채 '입맞춤'...필리핀의 대규모 합동결혼식, 2020.2.24.

13)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우리의 일상들 중, 의미 있다 판단되는 순간들을 연구진의 시각에서 기술

■ 마스크 대란 끝, '마스크 5부제' 시행(2020.3.9.)

- 2020년 3월 9일 일요일에 하루 정해진 날 구매수량 2개로 제한된 마스크를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됨
 - 코로나19 초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마스크 수요에 따른 사재기 현상과 공급자의 가격 폭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고 그럽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없었던 '마스크 대란' 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되며 다소 혼란이 진정된 모습을 보임
-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지며 발생한 혼란 속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효율적 분배방안 찾기 과정'은 분명 의미하는 지점이 있음



[그림 II-2] 마스크 대란 끝, '마스크 5부제' 시행

자료 : 연합뉴스

■ 강도다리 활어회 '드라이브 스루' 인기폭발(2020.3.14.)

- 2020년 3월 14, 15일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일원에서 운영된 '강도다리 활어회 드라이브 스루'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준비된 회 도시락 800개가 조기 완판된 소식이 전해짐
 -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나온 정책
-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혹은, 플랫폼이 아닌 지역에서 자구책으로 나온 해당 정책은 향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평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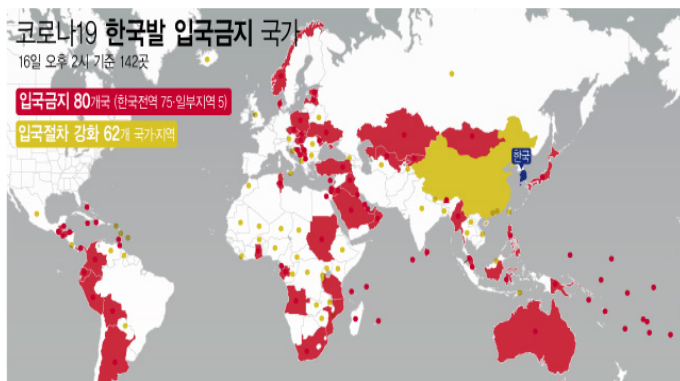


[그림 11-3] 강도다리 활어회 드라이브스루 인기폭발

자료 : 경북일보, 포항시 호미곶에 드라이브 스루 강도다리 활어회 판매장 등장, 2020.3.14.

■ 한국발 입국 제한, 막혀버린 국경(2020.3.16.)

- 2020년 3월 16일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전 세계 142곳으로 증가하였다는 기사가 발표됨
 -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한국의 급격한 확산세는 전 세계적인 관심
- 중국,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확산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시점에 발표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자유롭던 해외여행이 앞으로는 쉽지 않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케 하는 장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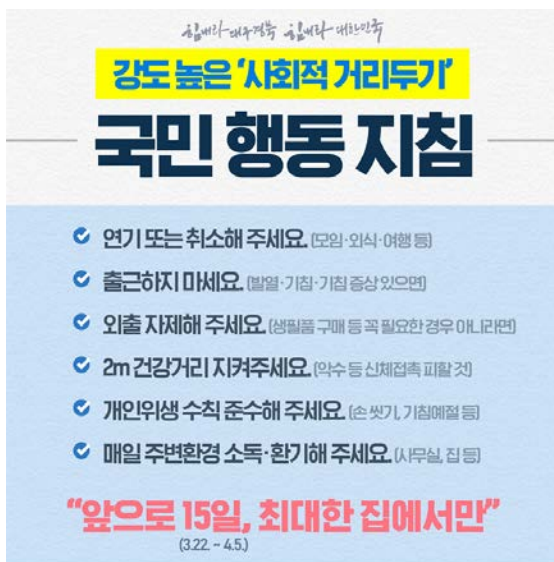


[그림 11-4] 한국발 입국제한, 막혀버린 국경

자료 : 동아일보, 한국발 입국제한 142곳…페루·가나 등 입국금지 잇따라, 2020.3.16.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2020.3.22.)

- 2020년 3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 캠페인’을 발표함
 -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외신들로부터 호평
- 최초 2주에서 2주간 더 연장되어 45일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대면 접촉 시 거리두기 뿐 아니라 그러한 기회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도임
-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과거에 없던 거리두기를 경험하고 익숙해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기간 많은 일상 속 풍경의 변화가 일어남



[그림 II-5]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자료 : 대한민국 정부

■ 4차례 개학 연기 끝 온라인 개학(2020.4.9.)

- 2020년 4월 9일 중3, 고3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원격수업이 시작됨
 - 원래 3월 2일인 학교 개학은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로 4차례 개학연기 끝에 개학
 - 4월 16일 중·고 1~2학년과 초 4~6학년이 온라인 개학, 4월 20일에 초 1~3학년이 마지막으로 원격수업에 합류(연합뉴스, 2020.4.26.)

- 초·중·고교부터 대학·대학원까지 모두 합치면 약 840만 명의 학생이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반강제적인 '원격수업 시대'를 맞이하게 됨



[그림 11-6] 4차례 개학 연기 끝 온라인 개학

자료 : 연합뉴스, 사상 초유 '840만명 원격수업' 미래교육 초석될까, 2020.4.26.

■ 방역관리 속에 진행된 총선(2020.4.15.)

- 2020년 4월 15일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됨
 - 2일간의 사전투표와 더불어 총선 당일 전국 14,430곳의 투표소에서 진행 (투표율 65.2%)
-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진행된 선거였지만 큰 문제없이 완료될 수 있었으며, 자가격리 중인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된 해당 선거는 전 세계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과,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의미 있는 성과였음



[그림 11-7] 방역관리 속에 진행된 총선

자료 : 중앙일보, 한국 또 증명 외신 찬사 쏟아진 한 방역 총선, 2020.4.18.

■ 세계가 지켜본 프로야구 무관중 개막(2020.5.5.)

- 2020년 5월 5일 '2020년 프로야구'가 개막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됨
 - 프로야구 무관중 첫날 TV중계에 야구팬 216만명 몰려...(조선비즈, 2020.5.6.)
- 대한민국 프로야구는 글로벌 스포츠 채널인 ESPN과의 중계권협상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도 생중계 되는 등 많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킴
- 그간 K-방역의 성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전달되던 순간임¹⁴⁾



[그림 II-8] 프로야구 무관중 개막

자료 : 조선비즈, 프로야구 무관중 첫날 TV중계에 야구팬 216만명 몰려, 2020.5.6.

■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2020.5.12.)

- 2020년 5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충북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중(예정)이라는 발표를 함
 - 5월초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 인천광역시의 경우 후속조치로 개인 인증(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한 '큐알(QR) 코드 방문자 방역관리 시스템' 도입·시범운영 발표(한겨레, 2020.5.18.)
- 코로나19초기부터 우려된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시민들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의식 성숙과 더불어 정부가 개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사례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14) 물론 해당 연휴기간 발생한 이태원클럽 사건으로 이후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림 11-9]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자료 : 연합뉴스, 전국 12개 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2020.5.12.

■ 민간기업 온라인 공채 시험(2020.5.30.)

- 2020년 5월 30, 31일 이틀간 삼성이 대기업 처음으로 온라인 그룹 공채 시험을 진행함
 - 수만 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되었으며, 서버 오류나 부정행위 없이 마무리
- 대규모 자필고사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응시자 편의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크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필기시험 뿐 아니라 비대면 면접 등 다양하게 확대되는 추세임
-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원격회의, 재택근무를 넘어서서 공개채용의 영역까지 확대된 언택트 문화의 진화와 확산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장면임



[그림 11-10] 사상 첫 온라인 공채 시험

자료 : 연합뉴스, 사상 첫 온라인 삼성고시 무사히 끝나...새 트렌드 뭘까, 2020.5.31.

2 포스트 코로나 달라질 일상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

- 미국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에서 "인류사는 이제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 즉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라 말할
-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 또한 "현재 일어나는 변화들, 비상 대책들이 우리 삶에 고착화되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말할

언론이 예측한 일상의 변화들

- 매일경제(2020.5.5.)에서는 코로나가 앞당긴 우리 일상의 변화를 2차 터지혁명과 결부하여 '포스트 코로나... 30가지 생존법칙'이라는 기획 기사를 발표함
-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의 재앙은 역설적으로 혁신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바뀌어질 일상들을 30가지로 정리하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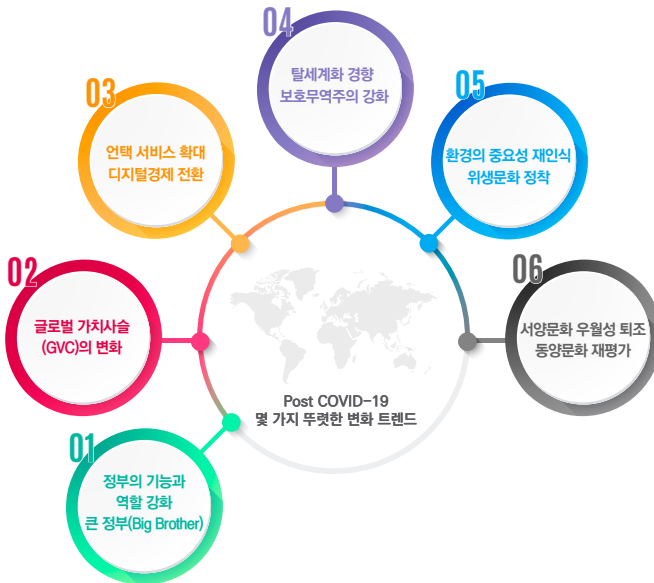
물치면 죽는다 출어저야 산다  글로벌 공급망의 분산, 지역화 가속	언택트 소비 무한 확장  겪어보니 편했다, 예전으로 못 돌아가	원격의료의 도도한 물결  국민 모두 편의성 실감 긴장하는 의료계
재택근무의 전화  실제 해보니 정단점 보며, '유연 재택근무'로	굿바이, JIT (저스트 인 타임)  공급망 차질로 필수재고량 증가	U턴 기업, 돌값 더 오른다  핵심업종과 부품은 국내서 생산, 리쇼어링 경쟁
서울수도권-지방대학 차별 축소  대학들 원격수업 경쟁 입지 의미 없어져	사교육의 변신... 1타 감사만 남는다  대면 과외 줄고 전국 1위 수준 온라인 강의 독점	비대면 교육에 시름 얹어라  비대면 맞춤 강의 보편화, 교육개혁 신호탄
대전(대처용 전세) 수요의 종말  온라인 강의 확산으로 학군 프리미엄 감소	다중시설은 지고, 격리공간은 뜨고  개인·가족 위주 공간에 대한 수요 급증	가성비보다 가압비가 먼저  '가격 대비 성능'보다 '가격 대비 안전'



[그림 11-11] 포스트 코로나 30가지 생존법칙

자료 : 매일경제, 포스트 코로나 20가지 생존법칙, 2020.5.5.

2. 몇 가지 뚜렷한 변화 트렌드



[그림 11-12] 몇 가지 뚜렷한 변화 트렌드

자료 : 연구진 작성

1 정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 큰 정부(Big Brother)

- 감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요소는 민간부문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확산
 - 강력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 경제회생을 책임질 역할 기대 : 초기에는 방역에 집중, 점차 경제 회생에 집중하는 경향
- 국도 주도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부상'하고 있음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짧은 주기로 출현되고 감염병의 일상화 전망으로 말미암아 국가주도로 보건·안전 분야에 집중할 전망
 - 세계 각국은 백신, 치료약 개발, 면역산업 등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전망

- 정부가 필요한 부문에 직접 자금을 공여하는 ‘재정정책의 강화 추세’가 점차 심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도 유동성 경색이 지속되는 점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 이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근거로, 정부가 필요한 부문에 직접 자금을 공여하는 수단이 강화될 전망(Paul Krugman)

2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 글로벌 가치사슬(Gloval Value Chain)¹⁵⁾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의미함
 -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분업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유리한 지역에 생산 네트워크 설정
 - 과거에는 최종재 중심의 GVC가 주류였으나, 최근에 들어 중간재 중심의 GVC 구조가 정착되는 경향
- 한중일 3국은 매우 높은 GVC를 형성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 와해를 경험하면서 GVC 단계를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에의 중간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화 중
- 이에 따라 제조업 가치사슬의 길이(해당 산업의 생산이 완료되는데 필요한 단계)는 코로나19 이후 단축될 전망이다
 - 제조업 가치사슬의 길이 : 중국 3.37, 한국 3.01, 일본 2.65, 미국 2.24, 세계 평균 2.82
- 글로벌 생산 패턴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전망됨
 - 국제 분업구조의 개편 : 글로벌 생산망 단계 축소 경향
 - 선진국 중심 U-turn 기업 증가 : Smart Factory와 Smart Business로 대응
 -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 활성화

15)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글로벌 공급망(GSC)은 모두 생산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GSC는 네트워크 간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GVC는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연결을 의미

- 해외 공급망을 가지는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와 관세 등 무역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데, 하나의 공급망이 무너지면 생산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며 다음의 3단계 변화가 예상됨
 -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 :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생산기지 이동(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섬유, 단순 조립가공산업 등)
 - R&D 접근성이 중요하고 고숙련 노동이 필요한 산업 : 리쇼어링(반도체, IT관련 제조업)
 - 소비지와 접근성이 중요한 산업 : 자동차 등 관세·규제 대상 품목으로 현지 생산 (미국, 중국 등)

오링(O-ring) 이론

- ◆ Michael Kremer :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하버드 경제학교수
- ◆ 1986년 우주왕복선 ‘체린저’호의 발사도중 폭발한 사건 사례 : 발사 당일 추운 날씨로 고무 바킹인 O-ring이 굳어졌고 이로 인해 가스가 새어 폭발을 일으켰음
- ◆ 첨단 기술일수록 작은 공정 하나가 치명적 실패를 초래한다는 이론

| 표 II-1 | 한 나라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행) 다른 나라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열)
(단위 : %)

국가	USA	CAN	MEX	DEU	GBR	FRA	ITA	ESP	TUR	NLD	CHN	JPN	IND	KOR
USA		39	24	5	11	10	5	5	7	11	6	8	4	8
CAN	4		1											
MEX	5	5												
DEU	5	4	3		19	20	14	15	15	20	4	2	2	6
GBR	1	2		3		4	3	4	4	4	1		1	1
FRA	1	1		6	5		5	10	6	5	1			2
ITA	1	1		2	3	4		4	3	2				
ESP				2	5	7	4		4	3				
TUR				1	2	2	2	2		1				
NLD					1	1								
CHN	7	7	7	3	4	4	4	4	5	5		6	9	12
JPN	6	4	4	2	3	3	2	2	2	3	3		2	8
IND			1						1					
KOR	3	3	2		3	1	3	1	3	1	2	1	3	

자료 : 리처드 볼드워 외, 세계교역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경제전쟁』, 매경, 2020.4. P.139 재인용

3 언택(Un-tact) 서비스 확대와 4차산업혁명 기술의 본격 적용을 통한 디지털경제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의 극복 대안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회경제활동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됨
-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 : DNA기술, IoT, AR·VR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안면 인식기술 등
 - 인공지능의 산업분야 적용으로 노동대체
 - 자율자동차의 방역 및 의료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
- 언택트(Un-tact) 사회 : VR, AR기술의 상용화
 - 화상회의 : 화상회의가 보편화된다면 기존의 MICE 산업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
 - 재택근무의 확대 : 2020.5.2.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62.3%가 재택근무(대기업 73.2%, 중소기업 57.6%), 만족도는 67.7%로 향후 정착될 가능성 농후
- 그러나 정착 여부는 기업성과(생산성)와 통제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지원하는가가 관건일 것이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도 있음
 - 대면과 현장업무가 불가피한 업종 : 생산직 및 행정서비스, 영업직, 농업노동 등
- 화상회의 및 재택근무가 보편화 된다면, 기업들은 초대형 빌딩을 소유하면서 높은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컴퓨터 작업과 동영상 기술을 이용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고 도심 외 지역으로 사무실 이전 가능성이 존재함
 - 원격의료, 원격 교육(에듀 테크)
 - 무인점포, 배달서비스, 플랫폼 활용 온라인 쇼핑의 상용화,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구매 등
-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보편화 될 전망이지만,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며,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될 것임

4 탈세계화(De-Globalization) 경향 및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 락다운(Lockdown)은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동안 급속히 진행되었던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음 → 자급자족, 혐오감정, 폐쇄 등

- 특히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미중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세계 경제 위축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해외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한국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탈세계화의 과정

- ◆ 대공황을 겪으면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인식 :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에서 상호협력이 없는 경우 차선의 결과만을 얻는다는 관점
- ◆ 이후 GATT, WTO의 설립 등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한 결과 세계경제는 높은 성장 실현
- ◆ 그 과정에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대규모의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가 발생 : 저임금을 기반으로 세계의 생산공장 위치 차지, 그러나 이후 대규모 자본축적을 통해 점차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게 되고 점차 세계경제의 협력관계 붕괴
- ◆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나타나면서 탈세계화 가속화 우려
- ◆ 결과적으로 세계경제가 자멸하는 길로 향하고 있음

5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위생문화 정착

- 코로나19는 ‘환경보존의 중요성 재인식’하는 계기가 됨
 -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의 무분별한 훼손과 파괴가 감염병 바이러스 숙주들이 세상으로 침투 증가를 초래
 - 장기적으로 감염병의 근본적 예방은 환경 보존이라는 인식이 확산
 - 농촌지역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위생문화 정착’의 동인이 됨
 - 비위생적 환경 및 야생동물의 섭취 등이 바이러스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로 인해, 청결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6 서양문화의 우월성 퇴조와 동양문화에 대한 재평가

- 동아시아국가 : 공격적 진단, 추적, 격리, 여행금지
- 대부분의 유럽국가 : 한동안 사안을 무시하다가 이후 지역봉쇄와 여행금지 조치
- 미국 : 중요한 초기 몇 주간 완벽한 무대응, 정부의 무관심과 민간에서의 대응

3. 분야별 사회 변화 전망

1 산업경제 분야

■ 주요 산업 전망

- 중국이 4월 말경으로 회복단계에 들어서고 한국도 안정적 회복단계에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함
 - 내수 및 중국 관련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될 가능성 : 제조업, 소비재 유통업
 - 회복 및 안정적 수요 분야 : 음식료품, 제약 및 의약품, 무점포 온라인 유통, 통신서비스업
 - 침체 및 둔화업종 : 섬유 및 의류업, 정유, 종합대형소매업, 운송(해상, 항공), 철강,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 고용상황 및 구조의 변화

- 소비는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팬데믹의 지속에 따라 수출 및 생산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단기간 V자형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우며 장기적 고용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팬데믹의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2차 노동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1차 노동시장까지 위협하여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한계 서비스업, 제조업 종사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실업)문제의 전면적 부상 → 고용안전망 및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2 사회문화 분야

■ 고용안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가능성

- 2020년 3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57천 명(총 취업자 26,609천 명의 51.7%, 총 임금근로자 20,190천 명 중 68.1%)이며, 주로 정규직의 가입률이 높고 비정규직 가입률은 45%에 불과함
- 또한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예술가 포함) 근로자들은 피고용자로 인정되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피고용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실정임
 -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임의가입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

-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적절한 보상(고용지원,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약 48.3%에 이르는 미가입자는 정부의 직접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예상되는 문제) 고용보험 기금의 확충, 소득 노출을 꺼리는 종사자들의 처리 문제, 현행 고용보험 요율 1.6%에서 추가 인상하는 문제 등

■ 교육 부문

- 화상 수업 및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 에듀테크
- 교육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갈등 심화 및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됨
 - 디지털화되면서 지식전달 방식의 교육은 사라지고 창의적 교육방식 선호
 - 대학의 새로운 경영방식 채택 가능성 : 산업 현장에 적극 참여

■ 소비 부문

- 온라인 소비의 급속한 증가와 중고령층 온라인 소비 적극 참여 : 언택트 기술의 빠른 적용, 올드족(Young Old)의 부상으로 소비 트렌드 주도 가능성
- 다중 밀집소비(찜질방, 영화관, 집단스포츠 등)의 쇠퇴 가능성 : OTT, 넷플릭스 등 부상
- 건강 및 면역증강 식품·제약 등의 수요 증가, 친환경 위생식품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됨

표 II-2 | 온라인 소비 변화

(단위 : %)

구분	'20.2.	'20.3.
소매판매	-0.4	-7.0
온라인 판매	2.4	11.8 (음식료품 59.4, 음식서비스 75.8, 생활용품 46.9)

자료 : KOSIS

■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

- 감염병을 계기로 압축도시 지향과 저밀형 공간으로의 변화가 팽팽하게 맞설 것임
- 구매력을 가진 장년층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증가가 예상됨(5도 2촌)

■ 문화의 변화

-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인해 대규모 집회문화의 감소 : 종교 위축, 집단관광 감소 등
- 워라벨 문화 정착 : 회식, 대면 회의 등이 감소하고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 증가

| 표 II-3 | 산업경제 분야 변화전망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스마트화 가속(스마트팩토리, 키오스크) ◆ 언택트소비 및 홈이코노미의 확산 ◆ 신산업 분야 수요 증가(ICT, 의료 등) ◆ 리쇼어링 기업 증가 ◆ 플랫폼 노동 증가 ◆ 신남방 정책의 조기 추진	◆ 저속권·단기일자리 감소 ◆ 대면·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매출 감소 (도소매, 음식, 교육, 숙박, 예술 등) ◆ 관광수요 감소 ◆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 사회안전망 문제 부각 ◆ 보호무역주의 확산

아주경제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이

온라인쇼핑 거래액 상·하위 주요 상품군 전년 동기 대비

구분	10	11	12	1	2*	3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11.87	12.85	12.68	12.30	11.95	12.58 (28.2%)
농수산품	9.76	8.43	8.34	8.22	8.10	8.43 (7.3%)
음식서비스						-4.8%
공식로물						-7.0%
생활용품						-12.1%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73.4%
여행 및 교통서비스						-88.9%
문화 및 레저서비스						-88.9%

[주] 전례 쇼백엔터테인먼트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차지하는 비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의 비중

월별 극장 관객수

관객(명)

상영편수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관객(명)	169	315	373	430	455	453	423	429	419	408	373	542	400	350	339

자료 : 아주경제, '식품 + 여행' ↓ '코로나19' 가져온 언택트 소비추이, 2020.5.7.(통계청, 연합뉴스)

자료 : BBC코리아, 코로나19 : 그래프로 보는 이전과 달라진 한국, 2020.5.11.

| 표 II-4 | 사회문화 분야 변화전망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 확대 ◆ 공공의료시스템 확대 ◆ 온라인교육·재택근무 확대 ◆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 ◆ 사회적 자본 강화 ◆ 디지털 문해교육 확대	◆ 인포데믹스의 확산 ◆ 소득계층별 격차 확대 ◆ 자발적 고립 증가 ◆ 대중교통 이용 기피 ◆ 사회활동 위축 ◆ 디지털 정보 격차 심화

코로나19에 맞서는 스마트한 이동수단

날씨 물리쳐 날리는 대중교통 대신 전동 킥보드, "카드형" 사용자 전환 대미 79%, "평형" 76% 증가

주요 전동 킥보드 앱 사용자 현황

전도(모터사이클 등 사용자) 기준

전도(모터사이클 등 사용자) 기준

● 킥보드 ● Line ● 평형 ● 고고형 ● 지평지대

코로나19 발발 (2020.2)

자료 : 뉴시스, 전국 킥보드 공유시장, 6배 상승, 코로나19 사태로 이용 급증, 2020.5.26.

자료 : KBS, [카드실정 전수분석] 코로나19 얼마나 강하냐? 데이터로 본 소비 충격, 2020.5.30.

제2절 정부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코로나19 정부의 대응

1 조직적 대응 동향

■ 위기 경보 수준 대응 경과

-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0일 국내로 전파된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대책반'을 가동하기 시작함
-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한지 1주일만인 1월 27일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다시금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조정함
- 이후 1달여 만인 2월 23일 확진자가 603명으로 늘어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또다시 경계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의 국내전파와 세계적인 확산으로 마침내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에 뒤늦게 팬데믹(Pandemic)을 선언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코로나19 격상 시기
	국내 유입	제한적 전파	1월 20일 국내 최초 발생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지역사회 전파	1월 27일 확진자 4명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전국적 확산	2월 23일 603명

[그림 II-13]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과 경과 추이

자료 : 연합뉴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2020.5.5.

■ 범정부 조직대응 체계 : '방역관리 중앙대책본부'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데, 하나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영향으로 초래되는 산업경제 악영향 및 국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과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이 바로 그것임

- 먼저 방역 대응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되는 체제로 운영되다가,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이루어지게 됨
 - 이로 인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역대 최초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지원 조정업무를 총괄하게 됨
- 경제 대응은 처음에는 각 부처 단위별로 경제활력 대책을 2월까지 추진해 오다 3월에 접어들어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로 개최되면서 각 부문별 대책 방안들이 발표되기 시작함
- 그러다 지난 4월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됨
 - 이후 4월 22일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어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 운영방안이 논의되었고, 4월 29일에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결국에 정부 차원의 조직적 정책 대응은 크게 방역 대책과 그 여파로 인한 악영향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경제 대책을 위한 조직가동이 이루어짐
 - 이후 사태가 확산되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3월에는 비상경제회의의 체제로 전환되고, 4월부터 경제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체제 운영



[그림 II-14] 비상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체계

자료: 대한민국 정부

-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조직대응 체계는 ‘방역관리 중앙대책본부’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형태의 두 트랙(Two Track) 조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음

지자체별 대응 조직

- 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고 차단을 위한 지역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악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조직을 가동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음

표 II-5 | 시도별 코로나 대응조직

구분	조직가동
서울	◆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민생경제대책반 구성·운영 ◆ 피해신고센터 : 서울 기업지원센터
부산	◆ 민·관 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피해신고센터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
대구	◆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대책본부 구성·운영 ◆ 피해신고센터 : 코로나19 피해기업신고센터
인천	◆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반 및 경제대책 상황실 구성·운영 ◆ 피해신고센터 : 경제대책상황실
광주	◆ 코로나19 경제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피해신고센터 : 코로나19 지원제도 종합안내 원스톱센터
대전	◆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피해접수창구 및 소상공인 지원협의체 운영) ◆ 피해신고센터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피해접수창구
울산	◆ 자동차산업 대응지원센터 운영 ◆ 피해신고센터 : 지역경제산업대응센터, 자동차업종 대응지원센터
세종	◆ 피해신고센터 :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경기	◆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경제 TF 설치·운영 ◆ 피해신고센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소상공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중소기업)
강원	◆ 민·관 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 구성·운영 ◆ 피해신고센터 : 소상공인 피해지원센터,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
충북	◆ 경제상황점검 및 대응 TF 구성·운영 ◆ 피해신고센터 : 기업피해신고센터
충남	◆ 지역경제 대응 TF팀 구성·운영 ◆ 피해신고센터 :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애로접수창구
전북	◆ 전북 경제상황대응 TF 구성·운영 ◆ 피해신고센터 : 기업·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전남	◆ 경제상황 대응 TF 구성·운영 ◆ 피해신고센터 :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통합지원센터
경북	◆ 코로나19 대응 경북 경제 TF단 구성·운영 ◆ 피해신고센터 : 기업 피해신고센터
경남	◆ 경상남도 코로나19 경제상황대응반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 ◆ 피해신고센터 : 경상남도 기업·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제주	◆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출범(2.13.) ◆ 피해신고센터 : 기업애로 신고센터, 수출기업애로 신고센터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2020.2.19., 재정치

2 정책적 대응 동향

■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로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은 확산 초기 2월에는 상시적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대응하다 세계적 확산이 진행되자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로 전환하였고,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 운영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과 정책은 통합적으로 정부합동 이런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각 주무 부처별로 시행해 오고 있음

■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요 논의 내용 : 코로나19 확산 초기

-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던 시기에 개최되었고, 주요 논의 안건은 △'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 △경제활력 증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 조치 계획 등임 5개 안건임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오는 2월 개최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부터는 코로나 19 대응 대책으로 정책논의가 집중됨

표 II-6 |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정책논의 내용

구분	일시	주요논의	회의주재
제1차	'20.1.8.	◆ '20년 재정 조기집행 ◆ 경제활력 증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계획	부총리
제2차	'20.2.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부총리
제3차	'20.2.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대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부총리
제4차	'20.2.12.	◆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	부총리
제5차	'20.2.19.	◆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 방안	부총리

자료 : 각 회차별 정부합동 보도자료, 2020, 재정리

■ 위기관리대책회의 : 위기 업종 및 고용유지 대책 마련

- 주 1회 실시하던 위기관리대책회의는 평소 운영되던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성격을 전환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비상경제회의 산하기구의 성격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로 전환됨

표 II-7 |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정책논의 내용

구분	일시	주요논의	회의주재
제1차	'20.3.18.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부총리
제2차	'20.3.25.	◆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수출입 해외진출기업 긴급금융지원)	부총리
제3차	'20.4.1.	◆ 코로나 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 (관광, 영화, 통신·방송)	부총리
제4차	'20.4.9.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책방향	부총리
제5차	'20.4.23.	◆ 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 ◆ 주요 주력산업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Ⅰ)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부총리

자료 : 각 회차별 정부합동 보도자료, 2020, 재정리

■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이후 가동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는 등 국민경제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함
-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체제는 제1차부터 제5차까지 개최되었으며, 4월 말부터는 대통령 지시로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져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표 II-8 | 비상경제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정책논의 내용

구분	일시	주요논의	회의주재
부처합동	'20.3.5.	◆ 마스크수급 안정화 대책(국무회의 보고)	기재부
제1차	'20.3.19.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대통령
제2차	'20.3.24.	◆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대통령
제3차	'20.3.30.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대통령
제4차	'20.4.8.	◆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재고방안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	대통령
제5차	'20.4.22.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대통령
제5차	'20.6.1.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제3차 추가결정예산(안)	대통령

자료 : 각 회차별 정부합동 보도자료, 2020, 재정리



[그림 II-15]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2020.3.19.)

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가동 이후

-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되었다가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자 그 산하의 기구 성격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음

| 표 II-9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정책논의 내용

구분	일시	주요논의	회의주재
제1차 회의	'20.4.29.	◆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Ⅰ) ◆ 한국판 뉴딜 추진관련 방향 등	부총리
제2차 회의	'20.5.7.	◆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 ◆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부총리
제3차 회의	'20.5.14.	◆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Ⅰ) ◆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부총리
제4차 회의	'20.5.20.	◆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Ⅱ)) ◆ 관광 내수시장 조기활성화 방안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부총리
제5차 회의	'20.5.28.	◆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자동차 부품, 중형 조선, 섬유·의류, 전시, 스포츠 산업) 지원방안 ◆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안)	부총리

자료 : 각 회차별 정부합동 보도자료, 2020, 재정리

3 예산 운영 동향

두 차례 추경편성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

- 이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은 처음에는 범국가적 방역 관리를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됨
 - 이후 급격한 내수 위축과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비상경제 시스템 체제로 전환되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 추진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의 파급영향 최소화화 and 조기 극복을 통해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11.7조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편성하였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2조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함
 - 제1회 추경(11.7조원) : 소상공인에 긴급대응 목적 + 행정부 기조치(20.5조원)
 - 제2회 추경(12.2조원) :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제3회 추경을 통해 구체화될 포스트 코로나 정책

- 그리고 현재는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의 감소와 위축된 경기침체 활력을 도모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작성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고, 국회에도 제출한 상황임
 - 제3회 추경(35.3조원) : 포스트 코로나 대책 지원(일자리 중심 예상) 중심으로 국무회의('20.6.3)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음
 - 결국 실질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실행예산의 반영은 제3회 추경예산의 국회 의결 이후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3차 추경까지 약 270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임
-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종합해 보면, △1단계로 비상경제체제 가동 이전에는 방역에 집중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다가 △2단계로는 비상경제회의 가동 이후부터는 경제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되고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모든 영역과 부처들이 지금의 상황을 위기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인식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정책 방안들을 강구 중

2.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 방향

1 제1차 정책대응 방향과 주요 내용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차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1~3단계에 걸쳐 여러 대책을 발표했으며, 약 32조원 규모의 예산 지원 대책을 강구함
- 정책대응 방향은 △선제방역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로 경제 악영향 최소화, △피해업종·기업의 당면 애로해소 정책지원 추진에 집중

1~3단계 32조원 총력지원 정책 패키지

01

(1단계 지원)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대책(2.5~2.20 발표)

※ 중기·소상공인, 자동차부품, 관광·외식, 항공·해운, 지역경제, 수출기업 등 8개 대책 +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 등

4조원

- ◆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 ◆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0.3조원), 공항사유료 감면(100억원) 등
- ◆ 매출채권인수 확대(0.2조원), 중소 관광업체 무담보 우대금융(500억원) 등
- ◆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원)

02

(2단계 지원) 행정부·유관기관 등 독자적 패키지 지원(2.28 발표)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초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16조원

- ① 행정부 스스로 즉시 시행 가능한 재정(2.8조원)·세제(1.7조원)·금융(2.5조원) 지원
 - ◆ 국민안전·방역체계 가동(예비비 신속집행+추가지원) 및 마스크 시장안정
 - ◆ (민생경제 안정 I)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50% 세액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1년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1.4조원 확대, 지역산보 특별보증 1조원 확대공급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0.6조원 확대
 -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2조원 확대, 중소기업 P-CBO 발행 0.5조원 확대 등
 - ◆ (민생경제 안정 II)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6조원까지 확대, 할인을 5~10% 한시 1상향
 -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 상향(월 70~100만원), 발행규모 2.5~3.0조원까지 확대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규도입,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
 - ◆ (경제활력 보강 I) 내수회복 지원(※ 10내수회복 방지 및 해 분위기 반전)
 - 5대 소비쿠폰, 송유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손금인입 한도 상향,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배 수준 한시 확대 등
 - ◆ (경제활력 보강 II)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 노력 강화
 - 3대분야(기업·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목표 신속 추진 등
- ② 공공·금융기관 등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약 9조원) *한은 5.0, 공공기관 0.5, 금융 3.7
 - ◆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은) ◆ 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원)
 - ◆ 자산보존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원)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원)

03

(3단계 지원) 추경 편성(3.17, 국회통과)

※ 세출확대(10.9조원) + 세입경정(0.8조원)

11.7조원

- ①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1조원)
 - ◆ 국가자정 병상에 음압병실 확충(300병상), 구급차 특별지원(음압 146대, 일반 13대)
 - ◆ 방역조치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4,000억원)
 - ◆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제공(836억원)
 - ◆ 마스크 생산·공급지원(844억원)
- ②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4.1조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 ◆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영세사업장에 임금보조(1인당 4~7만원, 4개월)
 - ◆ 코로나 14 확진 환자 경우 등으로 휴·폐업한 영세에 대한 재기비용 지원(19.8만개)
- ③ 코로나 19 초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3.5조원)
 - ◆ 기초생계수급자+차상위계층(230만명) 대상 지역사랑 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소비쿠폰)
 - ◆ 아동수당 대상자(263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인당 10만원) 등 4개월분 지급(특별돌봄 쿠폰)
 - ◆ 저소득층(전보로 하위 20%) 건강보험료 3개월간 50% 감면
- ④ 총체적 지역경제 회복 지원(1.2조원)
 - ◆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17개 지역, 2,000억원)
 -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은 방역인프라 보강, 자금지원 등 약 1.7조원 별도 배정

[그림 11-16] 제1차 코로나 대응정책 방향과 주요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3.18.

- 한편, 각 업종·분야별 대응 정책과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 · 소상공인		※ 2.5, 2.7, 2.12 발표
재정지원 ◆ 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영 자금 국비 지원 ◆ 中 진출 중소기업에 구호물자 지원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스크 · 손소독제 배부 ◆ 확진자 경우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 가치샵사다 플랫폼 판매수수로 할인(5~25%)	세정지원 ◆ 내국세 신고 ·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지방세 신고 ·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내국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장 1년 유예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대 1년유예 ◆ 내국세 및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 항공운송 부품에 대한 관세 산정시 해상비용 적용	
금융지원 ◆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 정책금융기관 기존보증 1년간 만기연장 ◆ 2조원 규모정책금융(대출 · 보증) 신규지원 *산은 3,000억원, 기은 1,000, 수은 10,000, 중진공 250, 소진공 200, 신보 3,000, 기보 1,050, 자신보 1,000 ◆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미소금융 확대(500→550억) ◆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지원 ◆ 금융시장 교란행위 점검 · 단속 강화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및 보험료 인하 (2.0→2.2조원, 피해업종대상 10% 인하) ◆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한시 인하(3.4→2.9%)	행정지원 및 기타 ◆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 통관체계 가동)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 · 검사선택 최소화 ◆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조달처 발굴 지원 ◆ 수급 애로품목 대체조달처 발굴 및 관련기업 정보제공 ◆ 중국 진출 중소기업 마스크 등 구호물자 전달 ◆ 정부조달 물품 계약 · 납품기간 연장 ◆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강화 ◆ 민간소싱을 내 특별기획전(10회) 마련	

수출기업		※ 2.20 발표
재정지원 ◆ 수출바우처(최대 8천만원 지원) ◆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2억원)	세정지원 ◆ 관세 납기연장 · 분할납부 ◆ 신청 당일 관세환급 ◆ 관세조사 유예	
금융지원 ◆ 수출기업 부도등록 1개월 유예 ◆ 매입외환 입금지연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 수입신용장 만기 최장 1년 연장	행정지원 및 기타 ◆ 애로해소센터 운영 ◆ 中 개최예정 전시회를 유사전시회로 대체 지원	

자동차 부품		※ 2.7 발표
재정지원 ◆ 자동차 업계 최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 수입 부품 국내대체를 위한 단기 R&D 지원 ◆ 스마트공장 · 제조기술 고부가가치화 R&D 지원	세정지원 ◆ 방역물품 수출시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 제3국 공장에서 조달된 대체품 신속통관 지원	
금융지원 ◆ 시설투자 자금 신속지원	행정지원 및 기타 ◆ 中 지방정부와 현지공장 조기가동 협의 ◆ 中 방역기준 충족 위한 방역물품 지원 ◆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 연구기관, 지역TIP 인력 파견 지원	

[그림 II-17] 업종·분야별 정책적 지원대책 내용(1)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2020.2.28.

관광·외식업		※ 2.17 발표
재정지원	세정지원	
◆ 관광특구 문화재 등 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주요 관광안내센터에 손소독제·마스크 공급 ◆ 확진자 방문업체에 소독 서비스 제공	◆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금융지원	행정지원 및 기타	
◆ 500억원 규모 우담보 우대 금융 한시 도입 ◆ 일반용자 대상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 외식업체 대상 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 취소·환불 관련 분쟁해결 지원 ◆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5→2~3월) ◆ 외식업 맞춤형 대응요령 포스터 배포	

항공·해운업		※ 2.17 발표
재정지원	사용료·과징금 등 지원	
◆ 조영료 등 공항사용료 감면 ◆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 여객 터미널 임대료 감면	◆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유예 ◆ 항공사 신규 과징금 1년간 납부 유예 ◆ 항공기 인종 수수료 감면 연장	
금융지원	행정지원 및 기타	
◆ 저비용항공사 대상 긴급용자(최대 3천억원) ◆ 항공기 리스보증금 대체하는 보증 지원 ◆ 여객운송 중단 선사 및 여역사 대상 6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대출 ◆ 물동량 감소 입출시 S&LB 통한 유동성 공급	◆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증대(65→70회) ◆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 미취항 노선 개설 지원 ◆ 선박검사 유효기간 3개월까지 연장	

지역경제		※ 2.19 발표
재정지원	세정지원	
◆ 마스크·손소독제 등 구입, 방역비용 등 예비비 367억원 집행 ◆ 지방재정 상반기 60% 집행 ◆ 필요시 지자체 추경 편성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검토, 할인율 10% 상향	◆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지방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중인 조사는 연기·중지	
금융지원	행정지원 및 기타	
◆ 지역 중소기업인 대상 지자체경영안정자금 4.2조원, 특별보증 2.3조원 지원 ◆ 새마을 금고 신규대출 금리우대(최대 0.3%p), 기존대출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 마스크 등 구매시 입찰 소요기간 단축 ◆ 방역용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의약외품 불공정행위 현장점검단 운영 ◆ 지자체 주관행사 계획대로 추진집행	

[그림 II-18] 업종·분야별 정책적 지원대책 내용(2)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2020.2.28.

3 제2회 추경편성 방향과 확정 규모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국내의 폐해가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국민의 소득·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제2회 추경편성을 추진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안 편성, △국채 발행 없이 전액 '20년 예산 감액·조정 등을 통해 충당 등
-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게 된 제2회 추경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7.6조원보다 4.6조원이 증액된 12.2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됨
 - 2차 추경 재원은 8.8조원은 올해 기존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조달하고, 나머지 3.4조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표 II-10 | 제2차 추경예산 확정 결과

(단위 : 조 원, %)

구분	'19년 본예산	'20년			1차추경 대비 (B-A)
		본예산1	1차 추경2(A)	2차 추경2(B)	
◇ 총 수 입	476.1	481.8	481.6	482.2	0.5
(증가율)	(6.5)	(1.2)	(1.2)	(1.3)	
◇ 총 지 출	469.6	512.3	523.1	531.1	8.0
(증가율)	(9.5)	(9.1)	(11.4)	(13.1)	
■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4
(GDP대비, %)	(0.3)	(△1.5)	(△2.1)	(△2.5)	(△0.4%p)
■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7.4
(GDP대비, %)	(△1.9)	(△3.5)	(△4.1)	(△4.5)	(△0.4%p)
■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3.4
(GDP대비, %)	(37.1)	(39.8)	(41.2)	(41.4)	(0.2%p)

주 : 1) '20년 본예산 : '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상성장률 전망(3.8%) 기준

2) '20년 추경 : '20년 경제정책방향 경상성장률 전망(3.4%)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0.4.30.

4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성공적인 K-방역에 자신감을 보이며, 장기화가 예상되는 코로나 사태의 성공적 극복을 위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 수준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 등을 언급함

- 이에 앞서 정부는 정부합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5월 7일에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진방향을 전격 발표함
 - (추진배경) 감염병 위기가 경제로 전이되며 글로벌 보건·경제 동반위기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의 일상화·디지털경제 전환의 4차산업혁명 가속화로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대책마련을 통해 경제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추진을 도모
-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들로 구성됨
 - 프로젝트 과제 선정 4대 원칙은 △디지털 기반의 21세기형 뉴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전 산업·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 경제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 △임팩트가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로 설정
-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은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 등을 중심으로 설정함
 - 3대 프로젝트 :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Post-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의 육성, △안전·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 각 프로젝트별로 2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모두 10대 중점과제가 제시되고 있으며 금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여타 사업은 '21~'22년 예산 안에 반영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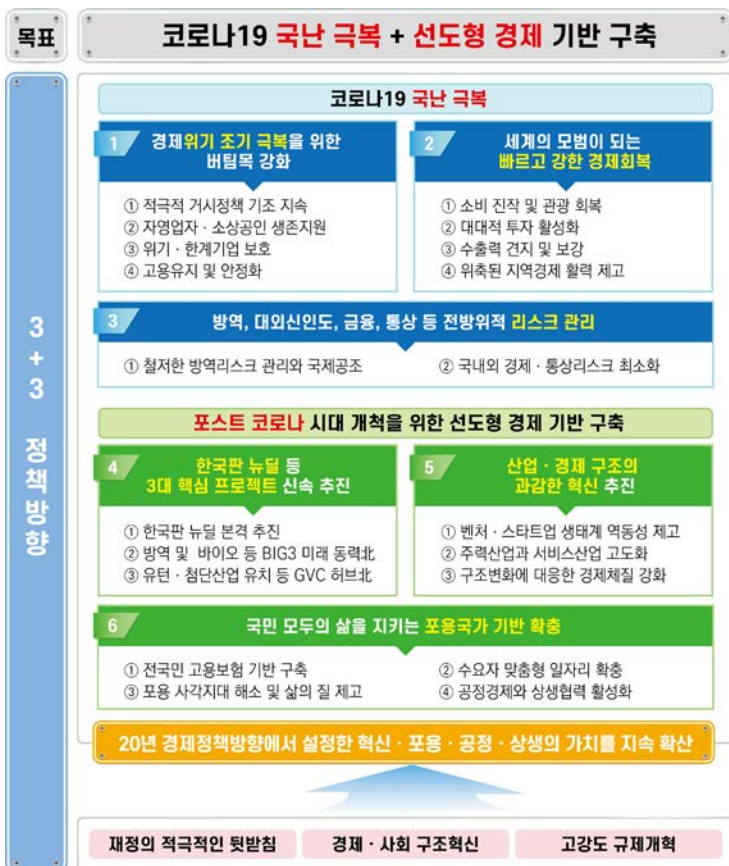


[그림 II-20]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과 과제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 2020.5.7.

5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 극복과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혁신·포용·공정·상생의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3+3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프로젝트 신속 추진,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에 집중



[그림 II-21]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6.1.

6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방향 : 국무회의 심의 결과

- 정부가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음
- 제3차 추경예산 규모는 총 35.3조원으로 기존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0.1조원을, 기금 자체재원활용을 통해 1.4조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23.8조원 조달



[그림 II-22]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1)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6.3.

- 추경편성 내용은 세입경정에 11.4조원을, 135조+ α 금융패키지 재정지원에 5.0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4조원, 경기보강+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11.3조원 등을 배정

- 제3차 추경까지 포함 시 코로나 대응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임



[그림 II-23]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2)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6.3.

3. 충북의 정책수립 방향설정

1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분석 대응 필요

-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상황이라 방역 대응 차원에서는 물론 코로나 여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변화가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관리를 통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우선 방역 대응 차원에서는 향후 예방 및 방역관리의 일상화가 예상되고 지역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역방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와 예방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도 국가차원에서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북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적극적이고 시의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함

2 사태추이와 정책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책 강구 필요

- 정부는 코로나19의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대응을 위하여 내수시장의 적극적 진흥과 고용 유지를 위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글로벌 락다운(Lockdown) 상황의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에 있음
- 이에 코로나 사태의 추이와 국가차원의 정책대응 추이 등의 정책변화를 주시하면서 충북차원의 대응 전략을 시의성 있게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먼저 코로나 사태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국내시장의 경기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 분야별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차원의 대응책 모색 필요
 - 또한 글로벌 락다운 상황으로 세계경제의 위기 회복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공적인 K-방역 평가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락다운 상황 추이의 진전에 선도적 대응이 모색되고 있으므로 보다 유연한 충북차원의 대응방안 강구

3 코로나 대응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관련 정부예산 확보 강화

- 아직 국내에서 완전하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나 정부는 그간의 성공적인 K-방역평가를 기반으로 방역의 일상화 정책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의 편성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의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특히 그간에 추진해 온 당면 현안 극복 정책 이외에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확대되고 있는 고용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충북도 이에 적극 대응해 충북뉴딜 정책모델을 발굴하여 추진 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제3차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고, 부족한 부분은 '21~'22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정부예산 확보사업의 발굴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4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도정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기존 사회경제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 하고 있고 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혁신적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먼저 질병관리 차원에서 방역정책의 경우, 대응적 방역정책에서 일상적 방역 활동과 예방적 방역관리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방적 방역 활동 활성화와 방역산업 육성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면산업들은 많은 타격을 입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대면 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아 활성화되고 있어 비대면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빠른 성장 예상
 - 특히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며 4차산업혁명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의 상용화와 비대면 산업기술의 급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와해를 경험하게 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영역에서 시장 다변화 추진과 함께 자급자족을 위한 국산화로 유통기업의 증가, 리쇼어링(Re-shoring)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사회적으로도 언택트(Un-tact)와 온택트(On-tact)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 서비스 확대는 물론 새로운 기술적용을 통하여 4차산업혁명 가속화, VR, AR 기술 상용화,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디지털 경제사회의 전환과 급진전 등이 예상되면서 국가 간 이들 산업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락다운의 경험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며 탈세계화 경향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경제 위축 야기
- 공간적으로도 공간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압축형 콤팩트 공간과 저밀도형 공간으로의 변화로 양분되면서 구매력을 가진 중장년층과 농촌경험을 해본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충북지역의 지속발전과 산업경제 성장 및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의 강화와 활발한 모색이 요구됨
-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사회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되며, 산업경제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고용쇼크에도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충북형 뉴딜 프로젝트 발굴과 선도적인 지역 정책 모델의 추진이 필요함

과제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전략과제

제1절 | 산업경제

제2절 | 고용·일자리

제3절 | 과학기술

제4절 | 농축산

제5절 | 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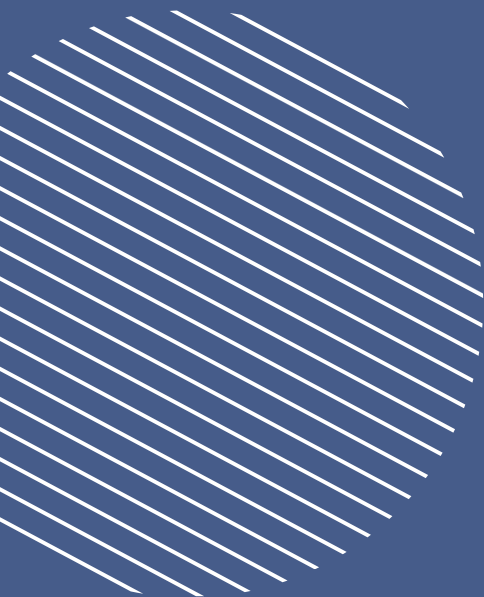
제6절 | 교통물류

제7절 | 문화관광

제8절 | 환경

제9절 | 보건복지

제10절 | 행재정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전략과제

제1절 산업경제

1. 현상과 이슈

1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타격 심화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제조업 경기 동향

- 코로나19 초기 경제 주체들의 외부활동 자제 경향 확산 및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인해 외출, 외식, 여행, 레저 활동이 위축되면서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오락·문화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됨
- 팬데믹 이후 소비위축 경향이 서비스 전분야로 확산되며 전년 동기대비 비제조업 업황,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등 비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

표 III-1 | 비제조업 경기지수

(단위 : p, 전년동월차)

구분	'19.4.	'20.4.	yoy
업황	58	41	-17
매출	67	48	-19
채산성	73	53	-20
인력사정	75	90	15
자금사정	72	49	-23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2020.5.

■ 직접적 타격에 노출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

- 충북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3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II-2 |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 (단위 : BSI, p, 전년동월차)

구분		'19.4.	'20.3.	'20.4.	yoy
소상공인	체감	71.1	28.5	79.4	8.3
	전망	94.7	97.4	93.9	-0.8
전통시장	체감	62.3	31.2	76.8	14.5
	전망	100.0	97.1	90.6	-9.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020.5.

2 소비심리 위축 및 소비패턴 변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자심리 동향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대폭 하락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을 제외한 전 부문에 대한 상황인식 및 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경기판단, 금리수준전망 부문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취업 기회전망, 향후경기전망 순으로 조사

| 표 III-3 | 총복의 소비자심리 동향 (단위 : p, %, 전년동월대비)

구분		'19.4.	'20.4.	yoy	
소비자심리지수		99.0	72.4	-26.6	-26.6
경제인식	현재생활형편CSI	93.0	77.0	-16.0	-16.0
	현재경기판단CSI	70.0	34.0	-36.0	-36.0
경제전망	생활형편전망CSI	96.0	77.0	-19.0	-19.0
	향후경기전망CSI	75.0	54.0	-21.0	-21.0
	취업기회전망CSI	76.0	50.0	-26.0	-26.0
	금리수준전망CSI	108.0	72.0	-36.0	-36.0
소비지출 전망	가계수입전망CSI	97.0	80.0	-17.0	-17.0
	소비지출전망CSI	108.0	88.0	-20.0	-20.0
가계저축 및 부채	현재가계저축CSI	95.0	81.0	-14.0	-14.0
	가계저축전망CSI	98.0	84.0	-14.0	-14.0
	현재가계부채CSI	104.0	99.0	-5.0	-5.0
	가계부채전망CSI	100.0	98.0	-2.0	-2.0
물가전망	물가수준전망CSI	133.0	122.0	-11.0	-11.0
	주택가격전망CSI	77.0	91.0	14.0	14.0
	임금수준전망CSI	116.0	97.0	-19.0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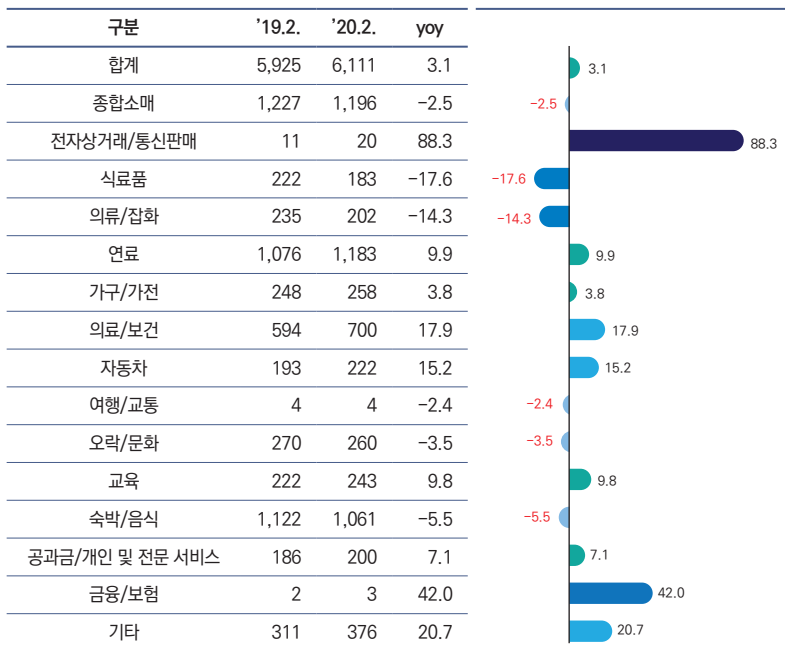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020.5.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 충북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살펴보면, 식료품, 의류/잡화, 숙박/음식, 오락/문화, 종합소매, 여행/교통 등 대면서비스업에서의 소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관련 소비의 급증과 더불어 금융/보험, 의료/보건, 자동차, 가구/가전, 교육 등에서의 소비가 늘어나며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함
 - 전 산업에 걸쳐 총체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기불황과 달리 비대면 수요처로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
 - '20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3.3%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유통업체 매출액은 16.9%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비중이 '20년 1월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

표 III-4 | 충북의 신용카드 사용액 동향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실 승인실적 기준)

3 가시화되고 있는 제조업으로의 충격 전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제조업 경기 동향

- 코로나19 여파가 팬데믹으로 확산되며 △매출/채산성 감소, △생산/가동률 감소 (원자재/중간재 수급), △내수판매 부진(소비심리 위축), △수출 감소(국가 간 봉쇄 장기화), △인력난(생산 감소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음
 -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의 장기화 가능성 존재
- 특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생산량이 대폭 감소함

표 III-5 | 제조업 경기지수 (단위 : p, 전년동월차)

구분	'19.4.	'20.4.	yoy	구분	'19.4.	'20.4.	yoy
업황	63	57	-6	설비투자	92	81	-11
매출	82	69	-13	인력사정	91	100	9
생산	85	74	-11	가동률	85	74	-11
신규수주	81	64	-17	내수판매	77	66	-11
채산성	88	79	-9	수출	98	73	-25
제품판매가격	91	91	0	원자재구입가격	114	106	-8
제품재고	105	111	6	자금사정	76	70	-6
생산설비	105	110	5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해당연도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

- 전년동월 대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글로벌 가동률 하락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충북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대폭 감소함

표 III-6 |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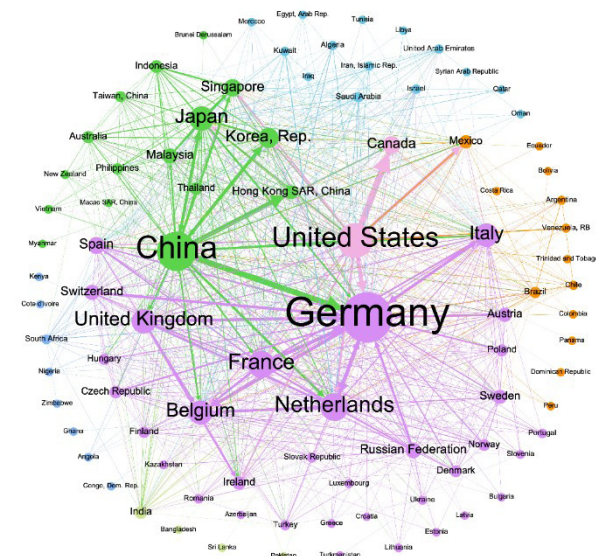
구분	'19.3.	'20.3.	yoy	무역수지
합계(수출)	19.7	22.1	11.8	16.0
반도체	8.0	6.8	-14.6	6.0
컴퓨터	0.1	2.2	1,628.6	2.2
건전지 및 축전지	2.0	2.1	5.3	2.1
플라스틱 제품	1.1	1.6	45.5	1.4
전력용기기	1.0	1.1	14.5	1.1
광학기기	1.0	1.1	5.4	1.0
정밀화학원료	0.7	1.0	33.8	0.3

자료 : 무역협회, 지자체 수출입, 해당연도

4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 대두

■ 자국 내 또는 지역적 가치사슬(Local value chain, LVC)의 확대

- 정치와 국제금융환경 개선, 무역장벽 완화, 국가간 특화에 따른 중간재화의 교역 확대, 정보통신기술 및 글로벌 물류시스템의 획기적인 발전 등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확대를 가속화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글로벌 경제 및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생산 및 소비활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음
 - 국제 교역량이 1913년에는 세계 GDP의 약 15%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 들어서는 59%까지 증가
-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실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탈세계화(De-Glob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재평가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음



[그림 III -1]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국가 네트워크(2019년 기준)

자료 : World Bank, UNCTAD-EORA database

■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리쇼어링 현상 가속화

-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화가 기업에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로 이동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극대화시켰으나,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수급여건의 악화에 따른 각종 차질을 야기

5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 동력화 가능성 재확인

- 충북의 주요 전략산업인 예방·진단·치료(펄프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관련 바이오헬스 분야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발생하였음
- 블룸버그(Bloomberg)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관련 의약·바이오 산업 반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6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 대면접촉에 따른 충격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시대(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가 도래할 것임
-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기호(Preference)보다 안전(Security)에 중심으로 둔 형태로 변모됨에 따라 ICBM(IoT-Cloud-Big Data-Mobile) + AI 등의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온라인 및 모바일 화상회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원격교육 및 모바일 스마트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병원을 통한 2차 감염의 우려와 공간 제약이 없는 편의성으로 인해 경증진료 및 의료상담 등에 관한 원격진료 수요 증가
 - 현장(On-site) 중심이 아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ver-The-Top, OTT),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홀로그램(Hologram) 수요 증가
 - 데이터 저장 및 공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NAS 플랫폼 등 클라우드(Cloud) 서비스 수요 증가

| 표 III-7 |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산업의 변화

산업	생산방식 및 공정의 변화	유망제품의 변화	제조-서비스 융합
자동차	공정자동화, 네트워크화, IoT도입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 무인서비스
조선	설계의 빅데이터 활용, AR, VR 활용	원격제어선박, 초기자율운항선박	스마트관리, 자율원격 모니터링 컨설팅
로봇	빅데이터, 가상설계 시스템	소셜로봇, 첨단제조로봇	로봇자동화 솔루션 서비스
기계	스마트팩토리 확대	원격제어, 무인화기계	스마트 설비유지보수 서비스
엔지니어링	전사적 업무 추진, 프로젝트 관리	시뮬레이션 SW	프로젝트관리, 설계, 유지보수 서비스
철강	버추얼팩토리 도입	특수합금강, 3D프린터용 금속분말	신물질개발 서비스
화학	정밀화학, BIC제조플랫폼 도입	3D프린팅용 프로그래머블 원료	원료사용 정보지원 서비스
섬유	고객맞춤형 밀착생산방식	스마트기능 첨단소재, 스마트의류	가상 피팅서비스, 의상추천서비스
식품	식품안전 및 고기능성 공정혁신	간편식, 고객맞춤형 기능성 식품	O2O유통 플랫폼 서비스
통신기기	스마트공장 도입 증가	5G 이동통신, AI기반 스마트폰	통신, 생활, 금융, 교육 융합 서비스
가전	생산관리, 물류, 품질 스마트화	AI가전, IoT가전, 무전원가전	스마트홈 연계 서비스
반도체	스마트공장 도입 주도	초저전력반도체, AI칩	차세대 반도체 개발 컨설팅
디스플레이	빅데이터 활용 OLED 수율 상승	OLED패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가상현실시스템 구현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발전,송배전 통합운영 플랫폼 확대	에너지저장장치, ICT 기반 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절약 서비스
바이오헬스	제품개발 과정의 스마트화	IoT기반 의료기기, 3D 프린팅 의료	소비자 안전성, ICT기술 융합 서비스
3D프린팅	장비기술의 고도화	항공, 로켓 부품, 의료 보형물	3D프린터 출력서비스

자료 : 산업연구원, 201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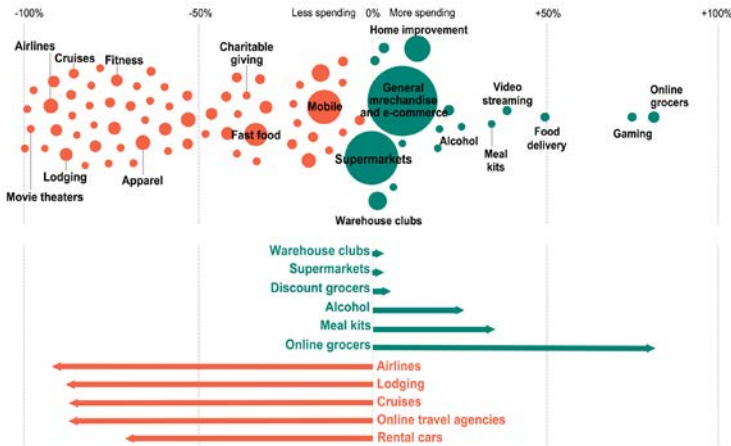


2. 전략과제

1 데이터 기반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적시적 대응체계 마련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및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대내 충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동향, 생산동향 및 혁신동향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충격 대응시스템 도입¹⁶⁾,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DB(산업별/기업별/지역별 등) 구축, 지역기업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및 업종별 특화 지원수요에 대한 다차원 분석 등의 사업수행 필요



[그림 III -2]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인 소비형태 변화
자료 : The New York Times(nytimes.com)

16) '20년 4월 11일 뉴욕타임즈 기사인 "How the Virus Transformed the Way Americans Spend Their Money"는 '20년 1월 21일~3월 19일 동안 미국인들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Debit card) 사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른 산업충격을 분석

■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한 산업별 리스크 관리 매뉴얼 구축

-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3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등 21C 이후 유사 사례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 주기가 더욱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염병 발병 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한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한겨레신문이 '20년 5월 13일에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한국기후변화학회 회원 및 감염병 전문가) 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 기후변화 및 다양한 요인 등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의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으로 응답함
 - 설문 집단의 약 40%가 3년 이내 새로운 신종, 또는 변종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약 79%는 5년 안에 출현할 것으로 응답

2 대면서비스 위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원 확대

-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북의 대면 서비스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산업의 14.5%에 불과하나, 종사자는 전산업의 23.6% 수준이고, 사업체는 전산업의 48.6%에 달하고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7명/개로 전산업(5.5명/개)의 약 48.5%, 매출액은 4.5억원/개로 전산업(15.0억원/개)의 약 29.7%, 종사자당 매출액은 1.7억원/명으로 전산업(2.7억원/명)의 약 61.3%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여건도 열악한 실정
-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 재래시장 상인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융자 시 보증수수료 지원, △충북신보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재기 지원(보편적 지원이 아닌 자생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위주의 지원 필요)
 -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위약금 부담 문제, 계약해지, 거래단절, 손해배상, 피해보상 등 법적 분쟁 관련 고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무료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충북사랑화폐 도입을 통한 내수소비 기반 강화 등의 사업 시행

■ 온라인 서비스 진출 지원

- 소비시장의 급격한 비대면 서비스화와 유통구조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됨
 - 충북 소재 업체 대상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홍보 및 온라인쇼핑 물류비 지원
 - 홈쇼핑방송 입점 지원, G마켓·옥션·11번가 등에 청풍명월장터 운영 등
 - 배달 어플리케이션 충북사랑배달앱(가칭) 구축 및 운영
 - 스마트픽업 서비스 시스템 구축



[그림 III-3] 충북형 공공배달앱 관련 언론보도

자료 : CJIB 청주방송(<https://www.cjib.co.kr>)

3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피해기업의 자력회생을 위한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

- 공장가동 중단, 생산차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자력회생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결정의 신속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역 금융권과 연계한 기업 특례보증대출(설비투자, 고용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 단발적인 대응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지남하므로, 지역 업체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벤처·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확대
 - 소비패턴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비R&D 지원 확대
 - Smart Factory & Smart Business 저변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 육성
 -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통한 자립화 모색
 - 통합 재고관리시스템 구축(JIT : Just In Time)

4 글로벌 가치사슬 재평가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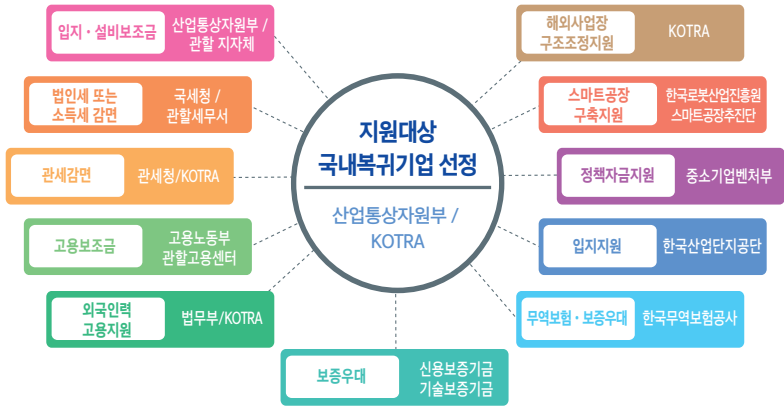
■ 수출판로 다변화 방안 모색

-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수 있으므로, 지역 내 및 산업 간 부품 수급의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 및 품목별 판로대체 적정 지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설치(상공회의소, 경총 등)를 통한 수출입 피해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 조달처 발굴 지원
 - 유망 수출지역 및 품목 설정
 - 도내 방역·의료·건강식품 등 유망상품 대상 사이버 상담회 개최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활력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 및 운영
 - 수출 초보기업 멘토 사업 추진

■ 리쇼어링에 대응한 글로벌 기업 및 유턴기업 투자유치 전략 수립

- 리쇼어링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금번 사태로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GVC) 체계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충북이 가진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U-turn 기업 대상 AI 기반 Smart Factory 적극 지원
- 주요 타겟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실시
-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혜택 마련
-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유턴기업 인센티브 확대방안 강구



[그림 III -4]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

■ 감염병 위기대응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항 바이러스 뉴딜사업 추진

-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및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감염병 주기의 단축으로 백신, 치료약, 면역산업 관련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 증가전망
- 이에 기존 바이오헬스 산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바이오의약품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가 확대될 것을 예상되며, 따라서 충북의 바이오헬스 분야 조기 투자 및 산업 역량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임
 -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유치(오송 : 감염병 치료제, 진단키트 기술개발, 성능개선 지원 등)
 - 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면역체계 증진 제품 개발, 對유럽 바이오기업 및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지원 등)



[그림 III-5] 충북 2030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 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육성

- 대내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충북의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업 육성방안 마련
 - 엔터테인먼트 분야,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언택트 중심의 신산업 육성
 -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 유통구조의 확산에 대응한 물류 배송 플랫폼, 물류 중개 산업 육성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 디지털 전환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디지털 SOC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함
 - 데이터 센터 도내 유치 방안 수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 AI Cluster 조성 : 현재 광주시에 4,000억원 규모의 AI Cluster 조성 중에 있으며, 이것을 전국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AI 기반의 산업지원 클러스터 조성 필요

제2절 고용 · 일자리

1. 현상과 이슈

1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쇼크 현실화

글로벌 실업률 전망과 실태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전 세계 근로자 33억명이 영향을 받으며, 실업률 또한 최대 6.9%p 상승할 것이라 전망함
 - ILO(20.4.) : 전 세계 근로자 33억 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근로자 중 81%가 사업장의 폐쇄 권고 등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거주
 - IMF(20.4.)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년 10월 전망치보다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6.9%로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일본은 0.6%p 상향 조정
- 코로나19 확산 시점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팬데믹 선언 이후 주요국의 고용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3월 기준 고용률(15~64세)이 전년동월대비 0.6%p, 중국은 동기간 3.4%p, 한국은 동기간 0.8%p 감소

| 표 III-8 | 주요국 실업률 전망 (단위 : %, %p)

구분	'19년	'20년 전망		차이(B-A)
		'19년 9월 전망(A)	'20년 4월 전망(B)	
미국	3.7	3.5	10.4	+6.9
유로존	7.6	7.5	10.4	+2.9
독일	3.2	3.3	3.9	+0.6
프랑스	8.5	8.4	10.4	+2.0
이탈리아	10.0	10.3	12.7	+2.4
캐나다	5.7	6.0	7.5	+1.5
영국	3.8	3.8	4.8	+1.0
중국	3.6	3.8	4.3	+0.5
일본	2.4	2.4	3.0	+0.6
한국	3.8	4.2	4.5	+0.3

자료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2020.5.1., 재구성

■ 국내 취업자 수 급감 등 일자리 위기상황 발생

- 감염병에 따른 공포심리, 경제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선 서비스업의 고용이 위축되었으며, 내수침체·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5.13.)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한 65.1%를 기록

- 15~64세 고용률의 경우 2009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63.1%, -1.3%p) 수준의 하락폭(기획재정부)

- 15~64세 취업자는 23,8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2천명(2.5%p) 감소

- 특히 취업자 중 휴업·휴직, 자녀돌봄, 자가격리 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는 1,485천명 전년동월대비 1,130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 수출감소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44천명이 감소한 4,377천명 기록

- 서비스업 : 대면서비스업 충격이 확대되면서 감소폭 확대

- 또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 도소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개학 연기·학원 휴업 지속 등으로 교육 서비스업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Ⅲ-6]

고용률(15~64세) 증감 추이(% , %p)



[그림 Ⅲ-7]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추이(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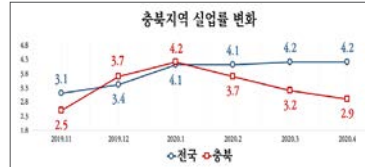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고용의 양적·질적 문제발생

충북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 충북지역은 11월 이후 4월 현재까지 전국대비 고용률(15~64세) 및 실업률은 양호한 상황임



[그림 III-8] 고용률(15~64세) 변화 추이(%)



[그림 III-9]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지역경쟁력 약화

- 4월 기준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급감하였고,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이 높으면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고용쇼크가 예상됨
- 4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1천명으로 '19.11월 대비 2천명이 증가하였으나, 팬데믹 공식선언(3월) 이후 4천명으로 크게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 189천명('19.11월) → 195천명('20.3월) → 191천명('20.4월)
 - 제조업 취업과 연관되어 30~39세 취업자 수가 대폭 하락하는 등 핵심노동 인구의 감소로 지역경쟁력 약화 우려



[그림 III-10]

제조업 취업자 수 변화 추이(천명)



[그림 III-11]

30~39세 취업자 수 변화 추이(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5.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 및 고용충격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진행형인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린다면 고용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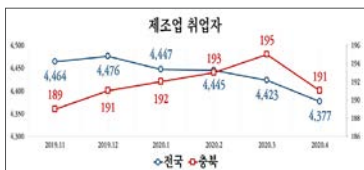
- 4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충북지역 기업의 수출건수 및 수출금액은 감소함
 - 수출건수는 '20년 4월 19,63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5.08% 감소
 - 수출금액은 '20년 4월 1,827,011천불로 전년동월대비 0.74% 감소
-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 4월 업황BSI는 57로 11월 대비 7p 하락함
 - 11월 대비 : 매출 9p ↓, 생산 9p ↓, 자금사정 7p ↓
- 구직급여 신청자 수도 '20.1분기 12,870명으로 '19.4분기 대비 69.3% 상승함
- 또한 전체 129,920개 사업체의 99.8%가 하청 위주의 300인 미만 사업장('18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고용·매출 감소 본격화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471천명으로 '19.11월 대비 12천명이 감소함
- 충북지역 비제조업(도소매·사업서비스 등)의 4월 업황 BSI는 41로 11월 대비 21p 하락함(매출 22p ↓, 자금사정 25p ↓)
- 한국외식산업연구원(4.24.)에 따르면 충청권 “코로나에 따른 고객감소 업체 비중”이 86.1%로 전국에서 2번째로 심각한 실정임(전국 80.8%)
- 충북 소상공인 피해 누적건수/피해금액(4.2일 기준)은 10,833건, 3,490억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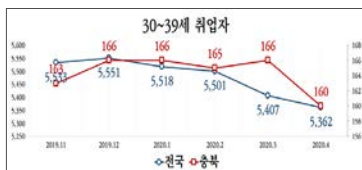
■ 36시간 미만 취업자,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적 문제점

- 4월 기준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5천명으로 3월 대비 167천명 증가함
- 4월 기준 임시·일용근로자는 180천명으로 3월 대비 11천명(6.5%) 증가함



[그림 III-12]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 변화 추이(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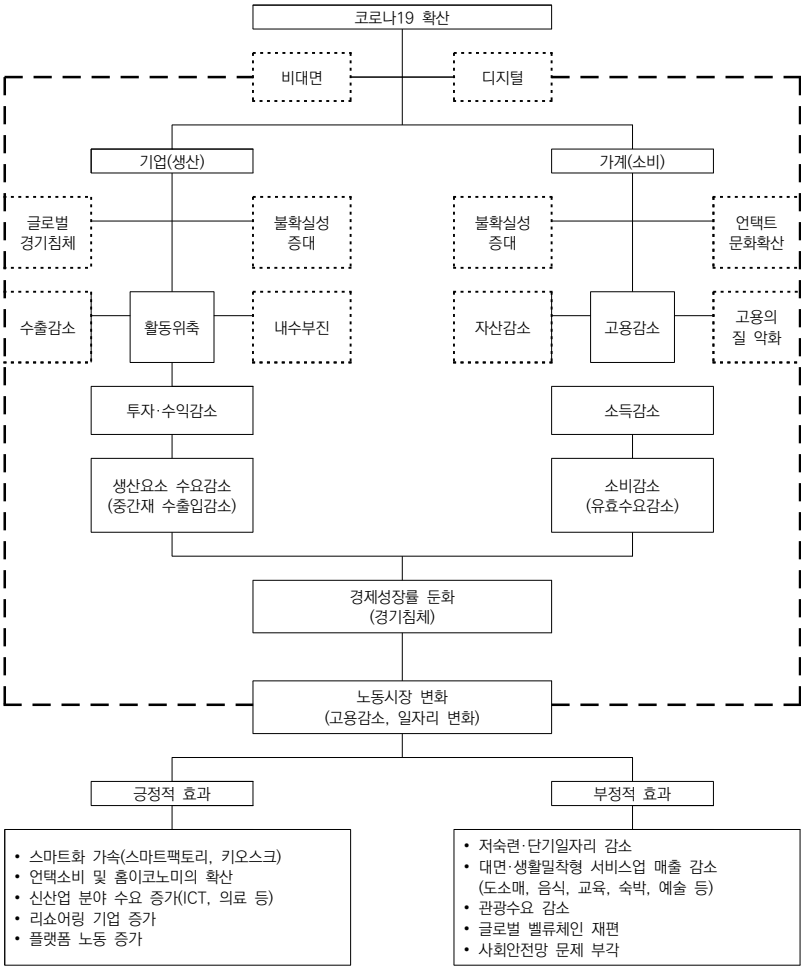


[그림 III-13]

종사상시지위별 근로자 수 변화 추이(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5.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경로



[그림 III-14]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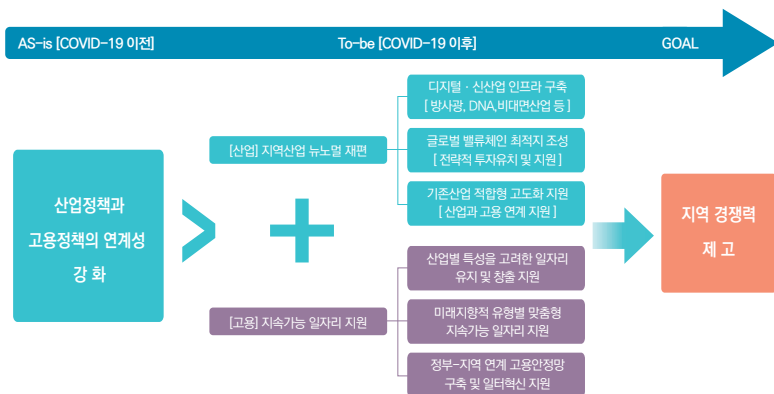
자료 : 연구진 작성

2. 전략과제

1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고용 연계 강화 전략 추진

■ 미래지향적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강화 필요

- 충북도는 다양한 산업·고용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면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지역을 넘어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진 중인 산업과 고용관련 전략을 연계·세분화 접근할 필요 있음
 - △디지털·신산업(바이오) 인프라 조성, △글로벌 밸류체인 최적지 조성 등과 같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유지를 지원하는 전략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그림 III-15]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자료 : 연구진 작성

2 단기적 지원확대 및 미래인력수급 대응체계 구축

■ 단기적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불확실성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기업에서는 인력축소, 폐업보다는 휴업·휴직, 경비절감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면 생산·매출이 급감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폐업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와 맞물려 기업에서는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우려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적극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고용상황 모니터링 및 미래인력수급 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분기 현재 충북도의 고용동향은 전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고용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특히 충북은 반도체, 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바이오·헬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높고, 관련 산업들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변동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변동과 전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소상공인과 관련하여서도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급변 사태를 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제조업 중심 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충북도는 글로벌 경기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향후 경기변화 전망과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 준비를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함

3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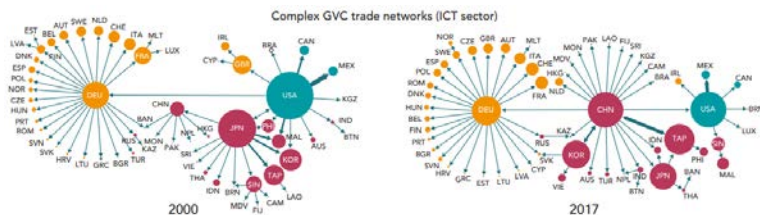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보 필요

- 디지털·플랫폼 경제 등 아직까지는 생소하지만 코로나 이후 그 영역의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우선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유연근무·탄력근무·재택근무 등과 같은 기업 근로여건의 변화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변화 필요
 - 또한 최저임금 관련사항, 주52시간 근무제 대한 유연화 등의 대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AI,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스마트팩토리, 키오스크 등) 확대, 언택트 문화에 대한 확산(관광·교육·숙박·음식점업 등 관련 산업의 매출 감소)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숙련·임시·일용직자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함(디지털 전환 및 직무역량 교육 등)
- 또한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취약계층(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에 대한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략적 투자(유치)와 지원 필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요 산업·기업 등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쇼어링,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가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충북도 차원에서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유턴기업, 국내의 앵커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지역의 바이오, 반도체, ICT 분야의 산업 및 일자리 관련 로드맵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분석이 필요함
- 신규 산업단지 조정 및 노후산업단지 개조에 있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력산업이나 미래산업과의 연계효과, 일자리창출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경우 큰 틀에서의 이윤추구라는 목적 이외에 지역에 이전(투자)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상이할 것이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및 파격적·차별적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제공



[그림 III-16] ICT 부문 GVC 무역 네트워크(예시)

작성자료 : World Bank,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재인용, 2019

기술적 실업 방지, 평생교육 등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에 대한 지원

- 노동시장의 유연성 중 수량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 등은 지자체 차원의 대응 보다는 국가차원, 기업차원에서의 지원 및 대응 체계구축이 필요함
-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술적 실업 및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기능적 유연성 확보)으로 노동력을 어떻게 재교육시켜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요구됨
 -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쇠퇴산업의 출현과 기술적 실업으로 인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실직자와 은퇴자의 생애 재설계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책 모색 필요
- 또한 언택트시대, 전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스마트 러닝 포털 운영 및 교육-직업 연계 모델 구축이 필요함

표 Ⅲ-9 | 노동시장 유연성의 종류 및 내용

종류	내용
외부 수량적 유연성	◆ 고용의 유연성(채용 및 해고, 임시직, 계약직 등)
내부 수량적 유연성	◆ 근로시간의 유연성(시간제근로, 유연근로 등)
임금 유연성	◆ 근로자간 임금차이, 직무급, 성과보상급 등
기능 유연성	◆ 근로자의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아웃소싱, 직무순환, 교육훈련 등을 의미

자료 : 오호영,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2016

대학-지역-산업 연계 인력양성 시스템 및 창업생태계 조성

- 향후 지역산업 기술이 고도화, 첨단화, 융합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양성은 지역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함
- 또한 충북의 지속적 성장, 그중에서도 고용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신산업 및 첨단분야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도내 성장거점 및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전문화된 스타트업 벨리와 사회적 경제관련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창업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 → 창업 → 성장 → 글로벌 진출’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

4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충북형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는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신약 및 치료제 의약품 및 건강식품, 가정용 소독기, 원격진료 등의 상품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충북의 주력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홈코노미(Homeconomy)가 늘어남에 따라 O2O(Online to Offline)에 이어 O4O(Online for Offline)¹⁷⁾ 및 원격PT 등의 서비스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지역차원에서는 기존 인프라의 디지털화, 데이터경제 관련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선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인력의 이전 및 일자리 유지·창출을 지원해야 함
- 또한 감염병 원인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므로 향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전망으로 충북은 태양광, 이차전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산업 기반의 축적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함



> 디지털 뉴딜 :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반시설 디지털화
바이오 등 주력산업 고도화

> SOC 인프라 혁신 : 지역 노후 인프라 정비

> 그린 뉴딜 : 신재생에너지, 농업 육성, 환경개선 사업 등

> 고용 대응 : 직무역량강화, 디지털 연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지원, 이전직 교육훈련지원

[그림 III-17] 충북형 뉴딜 개념도

자료 : 연구진 작성

17) 예를 들어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등의 온·오프 연계 서비스 시대를 지나 오프라인 서비스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메우는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

제3절 과학기술

1. 현상과 이슈

1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국내·외 현황

파이프라인

- 대·소규모 단위의 제약·바이오기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일부 기업은 기존 항바이러스제를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검증된 기술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부는 신기술로 접근

치료제 개발현황

- 현재 코로나19에 특이적인 치료법이나 감염 억제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상태로 전파속도로 볼 때 백신 개발 전에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
- 바이러스 특성상, 항원 다양성이 크고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 치료제 개발 난항
- 전 세계적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연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존에 허가받은 치료제 또는 안정성이 담보되면서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신약후보물질을 다시 검토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신약재창출)¹⁸⁾ 방향으로 수행 중에 있음
- 국내도 기존 출시 의약품 검토(신약재창출) 및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진행 중으로, 대부분 신약후보물질 발굴 단계 및 임상시험 이전 단계로써 상용화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
-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항체 탐지용 단백질 ‘프로브’ 제작에 성공하였으며, 약 15개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추진 중

18) 이미 시판 후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나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은 있지만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허가 받지 못한 약물의 적응증을 규명하여 신약으로 개발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국내의 기업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 기관에 시험 승인을 확대하고 있으며(20.4.21.) 국내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 역시 가속화 중(20.5.4.)

백신 개발현황

-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없으며 다양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후보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국가별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백신을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별로는 이노비오(미국), 모더나테라퓨틱스(미국), 존슨앤존슨(미국), 큐어백(독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영국), 사노피(프랑스)에서 개발 진행 중
- 국내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연구 역시 국내 정부기관의 지원 하에 기업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음
- SK바이오사이언스, 스마젠, 지플러스 생명과학, GC 녹십자 등 약 4개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타 복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도 백신 개발 준비

2 스마트 비대면 헬스케어 기술 상용화

일본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조치의 일환으로 원격진료 실시

-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였으며, 최근 초진 환자에 대해서도 환자-의사간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원격의료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약국에서도 초진 환자를 온라인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본의 조제 약국 대기업 3사(일본분배, 쿠오루 홀딩스, 아인 홀딩스)는 집에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차적 실시를 계획 중임
- 약국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약사가 환자에게 전화나 영상 통화로 약물의 용법·용량을 설명하고, 약은 상점에서 환자의 집으로 배송
- 일본의 온라인 병원진료의 확대는 코로나 영향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지만, 일정 조건하에서 향후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됨(20년 9월, 법 개정 예정)

중국 :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

- 중국의 경우 2014년 광둥성 제2인민병원이 최초로 정식 비준을 통해 '광둥성 온라인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작함
-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으로서 베이징의료협회가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도시 봉쇄 및 비대면 상황에서 원격으로 의사-환자간 상담을 진행함('20.2.1.)
- 중국의 평안굿닥터(平安好醫生) 의료플랫폼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에 AI와 빅데이터를 응용한 AI 무인진료소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음
 - AI 무인진료소는 AI 의사가 환자 목소리나 이미지를 판단해 초기 진단을 진행하고, 클라우드 컴퓨터 닥터가 환자와 대화 후, 실제 전문의료진과 연결

우리나라 :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화진료 중심으로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진료 중심의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향후 법·제도 기반과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코로나19 이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건강관리, 인간중심 및 편의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될 전망

3 주요국 감염병 대비 정책 동향

미국 : NIH, VRC,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NIH 내 국립감염병·알리지연구소(NIAID)는 2018년 연구비 예산이 30억 6,000만 달러로 NIH 내 21개 연구소와 6개 센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감염병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
 - NIAID는 감염병 연구를 위한 임상병원과 전임상시험 뿐 아니라 임상시험용 물질까지 생산 가능한 백신 Pilot Plant를 보유한 백신연구센터(VRC : Vaccine Research Center) 운영

- VRC는 1999년 설립되어 HIV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에볼라 백신 등 주요 감염병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은 에이즈, 말라리아 등 소외열대 감염병, 인플루엔자, 폴리오 등에 많은 예산 지원하고 있음

유럽 : FP8, ECDC, EU

- 유럽연합은 Horizon 2020의 FP8(8차 Framework Programme)에서 감염병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며, ECDC(European Centre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대비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 ECDC는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전염병 감시 및 연구·검사 네트워크 구성, 조기 경보 및 대응, 과학적 의견 제시, 기술적 지원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활동, 대국민 홍보 등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보건안보위원회(Health Security Committee)를 구성하고 EU 보건전략 중 하나로 '보건위협으로부터 시민 보호'를 채택하고 운영 중임

일본 : AMED, 국립감염병연구소

-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가 감염병을 포함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초연구와 중개연구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의료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실용화 연구를 추진 중임
-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핵심 분야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학계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연구경쟁력을 가진 국립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감염병 연구혁신 이니셔티브 사업('17~'26년, '19년 예산 16억 5000만 엔), △감염병 국제연계전략프로젝트, △신흥·재발 감염증에 대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추진연구사업 추진

4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코로나 관련 R&D 동향 및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바이오특위에서는 바이오R&D 투자 확대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 바이오특위 운영계획을 수립함
 - 생명·보건의료 정부 R&D투자 : ('17) 2.6조원 → ('25) 4조원 이상

- (R&D 투자) 민간 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민간의 역할 재정립,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R&D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 규제환경 변화 :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심사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허용)
 - R&D 투자전략 :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임상·보건, 전문인력양성 및 생명자원·정보인프라 등 6개 분야
- (감염병) 국내·외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R&D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추진함
 - 위기 단계 전반에 걸친 R&D 역할을 강화
 - 빅데이터·ICT 기반의 기술 활용 강화 등 주요 과제를 검토
- (바이오인프라) AI 기반의 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한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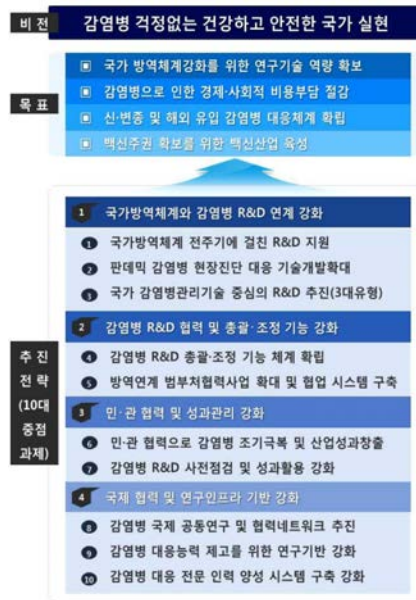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확대를 통해 연구인력의 고용충격을 흡수하고, 유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역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음
- (기업부담 경감)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민간부담 축소 및 인건비 지원 확대 연장 적용 등을 계획함(제4차 비상경제회의, '20.4.8.)
 - 민간 부담금비율 축소(최대 35%→20%) 현금부담비율 완화(최대 60%→10%)
 - 인건비 지원 : 연구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 대상으로 기존인력 인건비 인정
- (고용안정)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감축, 신규채용 축소 등 고용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R&D 일자리 사업에 우선 지원함
 - 코로나19 이후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증가 분야 및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비한 인력양성, 기술창업 지원 등
- (포스트 코로나 수요기술) 시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디지털·비대면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 및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함
 - 디지털 치료제, AI기반 실시간 건강상담 및 질병진단기술교육콘텐츠
 - 에듀테크, 무인 자율주행, 온라인 원격 서비스

- (감염병) R&D 강화를 통해 우수 진단기업을 육성하고, 방역 및 임상기술 확보를 도모함
 - 백신 · 치료제 핵심 플랫폼 및 방역·임상 기술 확보
 - AI ·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
- (소재 · 부품 · 장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100대 핵심품목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수입 의존도(90% 이상)가 높은 범용부품, 하이테크 관련 품목을 대상

■ 보건복지부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투자되고 있는 감염병 R&D를 국가 방역체제와 연계하기 위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함
 - 추진전략(안) : 1,462억원('19) → 1,688억원('20), 15.5% 증가
-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을 계획의 비전으로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 III-18]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자료 : 보건복지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19

2. 전략과제

1 초고속통신기술 보급 확대

5G 이동통신 분야 시장 전망 : 위기이자 기회

-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5G 이동통신분야 발전 및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함
- 주요국의 5G망 구축과 서비스 확산이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재택근무와 원격·온라인 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5G 투자가 오히려 촉진될 가능성도 높은 편임
 - 원격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실내활동 등 비대면 사회·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 → 초고속·고효율의 5G 수요 증가
- 상반기에는 주요국에서 당초 계획한 5G 투자 및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다소 발생되면서 지연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특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경기부양책으로서 하반기에는 5G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유럽) 프랑스, 스페인 등 EU 주요국들이 2020년 5G를 본격 상용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5G 주파수 경매 연기 등 당초 계획들이 지연된 상황임
 - 프랑스(통신규제청)는 예정되었던 4월의 5G 경매를 무기한 연기를 하고, 스페인도 6월말 예정이었던 5G 주파수 경매를 연기
- (미국)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사업자들은 2020년 5G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GSMA, '20.4)
 - 버라이즌, T-모바일, US 셀룰러 등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당초 계획된 5G망 구축 계획을 계속 추진
 - 2020년 내에 5G SA(단독망)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 시작 예정

표 III-10 | 5G 이동통신 분야 코로나19 영향 요인

부정적 영향 요인	◆ 주요국에서 당초 계획한 5G 투자 일정과 제품·부품 조달에 차질이 발생
	◆ 비대면 조치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오프라인 매장 폐쇄 등내용
긍정적 영향 요인	◆ 디지털·온라인 활동 급증으로 네트워크 확충 및 고도화 니즈 증대
	◆ 주요국들이 경기부양 및 Post-코로나 대응 차원에서의 투자 움직임
	◆ 이동통신은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할 국가 기반산업
	◆ 5G는 4차산업혁명 주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핵심기반

자료 :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12호, 2020.4.

■ 5G 이동통신 분야 선도 기회로 적극 활용

-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분야는 국가 기반 인프라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으로서 주요국들의 투자가 결국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5G 준비 순위면에서 1위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과 미국('19.5, 미국이동통신 산업협회에서 양국이 공동 1위)은 코로나19에도 투자를 오히려 강화할 전망
-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에 더욱 집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장에 대응하고, 세계 5G 이동통신분야 선도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5G 네트워크장비의 글로벌 역량을 확충하고, 5G 응용서비스 발굴 및 창출 역량을 강화
 - 2030년경에 도입될 6G 분야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

2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확산에 따른 지원강화

■ 비대면서비스 R&D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는 비즈니스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산업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전부터 서비스산업에는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비즈니스모델이 증가하는 추세
-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고령 인구 증가, 1인 가구 확산과 같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들 비즈니스모델이 현실에 구현되고 있음
 - 고객의 행태를 파악하게 하는 빅데이터와 AI 활용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비대면 비즈니스모델의 약점 해소
 - AR/VR, 홀로그램 등은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현장감이나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한계 보완
- 이에 비대면 비즈니스모델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과 이의 활용, 확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R&D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지원내용) 비대면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서비스R&D 및 상용화 연계 지원
- (지원 분야) 비대면 협업 솔루션, 실시간 건강상담 및 질병 진단, 온라인 교육, VR 전시체험, 원격 사후관리(A/S) 등 관련 비대면 서비스 개발, 비대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 표 III-11 | 서비스업종별 코로나19 관련 이슈 및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구분	코로나19 관련 사회현상 및 영향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해결해야 할 과제
도매 및 소매업 (특히, 소매업)	유동인구 감소, 대면 접촉 및 다중이용시설 회피 ⇒ (면세점, 백화점 매출 급감)	
	온라인 쇼핑(쿠팡, 마켓컬리), 무인 매장	오프라인 유통과의 갈등, 깃워커(Gig worker)
운수업	지역 간의 이동 제한, 유동인구 감소 ⇒ (항공사 운항 축소, 대중교통 통행량 감소)	
	물류(드론 배송), 자율주행차	제도 미비, 규제
숙박 및 음식점	대면 접촉 및 다중이용시설 회피, 유동인구 감소 ⇒ (호텔 등의 객실판매액 급감, 음식점 매출 감소)	
	숙박 예약(여기어때), 음식배달(배달의민족), 간편식 (편의점), 터치스크린 주문	직 워커(고용여건 이슈)
콘텐츠산업 (출판, 영상 등)	대면 접촉 및 다중이용시설 회피 ⇒ (영화관, 게임방 등의 이용객 축소)	
	OTT(넷플릭스), 인터넷게임	-
금융 및 보험업	대면 접촉 및 다중이용시설 회피 ⇒ (금융기관 방문고객 감소)	
	인터넷뱅킹, 인터넷전문은행, P2P(펜딩클럽)	제도 미비, 다양한 규제, 개인정보 활용 여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대면 접촉 회피 ⇒ (재택근무 확산)	
	플랫폼 기반 (로톡, 위스켓), 화상회의(줌 등 SW)	기술개발(SW)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지역 간의 이동 제한, 대면 접촉 및 다중이용시설 회피(MICE, 콜센터,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 ⇒ (여행사 폐업, MICE 행사 취소 등)	
	여행 예약(아고다), 디지털전시관	-
교육서비스업	대면 접촉 및 다중이용시설 회피(산업 전반) ⇒ 개학 연기(공교육), 휴원 권고(사교육)	
	인터넷교육(클래스101, VR 간호실습)	제도 미비, 규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대면 접촉 및 다중이용시설 회피 ⇒ (코로나19 이외 질환 진료의 어려움)	
	원격의료, 원격면회	제도 미비, 다양한 규제, 개인정보 활용 여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유동인구 감소, 다중이용시설 회피 ⇒ (공연 취소, 관중 없는 스포츠경기)	
	콘텐츠 영상화(SAC on screen), 취미생활(하비인더박스)	AR/VR, 시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중이용시설 회피 ⇒ (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 이용 감소)	
	플랫폼 기반 (태스크래빗, 런드리고)	-

자료 : 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 모델과 정책 과제, 2020.5.

■ 비대면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투자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사회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야함
- 비대면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갖춰져야 함으로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핵심 기술 : UX/UI,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 비대면 제품의 국산화 지원

- 현재 주로 사용되는 화상회의 솔루션, 협업솔루션,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상당수가 외산 제품인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들이 외산 제품에 의해 지배될 수 있음
- 이들 제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산 제품의 기능 및 품질 향상, 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공공부문의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방안 등이 필요함

■ 비대면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 노력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면 업무 문화에 익숙한 기업이나 조직의 경우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근무지 이탈 등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자주 보고되고 있음
 - 정상근무 환경에서 유연근로제, 비대면 보고체계 등을 자주 접목해봄으로써 문화개선 유도
 - 대-중소기업간 스마트워크 준비 및 운용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워크 가이드라인 제공과 스마트워크 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등이 요구

■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호정책 수립

- 디지털 기기가 없어서 온라인 개학에 대응하지 못하는 초등, 중등학생들이나 대면 접촉이 익숙하고 인터넷 사용경험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임
 - 디지털 리터러시와 격차를 줄이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제도의 마련이 시급

3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연계한 정책방향 설정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대응 과제 제시

- 산업부는 향후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발표함
 - 세계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K-방역·K-바이오 글로벌화, 비대면 산업 육성

보건환경 분야 대응방향

- (GVC 재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유통활성화, 핵심품목 관리,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
- (산업현장 리셋) 감염병 발생시에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 확산 →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 극대화 지원
- (K-방역·K-바이오 육성) K-방역, K-바이오가 K팝·기생충에 이은 新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 방안을 모색함
 -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활용 →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도약

경제활동 분야 대응방향

- (비대면 산업 육성)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함
 -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투자 확대
- (저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으로 저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함
 -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축소

기업경영 분야 대응방향

- (기업 활력·투자 촉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이 요구됨
 -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사회가치 분야 대응방향

- (경제주체간 연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異업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협업 연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함

■ 교역환경 분야 대응방향

- (글로벌 리더십) 방역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

| 표 III-12 |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과제

구분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대응과제
보건환경	간헐적 감염병	감염병 빈발	①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 ②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글로벌 조달	로컬 조달	③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구축
경제환경	대면, 석유수요 증가	비대면, 석유수요 감소	④ 비대면산업 육성 ⑤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기업경영	비용절감, 효율	재고확보, 회복력	⑥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활성화
사회가치	개인·효율	연대·협력	⑦ 기업간 연대 및 협력
교역환경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보호무역	⑧ 글로벌 협력 리더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정책과,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2020.5.

4 오송 중심의 국제/국가적 공동연구체계 구축

■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 즉 생명안보의 관점 필요

- 감염병 발병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및 진화 패턴, 감염병 확산경로, 대응상황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감염병 발생국과 공유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유행과 패턴을 예측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공고화해야 함
 - 위험의 징후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 충북 오송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6개 국책기관을 비롯한 바이오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존재함

■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 마스크 대란,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위기 상황에서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자원에 대한 대비 필요하며, 'R&D-규제-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재검토해야 함

■ 국제공동연구의 강화 필요

-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글로벌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제4절 농축산

1. 현상과 이슈

1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¹⁹⁾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비중은 67.6%,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비중은 69.5%,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는 비중은 74.9%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매우 민감해졌음
 -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비중(20.3%)이 감소했다는 비중(8.2%)보다 높았으며,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는 비중이 48.6%로 높게 집계
- 수입산 농축산물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하고 외식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음
 - 코로나19 이후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는 비중은 27.1%로 감소했다는 비중(14.1%)보다 높았지만,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는 비중은 7.0%로 감소했다는 비중(32.1%)보다 낮게 집계
 -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는 인원은 전체의 79.5%로 매우 높았고, 이들은 외식 횟수(3달 평균)가 평균 63.6% 감소했다고 응답
-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은 늘고 화훼류는 줄었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진정 또는 종식되면 연간 농촌관광 횟수를 전년에 비해 늘릴 예정이라고 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 증가 비중은 21.2%이며 감소했다는 비중(8.1%)보다 높았으며, 꽃(절화) 구매량이 감소했다는 비중은 33.2%로 증가 비중(6.0%)보다 높게 집계

19) 이명기·순병민·우성휘,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KREI 현안분석 제7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5.8.

-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면 본인의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중은 44.5%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중(12.9%)보다 높게 집계

■ 농식품 소비분야 영향분석²⁰⁾

-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외식업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가정 내에서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증가(47.7%)하면서 오히려 소매업체의 식재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소매점 POS 자료 분석을 통한 소매유통채널의 식품 매출액 변동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2월 3주차부터 매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코로나19의 영향이 관측되기 시작
 - 소비자 이용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소매유통채널은 개인대형(2.3%p), 체인대형(1.0%p), 편의점(0.6%p) 및 개인중형(0.6%p) 순으로 주박가 상권에 위치한 중대형 규모 마트들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
- 비대면 채널인 온라인 소매유통채널의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등 구매형태에 변화가 발생함
 - 소비자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 응답자의 56.6%가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입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30대(63.4%), 40대(60.8%) 및 서울 거주자(62.1%) 중심으로 더 많이 증가
- 외식 횟수는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배달/테이크아웃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코로나19 발생으로 전체 응답자의 81.0%는 외식하는 횟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배달/테이크아웃 횟수에 대해서는 44.9%가 증가하였다고 응답
- 비타민 및 무기질(55.0%), 인삼류(31.7%)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농식품 국내 생산의 중요성 및 식량안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중요성 인식도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의 84.2%가 농식품의 국내 생산 및 자급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 식료품의 공급에서 국내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인식들

-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을 늘리는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에는 줄이는 소비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국산 농축산물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20) 김상호 외 3인, KREI현안분석 제74호, 2020.5.20.

-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거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운 국산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됨에 따라 한국의 것이 세계에서도 우수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크게 줄어들음에 따라 외식 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도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을 늘리고 화훼류 구매량은 줄이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화훼류 수요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 화훼류 소비는 졸업식·입학식 취소, 각종 행사의 취소와 연기 등으로 인해 크게 줄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집 주변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 및 일상 주변에서의 가치 추구 등은 향후 화훼류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
-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된 이후에는 농촌 관광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귀농·귀촌 의향 증가, 국산 농축산물 수요 증가 등은 향후 농촌 관광에 긍정적 요인이며, 국내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고 해외에서는 지속이 된다면, 국내 농촌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농업과 식량부문에 미친 영향

식량 위기에 대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경고

- 식품 및 농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음
- 우리나라 식량 수급구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구조로 식량 수출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면 국민의 먹거리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연간 곡물 수요량은 2,100만 톤인데 비해 생산량은 450만 톤으로 자급률 22.0%에 불과

- 충청북도의 식량 자급률은 142.2%로 자급률은 초과하고 있으나, 청주시(55.1%), 옥천군(22.7%), 진천군(48.0%), 단양군(34.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충북의 축산물 자급률은 쇠고기 268.4%, 돼지고기 76.7%, 닭고기 84.2%로 소비 감소 또는 판매 부진이 곧바로 농가소득의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식량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대응력 강화를 중심으로 UN식량농업기구 '10대 권고사항'의 내재화가 요구됨
 - 학교급식의 지속 운영, 긴급한 식량 수요 대응방안 마련, 취약계층의 기본 식량 수요 보호, 영양공급 확충, 영양부족 사태 예방, 공적 보조 정책을 식량가격 안정에 조율 등
 -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식량 구호물자 유통, 인도주의적인 지역적 구호활동 허용, 효율적인 구호식량 비축 체계 마련, 전 가정에 식량 구조 관련 정보 제공 등
-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우며, 품목별로는 장기간 비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공적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영양 상태는 면역력과 감염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며, 거시적으로 방역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식량의 생산 및 도입, 보관, 공급, 분배 등에 대한 제도적 접근 요구

■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출하 차질

-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한 농업생산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 농작업은 각 시기별로 제때 하여야 하는 작업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면 큰 손실이 발생
- 현재처럼 농작업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한다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이러한 리스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Ⅲ-19] 외국인근로자 입국 연기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
자료 : KBS 뉴스, 농번기 농촌 인력 수급 비상, 2020.4.17.

3 학교급식 중단과 농촌관광 침체에 따른 농가경제 악화

■ 휴교로 인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중단

- 초·중·고등학교가 휴교되면서 학교급식도 중단되어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해오던 업체 및 농가 소득 감소 위기에 봉착함
 - 개학 연기로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 중심의 학교급식 납품농가들의 판로 상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농촌관광 감소

- 여행에 대한 수요 감소가 농촌관광에도 영향을 미쳐 농촌을 찾는 관광객 감소함
 -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 1~4월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은 122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3만 명보다 약 4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매출액도 38% 급감

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부문 변화 예측

■ 정책의 변화방향 예측

- 전염병(바이러스)이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기후 및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면서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임
 -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 직불제의 확대와 친환경농업정책 일반화 등
- 농촌에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증가로 농도 균형적인 정책이 일반화될 것임
 - 선택적이고 맞춤형의 정책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일괄적인 정책이 새로이 도입
 - 농민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일괄적이고 보편적인 소득지원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농업구조의 변화와 위탁영농회사 출현

- 농업의 기업화와 규모화, 농지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4차산업혁명 관련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서 스마트 팜, 스마트 축산 등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정 생산 면적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개편 요구

-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인구가 줄면서 기존의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위탁영농회사가 출현할 것임
- 아울러 농사만 짓는 전문 농사꾼 즉, 임금 노동자의 형태로 현재의 농업인과는 달리 공장에서 일하듯이 농사를 짓는 전문 노동자의 출현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

■ 관행적 농법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

- 고투입 저효율의 관행적이고 산업적인 생산방식에서 농업생태계를 보호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이 될 것임
- 무농약, 유기농약 이외에 산발적으로 추진된 친환경 농법(오리농업, 자연농법, 태평농법 등) 등이 새로 추진되고 전문화되며, 밀집화된 가축 사육에서 조방적이고 친환경적인 축산이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
- 면역성이 강한 작물을 발굴하고 개량하거나, 기존의 작물 중에 면역성이 뛰어난 작물들을 중심으로 한 재배가 이루어져 작물 생산체계가 변화될 것임
- 전통적으로 면역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생강, 겨자, 부추, 파 등 이외에 외래 작물 등이 선별되고 도입될 것으로 예상

■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가치의 중심을 '생산물'에서 '사람'으로 전환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도모함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농정 이념에 경제적 가치 외에도 생태·환경 유지·보호,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
- 농정 목표를 농업인 소득 증대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까지로 확장시켜 지역 공동체, 복지 및 지역개발, 먹거리 체계 등에 정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농정 대상을 '농업과 농업인' 중심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하여 안전·안심·질 좋은 먹거리, 환경 유지, 농촌다움 등 농업이 지닌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함
- 지역별·주체별 특성과 역량이 시의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농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권과 협치 중심의 농정추진체제로 개편되어야 함

2. 전략과제

1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노동력 확보

창업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 청년들의 영농 창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농지 시설, 교육 컨설팅 및 자금 등 지원을 강화함
 -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을 선발(연 1,600명 규모), 정착지원금·창업자금, 맞춤형 농지 및 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실시
 -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실패 최소화를 위한 심층 창업·투자 컨설팅 실시
 - 청년 특화형 직거래장터 기획·개설 지원 등 새로운 유통경로 지원(ex : 온라인 판매 컨설팅 시 청년농업인 우선 지원, 온라인몰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 실습 중심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함
 - 영농 지식·경험,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추진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준비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함
 -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고, '귀농 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 도입·운영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을 확산함
 - 혁신도시 공공기관, 군대, 학교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확대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순차적으로 확산 추진
 - 로컬푸드 판매뿐만 아니라 교육, 체험, 취약계층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먹거리 복합문화센터 설치
- 농산물 가공·체험·관광 등 산업간 융복합화 촉진과 유희시설을 활용한 농촌 창업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함

-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가공·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화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확대 추진
-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경관우수지역 등을 활용한 현장 주도 농촌여행·체험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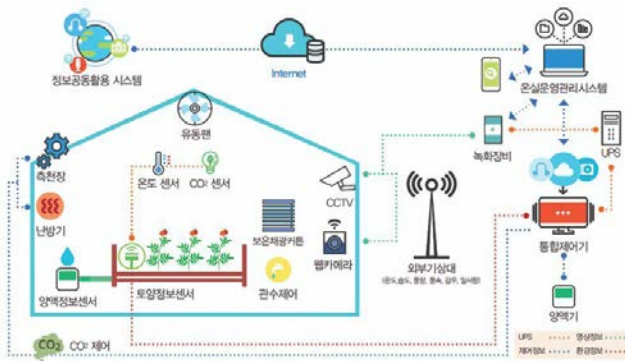
■ 농업·농촌 노동인력 수급 점검 및 인력 대책 마련

- 고령농이 다수인 농가 특성상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작물의 파종·수확 시기 및 노동투입시간이 높은 작목에 대한 인력 수급 대책 점검이 필요하며, 농가 농업 노동을 대체할 농기계 및 농작업 대행 사업에 대한 준비태세를 구축함
 - ‘계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운영시기 점검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채용
 - 특히 고령농, 여성농업인 대상 소형·경량 농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
- 농어촌관광·체험마을(농어촌민박) 안전점검 및 지원대책을 마련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세정제, 마스크, 시설 청소용 살균제 보급 지원, 소상공인에 준하는 정책지원자금 지원, 코로나19 확산 진정 국면에 대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체험시설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매뉴얼 마련 및 시행
 - 감염 추이 감소 대비 농촌관광 수요 재창출을 위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및 수학여행 등 1교 1촌·1사 1촌 결연 운동 등 홍보 대책 마련
- 농업인 영농 및 필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
 - 병해충·전정교육 등 적기 정보 습득이 중요한 영농교육의 경우,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의 현장중심 지도체계 강화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군부대 등 대상으로 판로 확보대책 마련
- 마을단위 다중(공동)이용시설 감염 확산 방지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체계 강화
 - 자가격리(감염자)로 인한 먹거리 취약계층(독거 고령소농가, 자급농가 등) 대한 먹거리 및 생필품 지원책 마련 필요

2 첨단농업 도입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절감

스마트팜 도입 적극 지원

-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고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하여 충북의 특화 작목 및 농업 형태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지원을 확대함
-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생육환경에 맞춘 온도·습도 조절 및 빠른 병해충 진단을 통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자동 관수 등으로 농작업을 줄임으로써 노동력 감소 기대



[그림 III-20] 시설원에 분야 스마트팜 구성도

자료 : 농수산신문, 스마트팜을 더 스마트하게, 2018.4.

지형에 맞는 농기계 개발 및 도입

- 충북지역은 크게 남부·중부·북부에 따라 지형이 다르고 재배하는 작목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농기계 개발이 필요함
- 현재 논농업 중심의 농기계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밭농업에 대한 농기계 개발은 미흡한 상황으로, 충북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맞춤형 농기계 개발 필요



[그림 III-21] 농업용 드론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미국 4차산업혁명에 따른 농업 제조공정의 변화 및 사례, 2019

3 농산물 안정적 수급·유통 시스템 확립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산물꾸러미 사업 확대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확산을 도모함
 - 혁신도시 공공기관, 군대, 학교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확대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순차적으로 확산 추진
 - 로컬푸드 판매뿐만 아니라 교육, 체험, 취약계층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먹거리 복합문화센터 설치
- 현재 충청북도는 다양한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반조리 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농산물꾸러미의 개발도 필요함
 - 현재 충북도 학교급식에 제공되었어야 할 농식품을 대상으로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천군은 진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의 특별 기획전을 통해 '생거진천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더욱 활성화
 -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인 신선농산물에 대한 꾸러미뿐만 아니라 밀양시 사례와 같이 반조리 식품으로 사부사부·된장찌개·감자수제비 등 밀키트(Meal Kit : 식재료를 손질해 요리법과 함께 용기에 담은 제품)와 가공식품도 함께 개발하여 판매 필요



[그림 Ⅲ-22] 진천군 농산물 꾸러미 온라인 판매

자료 : KBS 뉴스, 진천군 지역 농산물 꾸러미 온라인 판매, 2020.4.20.

■ 지역 농수축산·식품 홍보 및 마케팅, 판로 확대 지원

- 충북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면역력 강화 품목 개발 및 온라인 특별전 등 홍보 확산이 필요함
 -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농수산물 및 기능성 식품 소비 수요 증가에 대응, 친환경 농산물 효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판촉행사 등을 통해 잠재 수요층 구매 유도
 -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신호능 규명 등 기능성 식품의 R&D 및 상품 개발 확대, 유통기한 등 공급 애로사항 극복을 위해 농수축산물을 활용
 -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확대로 틈새시장 공략 등 부가 가치 창출
- 특별 판매행사 개최 등 지역 농수축산·식품 판매 및 판로확대를 지원함
 - 시·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과일·샐러드 등 신선편이 농산물 소비 촉진
 - 아파트 부녀회 등과 협력을 통해 카탈로그 등 비대면 매체에 의한 홍보를 통해 지역의 집·배송 비스업체와 연계한 농수축산·식품 판매촉진 강화
- 가정 내 개별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농수축산·식품에 대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지원함
 - 소비자가 원하는 다품목 소량배송이 가능하도록 꾸러미 형태의 직거래 채널 확보 지원 및 공급 가능한 품목에 대한 홍보 강화
 - 제품 다양화를 통한 식재료 취급 비중 확대 및 당일 배송 등 소비수요 맞춤형 배송서비스 지원
 - 온라인 거래 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신선식재료 품질관리를 위한 물류비 지원 확대와 기존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우수 농수산물 판로 확보 지원
 - 편의점 및 온라인 직거래 수요에 대응한 소용량·소포장 식재료 및 식품 개발·공급 확대
 - 생산자 연합(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와 소비자 연합(협동조합),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창업 지원

■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 간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 농수축산·식품분야 생산 및 소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지원방안의 지속발굴이 요구됨

- 농축산식품분야 전담 대응체계(팀)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피해 장기화에 대응한 농수축산분야 피해상담센터 운영
- 생산물, 소비처, 유통경로(판로) 등 공급체계에 대한 상시 피해상황 및 규모 조사 실시
- 코로나19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
 - 농수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도매시장 방역 강화와 함께 도매시장 휴업 대비 대체 출하 및 연계 시스템 구축
 -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확대 등과 같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안정적 수요처 확보
 - 유통업체, 소상공인, 도매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 농축산물의 안정적 조달 시스템 구축

온라인 판매 교육 및 지원을 통한 확대

- 공공에서 하는 온라인 판매와 더불어 농업인이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마케팅 및 판매에 관한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더불어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강화가 중요함
 - 기존의 신문·방송 등의 홍보방법과 더불어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YouTube) 등의 인기 먹방·쿡방 채널을 활용한 홍보방안 모색

4 농식품 수출 및 농촌관광으로 新소득 창출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구축

-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많이 향상되었으므로, 이를 해외 농산물 수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수출정보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수출 동향을 보면 2020년 4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품목은 김치, 라면, 과자 및 소스류가 대표적)
- 방역선진국과 더불어 청정국가라는 이미지로 인해 향후 농산물 수출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신선농산물이 배송시간이 길어 신선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국가의 배송비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해외여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편과 새로 개발된 포장재로 보완
- 또한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국내 농식품 홍보에 활용하면 홍보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신선농식품보다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필요

새로운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이 어려워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마이크로투어리즘' 형태로 농촌관광 활성화가 예상됨
 - 소규모로 떠나는 '마이크로투어리즘'으로 여행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농촌 관광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
-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민신문(2020.5.14.) 기고를 통해 친구·연인·가족끼리 소규모로 떠나는 '마이크로투어리즘'으로 여행 형태가 변화할 것이며, 농사체험 뿐만 아니라 교육·미식·치유 등 관광객들의 개별적 욕구를 만족 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도 변해야 한다고 했음
 - 청년, 공정여행사 같은 사회적 조직이 농가를 조직화하고, 유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농산물 가공·체험·관광 등 산업간 융복합화 촉진과 유희시설을 활용한 농촌 창업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기반 강화가 요구됨
 -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가공·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화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확대 추진
 -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경관우수지역 등을 활용한 현장 주도 농촌여행·체험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제5절 도시공간

1. 현상과 이슈

1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 고밀·집중에서 저밀·분산으로

도시공간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를 비롯한 교육·의료·문화서비스, 업무·회의 등에서 비대면 방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 문화, 업무, 주거기능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는 중소도시 및 농촌도시에 비해 팬데믹에 취약하다는 것이 급변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고 있음
- 이동거리를 짧게 하고 대면접촉을 줄이면서도 성장의 메커니즘을 촉진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사회적 거리 유지 및 안전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밀도의 공동주택 개발보다는 저밀도의 공동주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감염 공포 확산에 따른 개인간 떨어져 활동하는 심리적인 공간 이용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공간계획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압축도시(Compact City)와 복합용도(MXD) 지향형 도시구조에 대한 재성찰 필요

네트워크 도시지향의 미래도시 공간관리 계획

- 대도시를 작은 도시로 나누는 대도시의 분절성과 이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함
 - 소량배송이 급증하고 도보 이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심 물류센터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하고 도보로 접근하는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
-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쇼핑 활성화 및 오프라인 상가의 수요 감소세가 관찰됨
- 근무 공간 확보,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저소득층, 온라인 쇼핑이나 원격진료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의 디지털 격차나 근무환경 격차 대응계획 수립이 요구됨

직주근접의 보도권 단위의 생활권 계획

- 출퇴근 시간이 길지 않고(대중교통 이용시간 줄이기), 재택근무가 용이한(유사시 출근 가능하기) 직주근접의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으로 계획기조가 변화될 것임
 - 재난·재해,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축물자 창고, 의료기관(보건진료소), 식료품 창고 등 생활기반 시설을 도보권 단위로 조성
 - 긴급 재난상황발생시 자족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필수품 공급 서비스 시스템 마련

2 스마트 도시 서비스 수요 대응 요구

디지털 경제 전환 여건 성숙

- 정보통신 기반의 스마트 기술 활용 수요 증가에 따른 홈코노미 경제 부상, 온라인 교육 등 스마트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
- 충북은 세종과 함께 지역별 배달 수행건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세종 61.8%, 충북 54.9%, 울산 42.6% 등(파이낸셜 뉴스, 2020.5.9.)
- 정부의 스마트 도시 육성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충북형 스마트 도시 육성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 정부는 2017년 9월 세계 최초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마트도시법)」을 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역할을 제도화

스마트 워크(Smart Work) 공간체계 구축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택근무 이외에도 제 3의 스마트 워크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스마트 워크센터는 광대역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철저한 개인정보안 시스템 등 ICT 시설을 갖춰 스마트 워크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아파트 내 공유공간 등을 활용

시·군 단위 정밀 데이터 구축 사업

- 국가나 광역단위에서는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보다 정확한 예방 차원(Feed Forward)의 정책 결정을 위해 시·군 차원에서도 구축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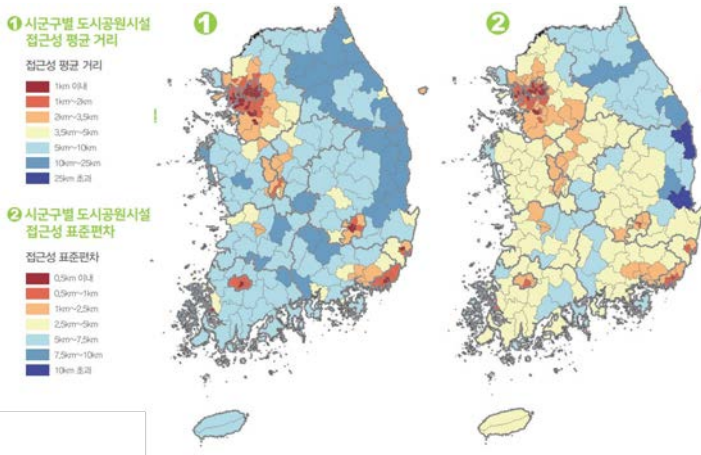
3 공원·녹지시설의 효용성 증가

도시공원 이용률 증가²¹⁾

- 구글이 발표(2020년 4월 3일)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²²⁾’에 의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 이용자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되기 전보다 평균 51% 증가하였음(1개월 기준)
 - 반면 식당·카페·영화관·쇼핑몰 등 소매·오락시설 방문은 19% 감소하였고, 지하철·버스 등 교통 환승시설은 17% 감소, 근무지(직장) 방문 또한 12% 감소
-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밀폐시설 대신 넓고 큰 공원을 선호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음

공원 품은 아파트 수요 증가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집 앞에서 간단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품아(공원을 품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음²³⁾
 -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내 집 마련 시 집 앞 공원이나 숲의 유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구들이 늘면서 공세권의 가치가 올라 갈 것으로 진단
- 공원과 연계된 주거지역은 안정감과 치유감을 누릴 수 있어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23] 시군구별 도시공원시설 접근성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2017 국토모니터링보고서, 2018

21) 중앙일보 보도자료, 코로나가 바꾼 동선, 구글은 안다...伊 올스름, 한국은 공원 51% ↑, 2020.4.3.

22) 구글, 지역사회 이동성보고서,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

23)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로 공원 품은 아파트 수요 는다, 2020.5.3.

4 상업 및 주거공간의 기능변화

상업지역의 새로운 혁신 요구

- 빈상가, 빈점포의 증가로 상업지역의 기능이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온라인 쇼핑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물류창고 등에 대한 공간 요구 증가 전망
- 상업지역의 지가 조정 및 다운 조닝(Down Zoning) 등을 통한 공간 변화 모색이 요구되며, 전통시장 등 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경우, 새로운 용도로의 전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최소 주거면적의 확대와 공용이용시설에의 불안감

-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다양한 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주거면적에 대한 확대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내에서 근무(사무실), 운동(운동실), 교육(온라인 강의), 온라인구매 및 저장(작은 창고, 배달)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주거공간이 요구될 수 있음
- 반면 주택지 내의 공용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그와 반비례하게 주민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5 농촌지역(비도시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가치 활용

쾌적성(Amenity)에 대한 가치 증대

- 코로나19 사태이후 혼잡한 도시의 삶에서 여유를 느끼기 위해, 주말동안 농촌 생활을 즐기는 5도 2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도시마을(Urban Village)계획에 대한 관심 제고
- 귀농, 귀촌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농촌지역에 대한 높은 거주수요라는 기회요인이 존재함

농촌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수요 증가

- 농촌지역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식사, 담화, 모임, 회의 등)하는 경우가 많아 기타지역 시설에 비해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이 요구됨

2. 전략과제

1 성장거점도시 중심,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한국판 뉴딜 정책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성장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함
 - 전략산업과 연계한 오송 보건의료 데이터 특구, 혁신도시 에너지 데이터 특구 조성
 - 신도시 구역 상권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 AI기반 상권분석 정보 제공
 - 오송, 오창,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성장거점 지역 5G 전국망 조기 구축
 -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지역 공공 정보통신망 구축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
- 한편 충북혁신도시 오픈랩(개방형 연구공간) 입지를 활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AI스쿨과 연계한 AI·SW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 비대면 산업 스마트 교육환경 선도모델 구축

- 충북혁신도시 이전 교육연수 기관 및 산학융합지구(오송, 혁신도시) 연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교육환경 선도모델’을 구축을 도모함
 - (기술·인프라 조성) 기술유관기관의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을 통하여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 (콘텐츠 제작·보급) 스마트 교육을 기관 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지역 교육기관 확산을 통한 인재양성(체험관, 시험학교 등)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 입지로 사업수행 동력 및 성과 극대화가 예상됨

스마트 교육 기술·인프라 조성	스마트 교육환경 선도모델 구축	스마트 교육 관련/콘텐츠 제작·보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림 III -24] 스마트 교육환경 선도모델 사업계획

자료 : 연구진 작성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1개 시·군 구축 완성

- 충북도에서 시·군 통합플랫폼을 연계하는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6개 시·군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방법·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기반 S/W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지속 추진
- 아직 구축되지 않은 시·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새롭게 구축할 광역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체계 완성을 도모함

■ 스마트 제로 에너지 시티 사업 추진

- 노후 공공건물 전수 조사 및 에너지 기반 그린 리모델링 추진하고, 스마트 제로 에너지 시티 실증사업의 충북혁신도시 확산을 도모함
 -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 진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 스마트 제로 에너지 시티 실증사업 추진 중
- 국가기술표준원 연계 시험연구원 특구 조성으로 그린 뉴딜 연계 시험연구원 유치방안을 모색함(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연계)

2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계획 수립²⁴⁾

■ 스마트 워크 공간계획 수립²⁵⁾

- 스마트 워크란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재택 근무가 어렵거나 모바일 워크가 일상화된 근무자들에게 편리함
 -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블록체인 기술, 클라우드 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및 보안시스템과 같은 스마트워크 비즈니스를 활성화 기대
- 주거지역 내 스마트 워크 공간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간은 어린이 돌봄, 창조적 휴식 공간 제공 등 ICT 사업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임

24) 서울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자료집, pp.53-57, 2020.5.12.

25) 부산연구원, Post COVID-19 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pp.138-139, 2020.4.

■ 공간의 다기능화 및 유연성 강화

- 비대면 활동 증가로 상업·업무시설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현행법상 권장 용도, 업종 제한, 주상비율 등에 대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공실인 상업·업무시설을 물류시설로 용이하게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3 공간구조 연계 공공보건 의료시스템 구축²⁶⁾

■ 방재거점빌딩 건축 유도

- 비상용발전소, 급수 및 의료시설, 비축물자 창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 시설 등 구축하고, 전염병 및 재난 발생 시 확산 억제 및 대응을 위해 방재거점 빌딩 건설을 추진함

■ 생활권 단위 공공보건지소 확충 및 병원 설립

- 공공보건지소의 생활권 단위 공급을 추진함
- 생활권 내(도보 10분 이내 거리) 보건지소 공급, 감염병 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병원 설립 추진

4 도시 내 공유공간으로의 공원·녹지체계 구축

■ 도심공원의 확충 및 접근성 향상 추진

- 공원의 이용 증가현상, 감염병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노인·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도심지역의 공원 확충이 필요함
- 도심 내 주거단지 개발에 있어 녹지 총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평지에 공원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의 방향성을 유도함(빼기형 녹지공간 확보)

■ 주거지 연계 생활권 녹지체계 구축

- 자연녹지의 생태회복력 강화, 감염병 전파 차단수단으로 공원녹지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산, 수변, 공원 등이 주거지의 중심에 배치되도록 설계하고, 바람길 및 녹지축 고려

26) 서울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자료집, pp.68-72, 2020.5.12.

■ 생활 밀착형 센터 조성

- 현재는 주거단지에 거주기능, 이웃과의 커뮤니티 기능이 강조되었다면, 향후 개인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교육, 여가)에 관심이 늘어날 것임
- 주거단지 내 주민공용시설에 대한 필요성 보다 입주민 개개인의 건강, 여가활동, 쇼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임(개별 운동시설, 개별 공부방, 개별 택배보관함 등)
- 재해·재난, 감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자가격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저감시켜주는 오픈스페이스의 공급이 필요함
 - 주택 근처에서 공원 녹지, 수변지역을 언제든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센터 확보



[그림 III-25]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

자료 : Youtube, Urbavirius/Podcast 3/The 15 minute city, 2020.

5 상업공간의 기능 재편 도모

■ 상업용도 밀도 조정

- 향후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빈 상가 및 빈 점포의 발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제공되는 상업지역 비율 조정을 통해 적정 규모의 공급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요구됨

■ 기존 상업지역의 다운 조닝(Down Zoning)

-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가 수요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상업용지의 용도지역 전환 및 타 용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기존의 상업지역 중 상업기능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다운 조닝을 추진하여 새로운 도시기능(공원, 공공시설 등) 도입을 유도함

■ 전통시장 공간 혁신 도모

-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서는 상가시설 개선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택, 오피스, 공동물류창고, 공동부엌, 공동매장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

6 주거시설의 위생 강화 및 안전 공간 설계

■ 고위험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시급

- 고시원, 쪽방촌 등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환기 등 위생 및 방역이 어려운 실정임
-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여 열악한 노후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함

■ 실내 환기 등 다양한 위생 방역시설 도입

- 현관클린룸, 현관 개수대, 열회수 환기장치, 채광을 통한 살균 등 다양한 실내 위생시설이 도입되면서 거주 공간에서 위생과 방역에 대한 기능이 요구될 것임
- (공기순환용 환기시스템 보급사업 추진) 학교, 교회, 오피스 등 다중이 밀집하는 시설에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기순환이 원활하도록 하여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 방지를 도모함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기준 강화

- 종교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박물관 등 다중이 일시에 모이는 공간에 대한 엄격한 위생기준 강화가 요구됨
- 병원,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학원, 독서실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 기준 강화

7 농촌공간(비도시지역)의 활용 극대화

■ 안전한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 증대

- 공동엘리베이터, 공용주차장 등 다양한 입주민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보다는 개인정원 등이 구비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에서 머물며, 개인위생에 힘쓰고, 외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전원주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수 있음

■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마을(Urban Village) 조성 계획 수립

-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건강한 시기에 들어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여가를 즐기면서 노후를 맞는 마을 조성을 도모함
 - 대단지에 주거, 의료, 돌봄 및 여가시설을 갖춘 은퇴자 주거복합단지(CCRC :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모델 적용

■ 농촌과 중소도시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도시 구축

- 상대적으로 침체가 예상되는 중소도시는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함
- 수요자 근접형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농촌과 중소도시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함



[그림 III-26]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설계사례

자료 : REES 홈페이지, Pacific Plaza Continuing Care Planning Retirement Community, 2020

8 세계 방역선진국의 상징거점 기관 유치(가칭 생명·평화 유엔대학)

UNU(유엔대학교) 개요

- ◆ 국제연합에 의해 설치된 대학원 대학은 일본의 유엔대학과 코스타리카의 유엔평화대학 등 2개소
- ◆ 초기에 유엔대학교는 대학본부, 직소의 연구, 연구센터, 기존의 연구소와 대학의 협력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
- ◆ 현재 유엔대학교 본부는 일본 도쿄도의 시부야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3개국에 15개의 분교가 운영
- ◆ 유엔대학교 기금으로 일본정부가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투자함에 따라 유엔대학교 본부가 일본 도쿄의 시부야구에 위치

■ 국가사업으로서의 당위성 논리 전개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세계가 대한민국을 방역선진국으로 인식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가차원에서 세계적인 거점기관의 설치 당위성이 확보됨
 - △유엔 정신에 부합(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세계 3대 바이오메카를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BT기반 국가단지

■ 충북 청주시 입지 우월성 홍보

- 오송 제3국가단지(바이오헬스 분야) 200만평 사업타당성 통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 7월), 최근 방사광 가속기(IT 기반)의 오창 유치로 시너지 효과 제고가 가능함
 - 충북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고향, 유엔과 협조체계 구축 가능
 - 장소 :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일원(△단기 : 오송 제2산업단지 바이오 플리스(경제자유구역 지정, △장기 : 오송 제3국가단지 후보지 중 교육연구시설 용지 확보)
 - 활용부지 : 162,930㎡(약 5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오송 2단지)

■ 효율적 유치 전략수립 필요

- 유엔대학, 유엔평화대학에 이어 유엔 산하 제3의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단지 분교로서의 유엔 바이오대학이 아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인식하여야 함
 - 국가가 주도하되 장소는 충북 오송(예 : 부지제공 충북)
 - 외교부, 국토부, 산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연계전략 모색
 - 사이언스 빌리지, 대덕연구단지, 충청권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TF 구성 및 바이오 기반 유엔대학 설치 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 수행

제6절 교통물류

1. 현상과 이슈

1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여객통행량 급격히 감소

시내버스, 택시 등 도시 대중교통수단 이용객 감소

- (시내버스) 2020년 1/4분기 청주시의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보다 청주시 확진자 발생 이후인 3월 더욱 큰 폭으로 감소
- (택시) 충북도 소재 동원택시(법인) 93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월 말~3월초) 택시수입금이 약 3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도내 확진자 발생,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3월 초에 가장 큰 피해(약 52% 감소)

표 III-13 | 청주시 시내버스 1/4분기 승차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합계
2019년	3,442,159	2,986,726	3,916,219	10,345,104
2020년	3,350,128	2,676,985	2,007,737	8,034,850
증감율	-2.7%	-10.4%	-48.7%	-22.3%

자료 : 청주시 내부자료

표 III-14 | 2019년 대비 2020년 동 기간 택시 수입금 비교

(단위 : 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2월 23일 ~ 3월 6일	61,288,065	39,144,793	-22,143,272	-36.1%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광역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집계

- (시외버스) 충청도내 시외버스 이용객 조사결과 코로나 발생 전 대비 발생 후 이용객이 약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도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말의 경우 1월 대비 50% 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노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새서울고속의 이용객 감소가 가장 높게 집계

표 Ⅲ-15 | 코로나19 발생 전후 시외버스업체 1주일 승객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코리아와이드 대성	서울고속	새서울고속	충북리무진	친선고속	합계
코로나19 발생전 (1월14일~20일)	25,658	54,072	48,480	26,101	26,101	180,412
코로나19 발생후 (2월18일~24일)	15,636	35,899	28,412	17,127	20,187	117,261
증감율	-39.1%	-33.6%	-41.4%	-34.4%	-22.7%	-35.0%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 (KTX 오송역)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철도이용객 감소로 2019년 1/4분기 이용객 196만 명에서 2020년 150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오송역은 개통 이후 현재까지(2011~2019년)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 추세 (120만명→862만명, 연평균 28%)에 있었으나, 2020년 1/4분기 이용객 전년 동기간 대비 23.1% 감소
 - 국내 코로나 발생 전인 2020년 1월에는 2019년 대비 9.7% 증가세에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은 - 20.0%, 3월은 - 56.6%로 크게 감소



[그림 Ⅲ-27] 연도별 오송역 1/4분기 이용객 추이

표 Ⅲ-16 | 오송역 1/4분기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합계
2019년	655,537	604,983	695,908	1,956,428
2020년	718,871	483,707	301,719	1,504,297
증감율	9.7%	-20.0%	-56.6%	-23.1%

자료 : 청주시 내부자료

- (항공) 청주국제공항의 경우도 2019년 대비 2020년 1/4분기 이용수요가 대폭 감소함
 - 운항편수 33.6%, 여객 44.4%, 화물 55.9% 감소

- 중국 노선 의존도가 높아 국내 전체 공항 이용 감소율(여객 41.6%, 화물 12.4%)
보다 큰 폭으로 감소(국내선 보다 국제선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표 III-17 | 청주공항 1/4분기 운행현황

구분		공급(석)	운항(편)	여객(명)	화물(톤)
2019년	1~3월 계	498,378	2,776	441,527	3,197
	국내선	312,008	1,745	288,476	1,654
	국제선	186,370	1,031	153,051	1,543
2020년	1~3월 계	334,542	1,842	245,339	1,410
	국내선	256,560	1,422	197,228	870
	국제선	77,982	420	48,111	540
증감율	1~3월 계	-32.90%	-33.60%	-44.40%	-55.90%
	국내선	-17.80%	-18.50%	-31.60%	-47.40%
	국제선	-58.20%	-59.30%	-68.60%	-65.00%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2 대중교통의 위기, 지속가능한 이용환경 마련 요구

대중교통 이용 회피에 따른 업체 경영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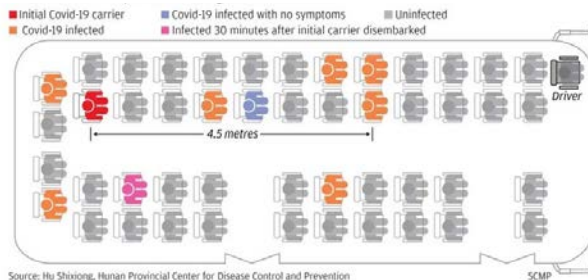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으로 대중교통 기피 현상 발생하고, 이용객 감소는 시내버스 등 영세 운수업체의 경영 악화 및 도산 위기를 야기함
 - 확진자의 버스, 택시 이용에 따른 감염 우려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객 감소
 - 전국적으로 공항버스 운행중단 등 시군단위 운행중단 사례 속출, 버스업계 노동자의 임금 체불 및 삭감사례 발생
- 지역 내 보다는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가 더 큼

■ 대중교통 기피현상 지속, 개인교통수단 선호

-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 및 개인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가중이 예상됨
 -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로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거론²⁷⁾
 - “현재 대중교통의 목표는 승객들을 위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붕괴를 막는 것이다”²⁸⁾
- 공유교통 회피의 흐름 속에서도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모빌리티 흐름 중에 하나인 공유교통은 확장에 한계를 맞이하였으나, 친환경·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는 가속화 예상
 - 대중교통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유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전기 구동 개인 이동장치)와 같은 개인용 교통수단 확대 예상
 - 올해 1~4월 전기자전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서울경제, 2020.5.29.)

■ 침두시 버스내 혼잡도 완화를 위한 수요관리 대안마련 필요

- 코로나19는 사람 간 전파되므로 침두시 대중교통 차내 혼잡도 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
 - 출퇴근 시 시내버스의 혼잡한 환경은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 침두시 이동수요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교통수요 관리 시행 중



[그림 III-28] 버스 내 코로나19 전파 사례

자료 : Hu Shixiong, Hunan Provincial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CMP, 2020

27) Alon Levy, How U.S. Public Transit Can Survive Coronavirus, CityLab, 2020.4.24.

28) Sandy Smith, Coronavirus Outbreak Triggers New Thinking About Transit's Essential Role, Next City, 2020.4.9

3 개인교통 선호에 따른 도시교통 혼잡 완화방안 필요

- 대중교통 기피에 따른 자가용 이용수요 증가는 도시 내 교통 혼잡을 증가시키고, 이는 도시 효율성 저하로 이어짐
 - 특히 시외통행의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를 더욱 선호하고,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량이 기타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로 증명
- 물론 전체적인 통행량이 줄어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나,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열악한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자동차 수단분담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쇼핑, 외식문화의 변화로 택배·배달수요 증가

택배·배달 통행량 증가

-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함
 - 롯데택배 물량 14%, 한진택배 10%, 롯데마트물 53% 증가²⁹⁾
 - 쿠팡은 2019년 연말 200만 건이던 하루 배송건수가 코로나19 이후 300만 건으로 증가
- 외식문화의 변화로 이륜차 위주의 음식 배달 물동량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배달의민족 2월 24일~3월 8일 주문건수가 2주전(2월 10일~2월 23일)보다 8.4% 증가³⁰⁾

택배물량 증가에 따른 기사 과로, 안전 위협

- 물량 증가에 따른 기사의 업무부담 및 과로에 의한 사고 증가로 이어짐
 - 국토부에서 택배 종사자의 물량·구역 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고려 권고
- 음식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올해 1~4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였으나, 이륜차 사고 관련 사망자는 13.0% 증가한 것으로 집계³¹⁾

29) 뉴스1, 신종 코로나에 택배물량 최대 14% 증가...택배사·이커머스도 '방역' 비상, 2020.2.10.

30) 동아일보, 코로나19 뚫고 라이더는 달린다.. 외식 줄고 배달 증가, 2020.3.15.

31)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자, 이륜차 교통안전협의회 발족, 2020.5.25.

■ 택배 및 배달수요 증가현상 가속화 예상

- 코로나19 이후 오랫동안 오프라인 영역이던 신선식품, 생필품 구매가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으며, 온라인 주문 및 배송 가속화로 스마트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아마존, 알리바바, 징둥 등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 투자를 통해 스마트 물류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
- 언택트 문화 확산과 물류·배송 관리시스템의 끊임없는 진화는 택배 및 배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임 → 도시 내 단거리 화물통행량 증가

5 넥스트 노멀 문화인 언택트 교통수요 증가

■ 사람과 화물의 이동 관련 검역 및 보안기능 강화

- 전염병이 사람의 활동과 접촉에 의해 확산되므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국민의 활동(이동)에 다양한 제약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보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예상
 - 세계 각국은 자국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내 검역 및 보안기능 강화 예상

■ 스마트 교통 분야 언택트 기술발전 예상

- 언택트 비즈니스의 발전, 물류 수요 증가 및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기술의 발전은 교통 분야 다양한 스마트 교통수단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초소형 이동수단(Micro Mobility)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 증가
 - 면허와 자가용이 없어도 언제·어디서나 모바일로 부르면 오고 목적지까지 이용하는 언택트(비대면) 공유차량서비스
 - 스마트폰 터치 한번 한번으로 차량 스스로 주차장과 빈 주차면을 찾아 주차 걱정을 해결해 주는 대리주차(발렛파크)
 - 지역을 순환하면서 교통약자 등을 실어 나르는 소형 셔틀버스
 -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원하는 장소로 물류를 운반하는 배달로봇



■ 사람의 이동에서 사물과 정보의 이동으로 진화

- 이동(Mobility)의 본질은 생활과 생활의 연결이며, 영국 랭커스대학의 존 어리는 그의 저서 '모빌리티(Mobilities)'라는 책에서 사회적 개념에서 이동을 12가지로 구분함(이재호, 2019)
- 이러한 사람의 이동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사물과 정보가 사람의 통행을 대신 하여 이동하는 현상으로 전환하는, 또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견해임
 - 오프라인 소매를 위한 통행을 대신하여 온라인 쇼핑·배달로 대거 전환
 - 온라인 개강을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습득(학습)
 - Zoom 등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Youtube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세미나
 - Netflix 등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의 급성장

2. 전략과제

1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단계별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 운행비용 절감, 한시적 재정지원

- 노선버스 이용수요 감소에 따라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외한 노선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축소 방안을 검토 시행함
 - 비첨두시간을 중심으로 운행횟수 감축으로 운영비용 절감
 - 운송사업자 경영여건, 운영적자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 수준, 이용자 통행불편 최소화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경영안전을 도모함
 - 우량업체 도산방지와 종사자 고용안전을 위한 대출보증 및 보조금 지원, 고용지원 및 금융부담 완화, 한시적 운영비용 지원 등
 - 시외 고속버스 유가보조금 한시적 확대, 유류세 경감 등
- 상대적으로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비율이 높은 택시, 전세버스업계 경영안전 대책을 강구함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자, 근로자를 위한 재정지원 등 대책 강구

■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민영제에서 준공영제, 공영제 등으로의 운영체계 변화를 통한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함
 - 도시지역 : 준공영제 추진 / 비도시지역 : 공영제 추진
 - 무분별한 재정증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보완정책 병행 추진 필요
- 국민의 이동권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모색함
 -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 정착
 -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 농촌, 벽·오지 지역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공공교통수단 기능 강화

2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확립

■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 대중교통 관련시설의 정비 및 이용기준 마련하고,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다중이용 교통거점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함
 - 정류소 및 차량에 홍보안내문 부착, 개인보호구 비치 등
 - 전국단위 환승이 발생하는 KTX오송역은 상시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영 (코레일 협조)
- 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고민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함



[그림 III-29] 스마트 에코쉘터 설치사례

자료 : 서초구민신문, 버스정류장? 디지털공간? 첨단 버스정류장, 2019.1.

■ 수요에 대응하는 시내버스 배차계획 조정

- 버스운영업체의 비용 절감 및 침두시 차내 혼잡도 저감을 위해 비침두시 운행횟수 감축 및 침두시 집중배차를 추진함
 - 침두시 노선별 혼잡도를 분석하여 혼잡노선 침두시 추가 배차
 - 비침두시 운행횟수 감축으로 운영비용 절감
-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버스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임
 - 비도시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 소형화를 고민하고, 도심지역에 대형버스 공급

■ 시내버스 혼잡도 관리기준 및 정보제공 인프라 확충

- 다중이 밀집되어 이용하는 대중교통 차내 환경은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침두시 혼잡한 시내버스 차내 환경으로 감염 우려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중교통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차내 혼잡도에 좌우
 - 현재 설치 운영 중인 BIS 시스템을 개선하여 차량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정류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검토
- 향후 MaaS(통합모빌리티) 연계 최소감염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능형 교통수단에 측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함
 - MaaS 도입 시 최소 환승, 최소접촉 등을 고려한 최소감염 경로 정보 제공

구 분	버스 차내 혼잡도	
여 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정도
보 통		입석 승객이 손잡이를 하나씩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혼 잡		입석 승객들 사이 통로에 까지 승객이 서 있고, 입석 승객의 몸이 맞닿는 정도(이상)

[그림 III-30] 시내버스 차내 혼잡도 구분기준(서울특별시)

자료 : 내손안의 서울, 서울시 버스혼잡정보 서비스 의미와 개선방안, 2017.7.4.

■ 버스교통의 표준운영절차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 버스교통 운영 과정에서 승객과 운전기사들, 직원들까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표준운영절차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함
- 독일의 경우 표준버스에는 18~20명, 미니버스에는 12~14명만 탑승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고 위치까지 구체적 운영지침 제시
- 버스 기사들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투명한 커튼 설치, 승객들과 완전히 분리
- 버스 승차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차내에서 큰소리 방지 등 이용문화 정착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간의 물리적 접촉을 제지하기 위해 공공영역을 일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

3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

■ 재택근무/화상원격회의 환경 조성

- 팬데믹 속에서 재택근무를 경험한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따른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넥스트 노멀 시대 재택근무에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주거지내 주민자치센터나 아파트 내 공유공간을 활용하거나 공유오피스를 제공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진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증가하는 개인교통수단(승용차)에 대한 수요관리와 삶의 환경 개선에 노력함

■ 근무시간 시차제/유연근무제 도입

- 9~6시 단일 근무시간에서 8~5시, 10~7시 등 다양한 근무시간 적용(공동 근무 시간 10~5시 지정)함으로써, 출퇴근시간 자동차로 인한 도로혼잡 및 대중교통 차내 혼잡완화를 도모함
- 공공의 경우 관련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도입확산을 위해서는 도입하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함
-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부족
- 더불어 첨두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수요 감축을 위해 비첨두시간대 이용요금 할인제도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요관리정책을 발굴·시행함

4 교통서비스 다양화 및 SOC 디지털화 추진

유휴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통학버스 한시적 운행 지원

- 유휴 관광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장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행수요가 급감하고, 전국적인 휴교 조치가 내려지면서 전국 약 4만 1천여 대의 통근, 통학, 관광버스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
- 첨두시 수요가 많은 출퇴근 구간의 경우 유휴 관광버스를 투입하여 만원버스 수요분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유휴자원 활용방안을 적극 도입함
 - 유휴 관광버스를 활용하여 통근통학버스 한시적 운행 (권역별 통학버스로 활용)
 -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모바일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퍼스널모빌리티 등 신교통수단 도입 및 활성화

- 개인교통수단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이 필요함
 - 개인교통수단의 주행 안전성과 잠재적인 위험요소, 안전시설의 필요성 검토
 - 주행공간별 속도규제, 안전시설물 설치, 운행가능 및 금지공간에 대한 안내표지, 노면표시 등 제반시설 설치 등
- 전동킥보드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상태로서, 해당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 감염병에 대한 우려와 관심도는 개인 승용차에 대한 수요증가 뿐 아니라, 보행 수요에 대한 증가도 함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됨
 - 런던시장(사이드카 아만 칸)은 자전거 이용 10배, 보행은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우리의 보도환경은 사회적 거리(1.2~3.6m)는 고사하고 개인적 거리(46~120cm)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설계기준 상 보도의 최소 유효보도폭은 1.5m에 불과, 이마저 자전거도로, 식수대 등으로 잠식

- 향후 보행자의 사회적 거리가 지켜질 수 있는 보다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의 시도가 필요함
- △도심재생 사업 시 보행자의 사회적 거리 고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를 고려한 계획수립 방안 모색, △도로다이어트,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공급 확대

■ SOC 디지털화 추진

- 청주국제공항, 충북선 기존 역 및 신설역, 도로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 및 데이터 수집, 가공 및 공유 확대를 도모함

5 넥스트 노멀 시대 디지털 물류 신산업 육성

■ 도내 물류기업과 연합한 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육성

- 진천 초평 택배 메가 허브터미널(롯데글로벌로지스)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육성을 도모함
 - 롯데에서 2022년까지 3000억원 투자, 14만5천㎡부지에 지상3층 규모로 신축
 - 최첨단 창고시설에서 원스톱으로 택배 터미널로 연계되는 최적화 물류 서비스 제공, 롯데 이커머스 사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계획
 - 해외 선진 택배 터미널을 벤치마킹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DT(Digital Transformation) 기반 차세대 택배 터미널로 구축 예정
- 도내 다양한 민간기업(쿠팡 등)과 연계한 지역의 물류분야 신산업 육성을 도모함
 - 오프라인 판매에 적합했던 상품의 온라인 유통 개발 등 온라인 시장 확대예상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 지역 간 접근이 용이한 장점 활용
 - 코로나19이후 신선식품, 의약품, 보건·위생용품 등 지역 연관 물품 수요 증가
 - 지역 내 생산자와 연계 온라인쇼핑몰,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유통네트워크 구축
- 지역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함
 - 택배, 쿠팡, 드론, 콜드체인, 무인보관함, 생활형 공유창고, 신선물류센터, 접근 도로망 등 사회인프라 확충 지원
 - 심야배송, 새벽배송, 당일배송 및 30분 배송 등 생활 배달서비스와 같이 상품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 지원



■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콜드체인 물류기반 조성

- 여객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항공물류 활성화 기반조성이 필요함
 -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청정 신선식품 등 콜드체인 물류수요 대응
 - 전문 물류기업 육성 및 콜드체인 물류시설 지원 등 물류기반 조성
-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물류전문 항공사 유치를 노력함
 - 지역 내 주 수출품목인 반도체, 지역의 농산품의 중국·베트남 등 수출입 지원
 - 제주도의 신선 해산물 전국 배송을 위한 물류 기반 조성

■ 도시 내 물류량 증대에 대비한 스마트 물류센터 및 생활물류 기반시설 확충

- 도시내 물류량 증가에 따라 도심 인근, 유희부지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 확충을 도모함
 -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2020.5.7.)’에도 해당 내용 발표
- 더불어 도심 내 조업주차 공간, 공영차고지, 라스트마일 물류시설(무인택배함 등) 등의 물류관련 인프라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지원

- 2020년 1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새로운 모습의 자율주행 배송로봇인 ‘아마존 스카우트’를 특허로 공개하였으며, 자율주행 배송로봇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³²⁾
 - 2020년 2월 미국의 스타트업 NURO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송차량 ‘R2’는 미국 교통안전국으로부터 규제면제 승인
 - 2020년 3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장동닷컴은 우한시에서 자율주행 배송로봇 운영 시작
-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5G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우편물 배달로봇, 집배원 추종로봇을 도입, 빠르면 10월부터 실제 물류환경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힘

32) 김용섭, 언컨택트, 퍼블리온, 2020

-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서도 로봇,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투자 및 글로벌 산업전망이 밝은 기회의 분야이니 만큼 도내 시범단지 구축 등의 테스트 베드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노력 필요함
- 오송 국가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및 신규택지개발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구 지정



[그림 III-31] 우정사업본부 자율주행 이동우체국(상), 아마존 자율주행 배송로봇(하)

자료 : IT조선, 자율주행 기술로 이동우체국 시대 열린다, 2020.5.28.(위), Amazon Scout 홈페이지(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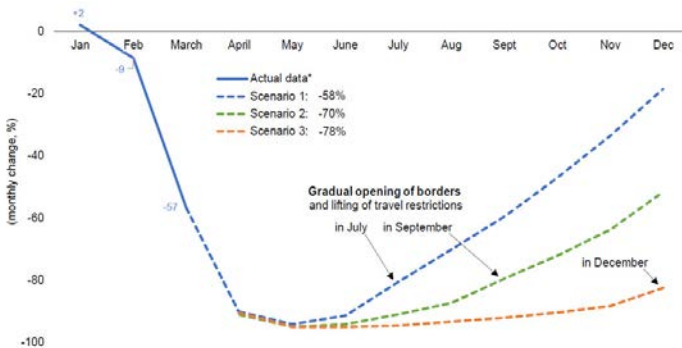
제7절 문화관광

1. 현상과 이슈

1 전 세계 관광산업 유례없는 불황

2020년 국제관광객 2019년 대비 80% 감소 전망(UNWTO, 2020.5.7.)

- UNWTO(세계관광기구)는 올해 국가 간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는 기록을 시작한 1950년 이후 최악의 위기로 평가
- 지난달 기준 96%의 전 세계 도착지들이 해외여행 제한이나 금지를 조치하고 있는데, 향후 전개 방향에 따른 3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시나리오 1 : 7월 초 국가 간 점진적 개방과 여행 제한 완화 시 58% 감소
 - 시나리오 2 : 9월 초 국가 간 점진적 개방과 여행 제한 완화 시 70% 감소
 - 시나리오 3 : 12월 초 국가 간 점진적 개방과 여행 제한 완화 시 78% 감소
-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코로나 19로 관광산업 관련 부문 1억 8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세계 각국의 해외여행 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함
 - 대륙별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6천 340만 개의 관광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그림 III-32] 시나리오별 국제 관광객 도착량(2020년)

자료 : UNWTO, Impact assessment of the COVID-19 outbreak on international tourism, 2020.5.

■ 국내 관광업계 최악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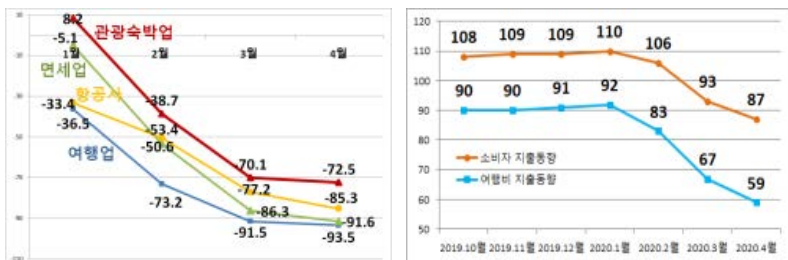
-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된 올해 3월 우리나라 관광 수입과 관광 지출은 각각 7억 2,980만 달러(8,904억원), 8억 8,150만 달러(1조 754억원)로 잠정 집계되었음
 -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67%, 60% 감소한 수치
- 3월 방한 외래객 수는 8만 3,497명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해 3월보다 무려 95% 감소한 수치이며, 한 달 기준으로 '84년 2월(8만 2,345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3월의 한국인 출국자 수는 14만 3,366명이었는데,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1989년 당시와 맞먹는 수치임
-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광소비지출 급감으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가 보고되었음
 - '20.1~4월 관광레저 소비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약 11조원) 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반기에만 최소 17조원 이상 감소 전망
- 특히 4월 여행업(△93.5%), 면세점(△91.6%), 항공사(△85.3%) 및 관광숙박업(△72.5%) 등 주력업종 소비지출 감소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향후 소비전망 또한 위축이 우려됨
 - '20. 4월 소비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7, 이 중 여행비 지출전망은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낮게 조사(59)되는 등 10년 이래 최저치



[그림 III -33]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지역

자료 : 경향신문, 코로나 19 직격탄, 2020.4.1.

소비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



- ◆ (여행업) 해외여행 취소율(3월말 기준, 상위 12개) : 75.3%(손실금액 1조 2,778억원 추정)
신규예약(4~6월 전년실적대비, 상위 12개) : 약 305만명 감소(손실금액 1조 2,704억원 추정)
- ◆ (호텔업) 객실 및 연회취소 누적 피해액 : 약 4,924억원 추정(2.3~4.26일 기준)
- ◆ (유원시설업) 매출감소액 약 3,353억원 추정(1.20~5.10일 기준)
- ◆ (국제회의업) 매출액 피해기간 약 2,639억원 추정(2~4월 국제회의 취소·연기 기준)
- ◆ (카지노) 강원랜드 등 주요 카지노 임시휴업으로 인한 손실 4,730억원(추정)

자료 : 관계 부처 합동 국가관광전략회의, 케이(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2020.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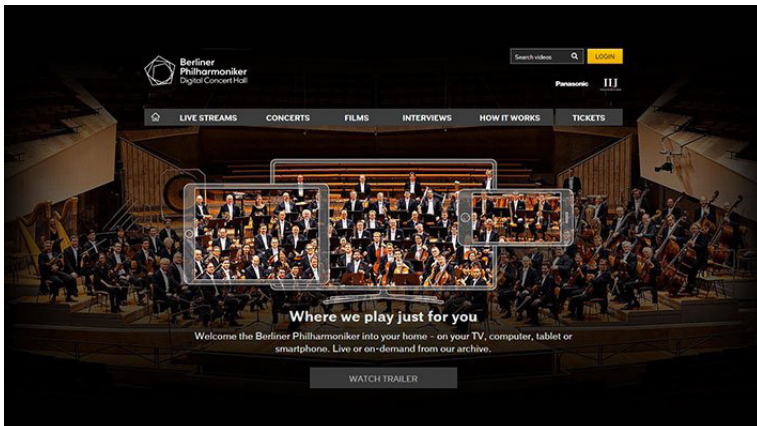
랜선 공연 및 전시의 일반화

- 코로나19로 많은 산업이 침체되어 있지만 특히 예술계는 최악의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기존 무대 중심의 공연, 전시장 중심의 전시와 관람형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 가면서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의 온라인 콘텐츠서비스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것임



자료 : KBS뉴스, 빅데이터로 본 문화예술·스포츠·여행업, 2020.5.26.

- (랜선 공연 사례/오페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나이틀리 메트 오페라 스트림스(Nightly Met Opera Streams)’ 서비스 제공,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은 기존의 유료 공연을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오스트리아 빈 국립 오페라는 오페라와 발레 공연을 매일 1편씩 24시간 무료 공개,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은 발레 공연과 오페라 공연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
- (랜선 공연 사례/가수) △세계적 팝가수 레이디 가가는 ‘하나의 세계 투게더 앳 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생중계,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멤버 크리스 마틴은 ‘#Together AtHome’이라는 챌린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라이브 즉흥 공연 제공하여 많은 호응
- (랜선 공연 사례/클래식)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는 연주자들과 함께 집에서 스트리밍 콘서트를 개최하고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이라는 세계적 클래식 레이블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 (랜선 공연 사례/국내) △세종문화회관은 온라인 콘서트 ‘힘콘’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네이버 TV로 중계되어 향유 기회를 확대, △국립중앙박물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VR과 동영상으로 전시콘텐츠를 제공하여 집에서도 생생하게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 △국립현대미술관은 유튜브를 통해 전시투어를 제공



[그림 III -35] 콘서트 실황 영상 이용권을 제공한 베를린 필하모닉

자료 :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 <https://www.digitalconcerthall.com>



[그림 III -36]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투어 캡처

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

■ 언택트 공연·전시의 연결성 강조와 과학기술과의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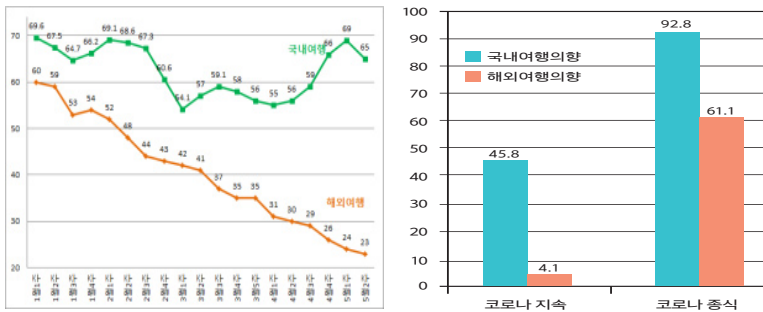
- 언택트 문화예술의 일반화로 오프라인 공연·전시가 온라인 형태(OTT)로 전환되면서 이동성(Mobility)보다는 연결성(Connectivity)이 강조되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창작 수요의 증대와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임
 - 온라인 공연·페스티벌·전시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공연과 전시 형태에 다양한 변화
 - 문화예술콘텐츠의 창작방식의 진화와 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 진화가 급격하게 전개
- 문화예술콘텐츠가 첨단기술과 결합하거나 여러 장르가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예술콘텐츠로 진화하면서 과학기술과 예술의 경계도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3 코로나 역설,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문화예술계의 진화

■ 관광산업 재난회복 탄력성(Disaster Resilience)과 '아웃도어'의 부활

- 인간에게 체화된 관광 욕구는 큰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부터 행복으로 바꾸는 마음의 근력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작동하기 때문에 전염병, 테러 등으로 위축 되더라도 이를 벗어나려 하는 회복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음(김창수, 2020; 최승담, 2020)

- 코로나 발생 후 여행에 대한 위험인식도 높아졌지만, 국내 수요는 상황 국면에 따라 높은 회복탄력이 기대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2020.5.)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다수가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수요로 전환되어 국내 관광시장 회복을 더욱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 실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된 뒤 첫 주말인 4월 25~26일 전국 국립공원은 탐방객으로 북적거렸으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전 시점에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을 찾는 이들은 많았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등산겸기캠핑자전거 등 언택트 여행이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



[그림 Ⅲ-37] 국내/해외 여행계획비율(좌) 및 여행의사(우)³³⁾

자료 : 관계 부처 합동 국가관광전략회의, 케이(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2020.5.26.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코로나19가 새로운 기회

- 온라인을 활용한 버추얼(Virtual·가상) 예술 관람 방식으로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관성을 벗어나 예술계가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음
-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이라 하면 최근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백 년 전부터 과학과 예술은 접목되어 왔으며 19세기 인상주의가 대표적인 사례임
 - 삼성전자 디자인기업연구소 채진호 박사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유화물감이 ‘튜브’라는 기술을 통해 등장했고 화가들은 이전에 자신의 기억에 의해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야외로 나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자연을 보면서 포착한 인상을 화폭에 담아내게 되었고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예술 사조가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

33) 블루계열은 국내여행 의사, 주황계열은 해외여행 의사

- 미디어아티스트 반성훈 KAIST 박사는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그릴 것인가를 연구했다. 하지만 사진이 나오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사진이 나오으로써 화가들은 기계(사진기)와는 다른 차별 화를 나타내기 위해 화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설명
-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 영역을 많이 가져간다고 우려할 수 있겠으나, 과학 기술이 인상주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하고 있음



[그림 III -38] 영국 BBC Radio4 프로젝트 Science Museum

자료 : <https://www.bbc.co.uk/programmes/p07lx0v>

4 K-방역, 충북 위상 제고 및 국제관광 기회

K-방역과 국내외 관광 활성화와의 연계

- 2020년 5월 26일 개최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에서는 ‘소중한 일상, 새로운 발견. 내 나라 여행!’을 표어(슬로건)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음
- 핵심은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K-방역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국가브랜드 가치는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인데,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현격하게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

■ K-방역의 중심 오송과 질병관리본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성윤모)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꾸준히 입지를 넓히고 있는 '바이오헬스'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 특히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K-방역의 국제표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 정부는 현재 '검사·확진 → 역학·추적 →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국제 표준(18종)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로서 충북 오송이 타당하다는 논리 개발과 함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구상이 시급한 시점임

5 공익과 사생활 보호와의 갈등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적인 이슈 가운데 하는 국가권력의 감시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빚어진 갈등과 논쟁임
-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는 불가피하나 그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문제가 부각
- 방역과정에서 개인의 성별, 직업, 생활패턴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고 강제 격리와 사회적 고립을 면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유발
-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주시민사회의 성숙이 바탕이 되었지만, 방역과정에서 인권 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 집단 감염사태를 유발한 대구 신천지와 서울 이태원 클럽은 특정 종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 야기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침해받으면서 나타난 위기는 코로나19 이후 어떠한 세계, 어떠한 국가와 정부체제로 가야 할 것인지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사회적 가치 위기로 이어질 것임
-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국가권력의 과도한 행사가 묵인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불가피하게 억압되었을지라도,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국가 및 지방정부는 지난 수세기 인류가 쌓아올린 인류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음

2. 전략과제

1 백두대간, 호수 등 자연자원 기반 청정관광 지향 지속

■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비대면 관광시스템' 선제 구축

- 코로나 이후 관광 및 여가분야에서 뚜렷한 변화는 실내 활동이 아닌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인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객 증가가 뚜렷하며, 비도심형 국립공원의 감소 추세 오는 대비
- 도심형 국립공원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거리 최소화 등 일정 수준의 대인 간 거리를 유지하되 밀폐된 공간이 아닌 너른 자연 지역 방문을 통해 여가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임

| 표 III-19 | '20년 4월 국립공원 탐방객 수

증가 상위 5개 공원		감소 상위 5개 공원	
공원명	전년 대비 증감	공원명	전년 대비 증감
북한산	48.2%	한려해상	-72.0%
치악산	44.8%	경주	-64.5%
계룡산	37.1%	월출산	-60.5%
지리산	20.4%	다도해해상	-56.9%
무등산	14.6%	주왕산	-54.9%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 충북도에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충주호·대청호·괴산호 등 호수 자원, 청남대, 연풍새재 등 대부분 명소가 자연자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방문객 수 통제를 통한 △거리두기 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주도 도시락사업 추진, △드라이브 스루 판매방식 도입 등 비대면 관광시스템 구축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경우 이미 방문객 통제시스템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지역 식당이 도시락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일부 소득 보전 가능
 - 또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방식을 도입한다면, 전국적 이슈와 함께 비대면 음식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과 주민 모두를 감염병에서 보호 가능

- 한편 청남대와 같이 단일 출입구를 통해 방문객이 왕래하고, 생체자원이 잘 보존된 확 트인 관광목적지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됨
- 정부는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은 의무 도입해야하지만 이외 시설도 자발적 도입 허용



[그림 III-39] 정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충주호 수상레저 활성화

- 코로나19 이후 수상레저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충주호에는 3곳의 내수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선정되어 있음
- 마리나항만 중심의 수상레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용이하며, 건강지향형·시간 소비형 레저 증가와 함께 서서히 증가 전망(김성규, 2006; 최승담, 2008; 2017; 2020)
- 다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물놀이에 거부감이 있으며, 전통적 유교의 영향으로 해양 또는 수상레저 활동이 권장되고 있지 못했음
- 특히 해양공간에 대한 공포 및 거부감이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성보현·최승담, 2014; 최승담, 2008; 2020; 최승담·성보현, 2012)
- 하지만 내수면은 해양공간에 비해 파도가 잔잔하며, 수심도 깊지 않아 공포감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요트·보트·카누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추구하는 수요, 특히 초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매우 유리한 환경적 조건임

2 온라인 MICE 산업 특화 육성을 통한 재난회복 탄력성 강화

■ 오송이 가지고 있는 MICE 산업 잠재력

- 충북 청주는 신수도권 관문 공항이자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청주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강호축 개발로 국내 외적 접근성 이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음
- K-방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송의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조성될 제1~3생명 과학 국가산업단지, 국제적 과학도시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잠재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오송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질병관리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6개 국책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이 입지한 보건의료행정의 중심
- 이러한 산업 기반은 국제적 회의, 전시 등의 대규모 수요 유치에 직접적으로 기여 할 수 있으며, 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청주뿐만 아니라 신수도권 전체를 글로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회요인임
- 또한 MICE 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 보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그림 III-40] 청주전시관 조감도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

■ 온라인 특화 컨벤션 청주전시관(Green CONFEX) 조성

-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선언이 3년 또는 5년 주기로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형태의 MICE 산업은 지속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판단임
- 따라서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행사지원 플랫폼 기획과 함께 중소기업의 행사지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첨단화되어야 할 것임
 - 최근 개최된 국내 유일의 보건산업 국제전시회 '2020 바이오코리아'가 좋은 사례³⁴⁾

■ 청주 오송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통한 융복합관광 육성

-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 산업 육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시적인 전시, 회의 등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 기반임
- 충북 오송은 제1~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관련 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유치가 확정된 방사광가속기로 인해 바이오헬스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적 중심 도시로서 성장이 기대됨
-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충북청주전시관(오송 컨팩스)을 주변에 호텔, 쇼핑 센터 등을 집적시킨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면, 의료분야의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 유치, 의료·보건 산업 관련 전시회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³⁵⁾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의미
- 2019년 9월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지역은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 일대), 광주광역시(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 경기도 고양시(고양 국제회의복합지구) 등 3곳에 불과하여, 중부권 핵심 MICE 시설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

34) 2020년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주최하고 있으며, 컨퍼런스, 투자설명회, 비즈니스포럼 등 대부분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

35)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로서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



[그림 III-41] 청주 오송 국제회의복합지구(안)
자료 : 연구진 작성

3 K-방역 기반 거점시설 조성과 중복형 의료관광 육성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오송

- 전술한 바와 같이 중복 청주는 신수도권 관문 공항이자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청주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강호축 개발로 국내외적 접근성이 뛰어나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오송 제1~2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6개 보건관련 국책기관이 위치하고,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임
- 이러한 공간적 장점과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K-방역 기반의 거점기지로 육성하여야 할 것임



[그림 III-42] 오송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

■ 국립 감염병(K-방역) 교육관 건립

-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의학 등의 산업성격이나 연구시설 혹은 전문 인력양성 기관성격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원인과 실생활에서의 예방 혹은 대응방안을 알려주는 교육기관 성격임(추후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 요인들로 확대 가능)
- 유아~노인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감염병 주제를 전시 및 교육(체험)하는 주제관으로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실제 의료행위를 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체험수준의 시설은 가능
- ‘왜 감염병 교육관인가?’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적극 대응
 - 국민들의 감염병(질병) 대응,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는 국가의 책무
 - 대국민 감염병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 필요
 - 감염병(질병)교육은 증가하고 있는 개인 진료비 및 국가건강보험료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



[그림 III -43] 미국 리버티과학관 내 의학 전시관

자료 : 해당 홈페이지

● ‘왜 충북에 건립되어야 하는가?’

-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는 헬스, 바이오, 질병, 의료, 한방, 유기농 등 충청북도의 강점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지역과 궁합이 맞으며, 후시 경쟁이 되더라도 비교우위
- 오송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명과학단지이며, 바이오 클러스터의 허브로 조성된 곳으로 국립 감염병 교육관 입지의 최적지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정책기관이 집적된 생명공학클러스터로서, 국립보건안전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도 장점
-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이 입지하여 국민들 에게 시의적절하고 교육 및 체험이 가능
- 관련 정책기관에서 각각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립 감염병 교육관에 전시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효율적
-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부·호남분기점인 KTX 오송역이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가능하며 국토의 중심 및 수도권 인접

■ 충북형 의료관광 육성

- 충북 및 타 지역에서 추진해왔던 기존 의료관광 수요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제안사유는 코로나19 종식 후 우리의 질병관리시스템을 직접 견학하고 벤치마킹 하고자 세계 각국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각국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체계적이며, 감염병 발생 시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다고 극찬
- 기존 의료관광은 치료·수술 등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집중되어 왔으나, 충북형 의료관광은 이에 더해 △국립감염병교육관을 중심으로 감염병 교육,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행정타운 중심으로 K-방역 시스템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제1~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관광 육성 등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44] 총복형 의료관광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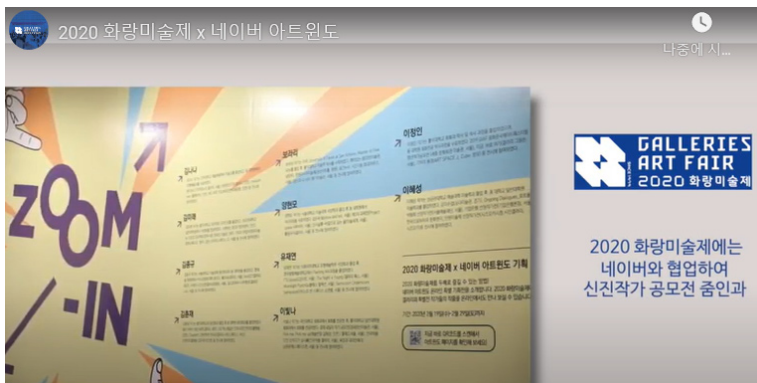
자료 : 연구진 작성

4 언택트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

■ 언택트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디지털플랫폼 구축

- 언택트 문화예술 일반화로 공연·전시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보고 즐기는 문화예술로 진화할 것임
- '홈족'이 관람객이고 집과 사무실이 공연장이고 전시장인 만큼, 현실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스마트한 예술작품이 기획되어야 함
- 언택트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작자인 예술인의 창의역량과 온라인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창작과 기술의 협업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사례)△서울돈화문국악당은 국악방송과 협업을 통해 '운당여관 음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국화랑협회에서 주최한 제38회 2020화랑미술제는 네이버 아트윈도와 손잡고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열어 온라인 작품 감상과 판매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언택트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지원을 확대하여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넓히고 스마트 창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언택트 문화예술 창작은 순수예술분야와 AR/VR 및 OTT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콘텐츠로 나누어 지원하되, 두 분야가 융합된 작품도 포함

- 또한 언택트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작의 범위와 형태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작의 주체를 예술인은 물론 디지털기술자, 과학자, 인문학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III -45] 2020 화랑미술제 x 네이버 아트월드 특별 기획전

자료 : 한국화랑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 랜선 공연·전시콘텐츠의 연결성 강화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위축되고 홀로 시간을 소비하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낳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홈족’이 확대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연무대와 전시장 중심의 창작 활동이 무관중 공연과 전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랜선공연과 전시를 활성화해야 함
- 스마트문화를 선도할 온라인 전시 및 공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 스마트문화의 발달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과 전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무대 공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연을 병행하거나 무관중 공연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방송하고, 전시의 경우에는 단순 동영상은 물론 AR/VR을 활용하여 전시작품을 집에서 감상하고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발전

■ 언택트 문화예술 디지털플랫폼 개발

- 언택트 문화예술의 확산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공연, 전시, 페스티벌, 버스킹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디지털플랫폼의 수요가 급증할 것임

- 공공 디지털플랫폼 개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언택트 문화예술작품은 물론 예술 관련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학술자료 등을 집적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시행 가능한 공공 디지털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문화예술작품의 디지털화와 아카이빙, △지역 문화예술작품 등 스트리밍 서비스, △문화예술 관련 우수 콘텐츠 서비스, △언택트 문화예술콘텐츠 제작 기술 및 정보 제공, △OTT 제작사와의 계약 및 협업 지원, △ARS를 통한 창작 기금 모금 등

5 다 함께 행복한 민주 시민사회 성숙

■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공공플랫폼 구축

- 코로나19 이후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술적 전환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가 나아갈 넥스트 노멀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임
 - 방역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된 것은 확진자에 대한 인권 침해, 혐오, 배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
-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훼손된 인류의 숭고한 존엄과 자유, 평등의 가치는 지속가능하게 신장시키면서 보다 진화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함
 -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인권 위기로 급속 전환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사람과 인권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대응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언급
 - 5월 15일 23개 시민단체도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공개 되고 있어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보인권을 존중하여 공공의 방역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발표
-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토대는 그동안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역량과 실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주시민사회를 발전시켜 제2, 제3의 코로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와 성수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의식을 불식시키고 평등과 연대가 가능하도록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하며, 이는 앞으로 있게 될 제2, 제3의 코로나에 대항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함
- 그를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 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시민교육
 - ‘코로나19와 시민사회의 역할’, ‘코로나19와 인권’,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평화와 평등 그리고 연대’ 등을 주제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도모
 -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확대 시행하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공공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능동적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소규모 공동체문화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는 직접 적인 대면접촉이 위축되고 홀로 시간을 소비하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낳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는 관계의 단절 내지 축소로 이어져 지역공동체를 해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소규모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여 소소하면서도 함께 누리는 삶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디지털 스마트문화가 일반화되어 직접적인 접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 에서, 마을 같은 소규모 지역공동체는 오프라인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관계의 커뮤니티’로 새롭게 정의될 것이며, 그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추구 할 것임
- 더불어 함께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소규모 공동체문화 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마을축제 지원
 -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중심의 소규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공간 지원, 프로그램 지원, 전문강사 파견 등)
 - 이웃사촌 소모임 활성화 지원(강사 파견, 컨설팅 등)

제8절 환경

1. 현상과 이슈

1 2020년대 인류가 맞닥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 환경문제

- 세계경제포럼(WEF) 발표한 ‘2020 세계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0)’에 따르면 2020년대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협요인 중 상위 5개가 모두 환경문제에 해당함
 - 1위 기상이변, 2위 기후변화 대응 실패, 3위 자연 재해, 4위 생물다양성 손실, 5위 인간 유발 환경재난, 6위 데이터 사기·절도, 7위 사이버 공격, 8위 물부족 위기, 9위 세계 거버넌스 실패, 10위 자산 거품

Likelihood	Impact	Categories
1 Extreme weather	1 Climate action failure	Economic
2 Climate action failure	2 Weapons of mass destruction	
3 Natural disasters	3 Biodiversity loss	Environmental
4 Biodiversity loss	4 Extreme weather	
5 Human-made environmental disasters	5 Water crises	Geopolitical
6 Data fraud or theft	6 Information infrastructure breakdown	
7 Cyberattacks	7 Natural disasters	Societal
8 Water crises	8 Cyberattacks	
9 Global governance failure	9 Human-made environmental disasters	Technological
10 Asset bubbles	10 Infectious dis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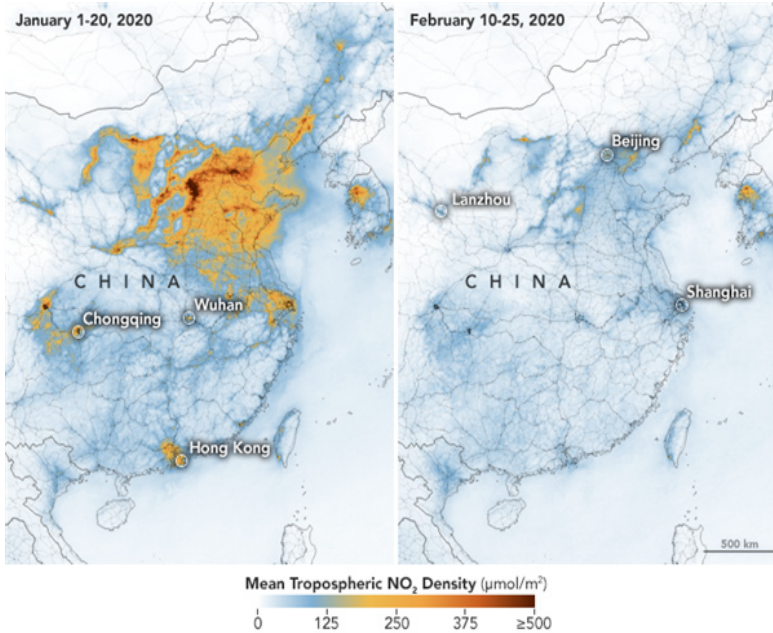
[그림 III-46]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상위 10가지 위험

자료 :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2020

2 코로나19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 일시적 공장폐쇄로 인한 뜻밖의 대기환경 개선

- 코로나19는 세계의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산업활동을 멈추게 하였고, 이로 인해 뜻밖의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남
 - 중국 후베이성의 ‘대기 질 좋은 날’의 평균 일수가 2019년 같은 시기 대비 21.5% 증가했다고 중국 CNN방송이 발표
 -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의 위성사진에 따르면 자동차와 산업시설에서 배출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산화질소도 중국에서 2020년 1, 2월 사이 대폭 감소



[그림 III-47]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과 한국의 대기오염도 변화(1월(좌), 2월(우))

자료 : 미국항공우주국(NASA)

중국으로 진출했던 공장이 자국으로 U턴 : 국내 배출 대기오염 증가

- 인건비와 환경문제 등으로 해외, 특히 중국으로 진출했던 공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자국으로 U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중국에서 배출되었던 대기오염물질이 국내에서 배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염물질의 외부화가 내재화되는 현상임
 - 해외 공장건설은 국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지만, 반대로 관리·통제가 불가능한 대기오염원의 증가를 야기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공장시설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은 오염배출시설 국내 증가라는 우려도 있으나 관리·통제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함
 - 국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병행 전제

3 언택(Untact) 소비문화와 쓰레기

■ 온라인, 택배 소비의 확산으로 쓰레기(배송 부산물)가 급증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쇼핑 등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른 부산물의 증가가 예상됨
 - 2020년 2월 대비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이 24.5% 증가하였으며, 음식서비스 82.2%, 음·식료품 71.0%, 생활용품 52.8% 등 증가(자료 : 통계청)
 -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기피하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식음료품(채소, 과일, 유류, 해산물 등 신선식품)을 작은 단위로 가구까지 배달해 주는 O2O 배송서비스 및 택배서비스의 급격한 증가
- 온라인 쇼핑 및 비대면 상품배송에 따른 부산물 즉, 배송과 포장에 위한 폐기물이 증가할 것임
 - 환경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적극 추진,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기간 늘리기, 공공비축 추진,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조기집행 등의 대책을 마련

■ 언택 소비로 인한 생활쓰레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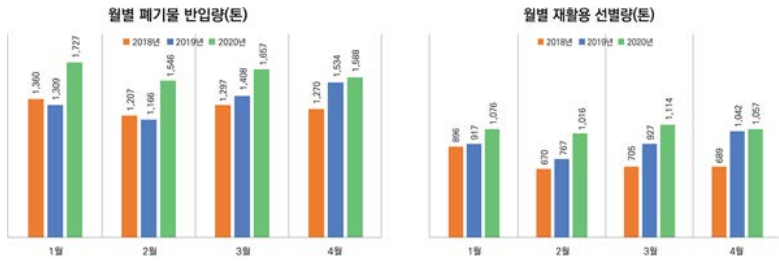
- 2020년 1~4월의 생활쓰레기는 2018-2019년 동 기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청주시의 경우 2020년 1~4월의 재활용폐기물(반입량 및 재활용 선별량)은 2018-2019년 동월 대비 최대 133% 증가
 - 2019년 동월 대비 감소 품목 : 유리병, 플라스틱, 불용품(비닐류)
 - 2019년 동월 대비 증가 품목 : 종이류(폐지), 캔류, 백색비닐류, 스티로폼, 기타 (전자제품, 고철류, 전지류 및 의류)

표 III-20 | 청주시 재활용선별장의 반입 및 선별량(1월~4월) (단위 : 톤)

구분	반입량			재활용 선별량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	1,360	1,309	1,727	896	917	1,076
2월	1,207	1,166	1,546	670	767	1,016
3월	1,297	1,408	1,657	705	927	1,114
4월	1,270	1,534	1,588	689	1,042	1,057
합계	5,134	5,417	6,518	2,960	3,653	4,263

주 : 반입량은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을 기준(재활용 선별율은 65.4%)

자료 : 청주시 내부자료(자원정확과)



[그림 III-48] 청주시 재활용선별장의 반입량과 선별량 변화(1월~4월)

자료 : 청주시 내부자료(자원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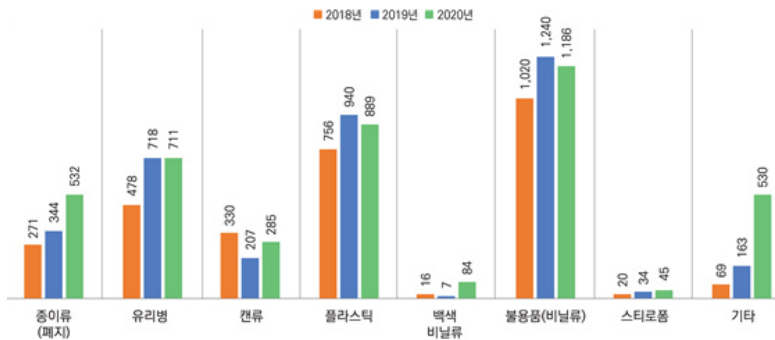
- 청주시 2020년 1~4월 동안 청주시에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은 16,466톤(단독주택 비율 고려)으로 추정되며, 그 중 재활용 선별량은 약 10,770톤으로 추정됨
- 불용품(비닐류)과 플라스틱이 각각 31.7%와 2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표 III-21] 청주시 생활폐기물의 세부 분류별 변화

(단위 : 톤)

구분	합계	종이류 (폐지)	유리병	캔류	플라 스틱	백색 비닐류	불용품 (비닐류)	스티 로폼	기타
2018년	2,960	271	478	330	756	16	1,020	20	69
2019년	3,653	344	718	207	940	7	1,240	34	163
2020년	4,263	532	711	285	889	84	1,186	46	530
합계(1~4월)	10,876	1,147	1,907	822	2,585	107	3,446	100	762

자료 : 청주시 내부자료(자원정책과)



[그림 III-49] 청주시 재활용선별장의 1~4월 종류별 선별량 변화

자료 : 청주시 내부자료(자원정책과)

■ 쓰레기 유통의 어려움으로 불법 투기 증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쓰레기는 증가하는 반면, 쓰레기의 세계적 유통이 악화되어 쓰레기처리 업체들의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I-50]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공터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자료 : 중앙일보, 낫선 트럭 따라가니 250t 폐기물, 불법 투기 잡은 주민 순찰대, 2020.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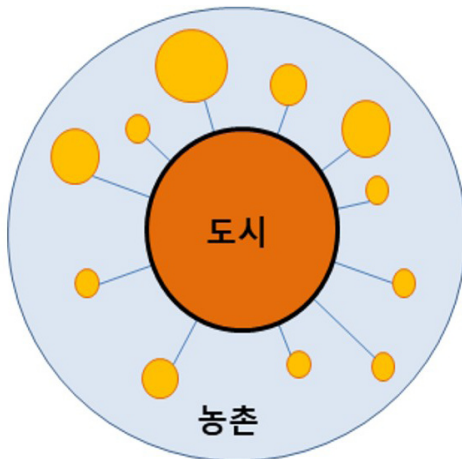
4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른 인간의 생태면역력 감소

-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자연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파괴·감소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자연과 멀어져서 생기는 어린이 질병들 : 소아비만, 아토피,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 집중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등(리처드 루브, 2017)
- 지나친 도시화(집중화)와 자연환경과의 단절은 인간의 면역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동물 기원의 전염병에 보다 더 취약하게 함
 - 많은 전문가들은 아토피의 원인으로 흙을 접하지 못하는 생활환경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 유럽과 일본의 경우 어린이들의 놀이터는 자연 상태로 운영
 - 자연 상태에서 흙, 풀, 나무, 벌레 등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정신적 면역력이 증가
 - 환경오염의 악화와 자연에서 멀어지는 생활환경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생활공간에서의 생물다양성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 즉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처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충청북도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생물보호지역이 매우 적으며, 생물다양성의 대표적인 지표인 습지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전무
-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구역, 녹지, 완충지역 등에 대한 보호 필요

5 도시 종속적인 공간과 사회 구조는 팬데믹에 매우 취약

-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 중심의 공간 및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인구, 경제, 물류,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등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주변에 농촌지역이 도시에 의존(또는 기생)하는 형태로 존재
- 이러한 도시집중형 공간 및 사회구조는 코로나19 등 강력한 전염병의 발생 상황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한 형태임(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꼴)
- 도시는 식량이나 물(상수도) 공급에서 자립적이지 않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농촌의 경우도 식량과 기반시설에 도시보다 유리한 입장이지만 장기간 격리상태를 버티기 어려운 상태임
 - 도시에 큰 충격(강한 전염병)이 가해졌을 경우,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용공간으로서 농촌이 역할의 중요하나, 현재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자립적이지 못하여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



[그림 III-51] 도시에 종속적인 농촌의 공간, 사회 구조

2. 전략과제

1 생활쓰레기의 배출, 재활용, 처리 과정의 체계화

■ 가정에서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홍보 강화

-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에 따른 배송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발생하는 가정에서의 부산물(스티로폼, 종이상자, 비닐 등)에 대한 분리배출 요령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함
- 현재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약 34%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는 선별과정에 어려움을 주며 재활용률을 떨어트리는데 영향
- 가정에서 분리배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바일, 리플렛 등으로 제공하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확한 정보 구축

-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기물의 발생량은 민간 영역(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것이며, 청주시의 경우 실제 배출량의 40% 이하만 계측되고 있음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생량 및 수거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하며, 이로 인하여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발생 및 수거하는 폐기물량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유사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간영역의 수거 체계가 붕괴될 경우 일시적인 보관이 가능한 후보지 선정 및 관리
 - 재활용 선별장의 선별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력과 보관장소 확보
 - 청주시 인근의 민간 소각장과 업무협약 및 연계처리 방안 마련

■ 주민들의 자발적 운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정책 시행

- 공공에서 정책이나 홍보만으로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운동이 필요함

-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록마을만들기 운동은 마을(아파트 및 농촌마을)에서 에너지(수도, 전기, 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생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실적을 평가하고, 성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초록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해 청주시의 많은 아파트와 농촌 마을의 환경보전 의식이 제고되었으며,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짐
 - 초록마을만들기처럼 주민들이 주도하여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운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필요

2 소비제품의 전과정평가(LCA) 제도 강화

■ 소비제품의 포장, 택배포장의 최소화 및 회수체계 마련

- 제품의 전과정평가(LCA)를 실시하여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임(예 : 환경개선부담금)
- 제품 판매자 또는 택배업체에서 재사용 또는 수거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권고 함
 - 포장재를 재사용 가능한 규격의 플라스틱 바구니 등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여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재사용 포장재는 택배업체, 아파트 공동수하장, 주민센터 등에 반납
- 음식물의 경우 일회용 포장이가 아닌 안전한 용기에 담아서 배달하고, 가정에서 보유한 용기에 옮겨 담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함
 - 식당 방문포장이나 드라이브스루의 경우 소비자가 용기를 지참하도록 권장



[그림 III -52] 소비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처리의 LCA과정

자료 : EU Science Hub, Life Cycle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bioeconomy, 2019

3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인간의 생태면역력 강화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도시지역에서의 인간이 아닌 생태계 중심의 녹지 및 생태축 조사, 보호계획 수립 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 지표로서 깃대종 선정 및 보호계획 수립
- 생물 서식지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충청북도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충청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

■ 자연면역력 증진을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

- 어린이의 자연면역력 증진을 위하여, 근린공원, 아파트 놀이터 및 어린이집 놀이터 등에 자연상태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놀이터로 조성함
 - 도시 내부 조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근 농촌마을과 협력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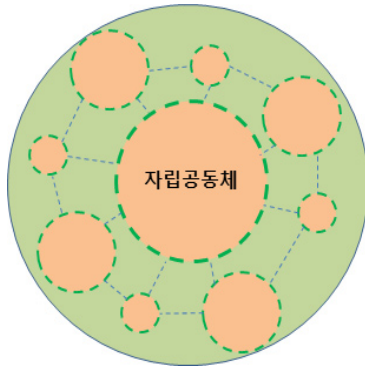


[그림 III-53] 생태놀이터

4 공간 및 사회의 분산형 구조로의 대전환

■ 분산형 자립공동체의 집합으로의 대전환

- 현재의 도시 집중, 도시 의존형 공간구조는 코로나19 또는 더욱 강력한 충격파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 이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아서, 일시에 지역 전체의 대부분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감염 등) 야기



[그림 III-54] 분산형 공간

- 인구, 사회서비스 및 기반시설이 독립적이면서도 정보교류와 소통이 원활하고 소극적 이동이 가능한 공간구조로의 대 전환이 필요함
 - 식량, 주택, 에너지, 상수도 등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자립형 공동체로 전환

■ 효율적인 블록관리체계 구축

- 외부충격(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외부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자립공동체로 이동·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가 블록단위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구축 및 관리되어야 함
-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평상시에는 중앙부(가장 큰 공동체)에서 통합관리하고, 비상시에는 외곽에 분산된 중소규모의 공동체 단위로 분리하여 관리가 가능한 블록형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됨
 - 하수도 : 기존의 통합관리체계로 운영 가능(환경오염 영향은 감소)
 - 상수도 : 통합관리체계와 블록관리체계의 병행 필요(마을상수도 및 대체수 자원 개발 필요)
 - 폐기물 : 통합관리체계와 블록관리체계 병행(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몇 개의 자립공동체가 처리할 수 있는 중간 단위의 처리시설 필요)
 - 언택 환경서비스 : 먹는 물 부족, 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사람의 이동이 필요할 때 비접촉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
- 공동체간 교류와 소통은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이용하며, 물류와 인적 이동은 무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함

제9절 보건복지

1. 현상과 이슈

1 긴급지원 대상 확대

■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계층 증가

-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54%이며, 직업별로 자영업자는 90%, 생활수준별로는 중하층과 하층이 각각 68%와 64%로 응답하여 상위층과 중상위층의 41%와 46%보다 높게 나타남(경향신문, 2020.4.3.)
 - 상위층과 중상층보다 중하위층과 하위층에서 소득감소 비중이 더 높아 빈곤 계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
- 충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0년 4월 현재 2019년 12월 대비 2,427명 증가하여, 수급률 0.16%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표 III-22 | 충청북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기준 연월	도 인구수 (명)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수급률 (%)
		가구	명	가구	명	명	
'19.12.	1,600,007	41,254	62,507	41,254	57,076	5,431	3.91
'20.4.	1,596,613	42,933	64,934	42,933	59,614	5,320	4.07

자료 : 충북도청 내부자료

■ 보편적 복지 논쟁 재등장 : 가치 충돌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1회성 경제정책으로 정책대상에 대한 가치 논쟁이 재등장함
 - 피해 계층 및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이라는 선별적 가치와 전 국민 모두 동일하게 위험에 노출되었으므로 보편적 지원이 적합하다는 가치 상충
 - 특히 2000년 이후 사회보장제도 확장과정에서 중산층들은 조세부담에 비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즉 잔여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피로감 표출
 - 자산조사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최초의 제도라는 의의

2 불평등한 위험의 재분배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가정 돌봄 부담 증가

- 사회복지시설이 전면 휴관되어 찾아가는 서비스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활용 서비스 제공이 최소화됨
-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긴급보육을 실시함
 - 시설이용 53.5%, 아이돌보미 이용 0.2%, 이외에는 부모와 친인척 돌봄(충청북도 내부자료)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18.9% 만 긴급보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81.1%는 도시락이나 식품권 등을 통해 결식 공백을 해결(충청북도 내부자료)
 - 기타 일반적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도 76.5%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체감(조선예수, 인크루트, 2020.3.2.)
- 감염병 위기에 따른 시설 휴관은 돌봄을 개별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되었고, 재택 근무제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과 돌봄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부담 특히 여성의 문제가 됨
 - 발달장애인 자녀 돌봄의 경우 부모 한 명이 생계활동과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고 보호해야 하는 현실로 돌봄 스트레스 겪고 있음

코로나19 여파... 자녀 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육아공백”

조사대상 : 직장인 826명

자료제공 : 인크루트 (www.incruit.com)



[그림 III-55]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자료 : 조선예수, 코로나19 확산에 돌봄공백 심각, 2020.3.2.

■ 불합리한 코호트 격리

- 요양원·요양병원과 같은 주거시설은 다인실 공동거주로 일정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움(경기매일, 2020.3.6.)
 - 종사자와 이용자 전수의 진단검사를 선행하지 않은 격리조치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의료영역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과 초래
 - 의료기관은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가 되는 반면 사회복지시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 격리 조치하는 것은 불합리
- 특히 종사자 감염은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인력 부족을 초래하나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격리된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위험이 발생함(에이블뉴스, 2020.3.6.)
 - 소규모거주시설의 경우 대체인력을 긴급 투입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결과 초래

■ 취약계층의 높은 감염 노출

- 기저질환이 있는 방문서비스 이용자는 감염 위험이 높지만 돌봄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우므로 서비스 제공인력을 비롯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음
- 디지털 소외계층은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음
 -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IT 기술과 연관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장보기, 마스트 구매와 같은 행위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다른 계층 대비 위험에 더 노출
 - 재난지원금 신청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은 행정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려움

3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 가증(CIPS, Corona Induced Panic Syndrome)

■ 가족갈등 확대

- 가족 간 함께 하는 시간 증가로 양육 스트레스와 피로감 증가가 보고됨
 -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 1,755건(2019년) → 1,806건(2020년)(이데일리, 경찰청 신고건수(2020.2.1.~3.31), 2020.4.6.)

- 학습진로와 대인관계 고민은 감소하고 가족갈등 상담은 증가 : 1,401건 → 1,567건(국민일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조사, 2020.4.29.)
- 가정폭력 상담비율 증가 : 2020년 1월 26% → 2020년 2~3월 40% 비증(서울신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진수, 202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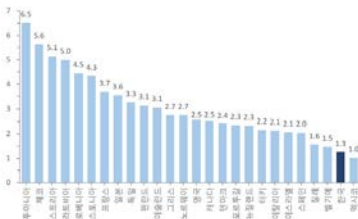
■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

- 확진자, 격리자 및 격리해제 대상자 등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 표출이 목격됨
 - 확진자, 격리자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심리적 불안과 죄책감 호소
 - 감염병 대응 참여 의료진, 공무원은 지역 내 차별과 배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 특정 종교, 특정 연령층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로 갈등 야기

4 취약한 감염병 대응역량

■ 부족한 병실

- 자부심을 느낄 만큼 공공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작동하였으나 감염병을 대응하기에는 의료시설의 부족함이 드러남
 - 2019년 12월 기준 전국 1,027개 국공립 의료기관 중 국가지정음압병상은 29개 기관 198병상에 불과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음압격리병실 운영 비율은 65%, 전국 24개 종합병원 대상 음압격리병실 가동률 49%로 집계(윤강재, 2020)
 -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OECD 국가 2위이나,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의 병상 수는 1.3개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 이러한 병실 부족은 확진자의 자가격리, 생활치료시설 등에서의 치료를 초래함



[그림 III -56]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좌), 공공기관 병상수 비율(우)

자료 : 윤강재, 보건복지 ISSUE&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3.

진료 공백

- 병원의 감염병 유사환자 거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감염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기피현상이 발생함
 -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병원 내 동선을 구분한 안심병원을 운영 중이나 제대로 된 안심병원이 많지 않아 환자들의 의료이용 기피현상 발생
 - 만성질환자의 치료 중단 및 부실에서 오는 질병 악화. 특히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환자로 주의 필요
- 병동에서 일해야 할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 파견을 나와 병동 진료 공백이 발생함

보건의료인력 부족

- 우리나라는 상시적인 의료인력 부족 상태로 의료재난사태에 일선에서 활동한 감염내과 의사는 250명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 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3.4명의 67.6% 수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했어도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메디컬투데이, 2020.4.21.)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742명을 조기 임용해 지역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와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2020.3.5.)
-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지방의료원 등 경증환자 치료시설 간호사 1명이 20여명 환자 케어함
 - 개인보호구 착용한 상태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며 환자를 보는 상황은 격심한 노동강도로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간호사 탈진 상태 야기

표 III-23 | 2030년 의료인력 수급전망(2017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2030년 수급(공급-수요) 차이	면허등록인원	입학정원
의사	-7,646	125,103	3,058
치과의사	3,030	30,915	750
한 의사	1,391	25,412	750
간호사	-158,554	359,196	19,183
약사	-10,742	70,858	1,7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인력 수급관리 대책 나서, 2017.5.2.

2. 전략과제

1 사회복지정책 재구조화

■ 보건복지관점 전환 : 잔여적 → 보편적, (지방)정부 중심 → 도민과 협력

- 감염병 위기에 노출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민 모두 감염병 위기에 똑같이 노출됨에 따라 모든 도민은 (지방)정부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려면 사회지출 총량 확대 필요
 - 위기 시 충복의 대응은 소득 기준의 취약계층 중심으로 잔여적 지원방식을 고수
⇒ 이후 위기 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 필요
- 정부와 공공기관만이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김
 - 합의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로 새로운 복지 국가, 복지도시로의 진입 기반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전 도민의 협력은 필수

■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보완

- ‘긴급재난지원금 vs. 기본소득’ : 감염병 위기의 보편성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시의적절 하였으나, 가을 2차 대유행 예고 및 발생주기 단축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여부 및 노동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1회적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성격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 고용보험 확대 :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미가입자가 50% 수준으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 축소 가 필요함
 - 특수고용직 노동자 의무가입을 제외한 법안 처리 가능성(2020.5.19. 현재)
- 실업수당제도 마련 : 소득비례실업수당, 기초실업수당 도입을 검토함
 - 소득비례실업수당 : 자율가입 원칙, 일시해고 당하면 자신이 받던 기존 임금 수준에 따라 임금의 50-7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지급
 - 기초실업수당 : 비가입자

- 상병수당제도 마련 :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함
 - 준비서류 : 전염병 관리 담당 의사가 발행한 휴직, 고립, 격리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 16세 미만 자녀가 전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해당 자녀를 돌보기 위해 출근이 어려운 피고용인에게도 지급
 - 전염병에 의한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없이 즉시 지급
 - 실업수당 받는 실업자가 질병 시 실업수당 지급은 중지되고, 기존에 받고 있던 실업수당 급여액의 86%가 상병수당으로 지급(스웨덴), 학생들은 상병수당 최저액 수급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감염병 위험 자체를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으며(긴급복지지원법 2조), 법 개정 이전에도 중복의 대상 범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음
 - 중위소득 75%라는 소득기준 삭제, 중위소득 100% 미만자 생계지원금 제공,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조건 없이 생계비 빌려주는 방식 필요(예; 경기도 극저신용 대출사업)
 - 장기적으로 긴급재난지원법으로 법령 및 개정 필요 : 경제, 사회, 심리 차원의 급여와 서비스 확대

2 돌봄 안전망 구축 및 소통체계 강화

돌봄서비스 컨트롤 타워 구축 :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치

- 충북 사회서비스원 건립 및 종합재가서비스센터 지정을 통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취약 부분 지원을 강화함
- 시설이용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
 - 지역사회 고위험군(기저 질환 있는 고연령층) 또는 고위험집단(독거 고령자, 집단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예;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반장 방문활용 개인돌봄 서비스 제공 등)
 -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단 밀집형 서비스 제공 보다 지역사회자원이 연계 작동하는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계기 마련

■ 주거(생활)시설 격리실 운영 의무화

- 현행 기준은 집단 주거(생활)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격리공간을 둘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하지만 격리공간을 두어도 1~2인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어 실효성 담보가 어려우며, 전담직원 배치 시 기존 입주자를 위한 돌봄인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효과적 대응이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 이에 공간 확보 및 별도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하며 더 나아가 거주시설 소형화가 필요함

■ 사회적 소통체계 강화 : 포용과 연대, 공존과共生, 심리적 다가서기

- 재난 상황 종식이라는 공동체적 목표달성을 위해 특정 집단의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유대와 참여가 필요함
 - 도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 공포 해소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발생 알림 서비스와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메시지 제공(예: 힘내라 부산, youtube)
 -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의 불안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읍면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아파트입주자 대표, 주민자체모임 등 지역공동체가 소통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활동(마스크 만들기, 아동 기초학습 지도, 노인 가정 방문 등)
- 사회적 거리도 가족간에는 무의미하며 여성은 가족 내 돌봄을 불평등하게 책임 지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함
 - 가족갈등예방수칙(가족유대강화예방수칙) 보급을 통해 배려와 존중을 환기하고 갈등 완화
 -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심리지원
 -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갈등예방수칙 등 보급

3 디지털 복지 활성화 도모

■ 상설 온라인(모바일) 복지서비스 운영

- 온라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AI 활용, 사회교육 콘텐츠 개발, 취약계층 또는 정보소외계층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심리안정프로그램 등을 영상이나 카드뉴스로 제작 송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보급

■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 지원 확대

- 디지털 기기 접근과 이용의 격차는 계층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함
-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취약계층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기에, 디지털 소외계층 또한 ICT 활용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인식수준을 디지털 시민역량 제고 차원의 교육으로 전환 필요
 - 디지털 조력자(Digital Supporter) 확대 : 노노케어 또는 청소년 봉사활동 시간 활용해 세대간 단절 축소,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화 교육, 복지기관의 정보화교육 강화
 - 노인 친화적인 앱 구성(아이콘, 스토리 등)

4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 감염병에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보유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하며 특히 감염환자 중 최소 5%가 중증치료실을 필요로 할 때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하므로 국립대병원을 통해 중환자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필요함
 - 음압 병상 확대 및 이동형 음압기 일정 대수 보유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적 부담 지원
 - 충북의 남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민간병원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화
 -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공모사업**(보건복지부, 2020.4.14.~5.22.)

- ◆ **신청대상** | 중부권과 영남권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 ◆ **지원규모** | 개소당 40,867백만원(36개 음압병실, 6개 중환자실 포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상 확충 공모사업**(보건복지부, 2020.4.14.~5.8.)

- ◆ **신청대상** | 기존 29개소 및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보유 신규 의료기관
- ◆ **지원규모** | 약 80병실(개소당 5~15개 병실) 확충
- ◆ 병실당 3.5억원 시설비(동선 분리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 시 1.5억원 별도 지원)

■ 감염병 환자 배분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마련

- 다수 감염자 발생시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경증환자를 고려한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함
 - 생활치료시설, 경증치료 의료기관, 중증치료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를 원활히 배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시군 보건소 중심의 공공보건 시스템 정비 및 확충

- 보건소의 기능강화를 통해 선별진료의 무료검사,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건소 직원의 지원, 확진자 발생시 병원 이송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미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시설을 확대 설치 하여 접근성 제고
 - 상시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질병예방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 필요

5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미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

- 감염병 분야는 연구자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기피하는 분야이며, 정부의 장기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수준 및 연구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림
- 바이오 헬스 등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감염병 연구와 의료기기 개발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확대가 요구됨

■ 보건의료인력 양성 확대 : 국공립 의대 정원 확대, 역학조사관 충분한 확보

- 의료인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기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을 확보해야 함
 - 국공립 의대 정원확대를 통한 의료 양성, 감염병 전공 확대
 - 환자당 간호인력을 규정화하여 병상당 간호사가 OECD 평균의 1/5 수준인 열악한 간호노동 현실 변화 필요

- 국가장학생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방안 모색
-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 발생 시 필요 간호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비
- 충북 감염병관리지원단(2020. 7월 운영 시작)을 통해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함
 -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시 보건소 인력을 활용해 교육훈련 이수하고, 감염병 위기 시 직무 전환 후 현장 투입
- 돌봄인력 감염 및 부족 시 응급 교육을 통한 투입시스템을 구축함
 - 감염병 확산 시 여행, 문화 분야 등의 사업은 위축되고 종사자들은 잠재적 실업 상태이므로 이들을 비상대응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장애인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여 간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감염병의 높은 전염력으로 인해 간병인력 확보 필요
 -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긴급재난지원으로 인해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공공영역에서 인력활용 지원도 필요

도민 헬스케어 프로젝트 시행 : 건강 충북 프로젝트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면역력 증강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됨
 - 기저질환 예방 및 개인별 질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도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산
 - 고령층의 감염병 위험도가 높으나 청년 및 중장년층을 포괄하며 장기간에 걸친 건강증진을 프로젝트화
-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노출되고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게 심리상담과 감정노동 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가족 및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함

■ 원격의(진)료 제도화 준비 : 부작용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복 시스템 점검

- 일시적으로 풀린 원격진료(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 의약품 배송)는 응급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본격적인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음
 - 국민 전체의 건강권 보장, 기저질환 모니터링,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나 대형병원의 진료집중화, 의료민영화라는 이유로 반대
- 원격의료의 범위,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절차적 규정 등 의료법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 관련 법률과 클라우드 컴퓨팅법, 정보통신망법 등 ICT 관련 법률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충북도에서도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도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그림 III-57] 중국 라오닝성 의사의 우한시 환자 원격진료

자료 : 이코노미조선, 의료계 보이콧, 전문가 상시 허용해야, 2020.3.2.

제10절 행재정

1. 현상과 이슈

1 코로나19 이후의 행정

■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로 대전환

- 행정자치부는 ICT 강국으로서 전자정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로 패러다임을 전환함
- 전자정부 시스템의 고도화와 원격근무 인프라 확충이 위기상황에서 원격근무 및 온라인 협업을 가능하게 함
 - 정부 원격근무서비스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³⁶⁾ 도입

표 III-24 | 온나라(On-nara) 시스템 개발 및 보급연혁

연도	내용
2005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On-Nara Business Process System)개발 (온-나라 문서)
2006	정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개발(온-나라 정책연구)
2008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GKMC'(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개발 (온-나라지식)
2014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나라e음'개발(온-나라 이음)
2015	온-나라 시스템과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개발
2016	통합 온-나라 서비스 개시 /일부 기관부터 온-나라 문서 2.0 서비스 개시

자료 : 서주현(2017:60-63), 통합 온-나라 시스템, 행정포커스 2017 1+2 NO. 125.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외3.(2020). COVID 이후 국가·사회회복력(Resilience)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의 방향. ISSUE PAPER, 재인용

■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대책

-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대책반을 운영함
- 방역대책반은 질병관리본부-충청북도-시·군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의료기관 신고체계 정비, 의심사례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함

36)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 국내·외 출장지나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사무실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팀은 진단검사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4개소 10명에서 6개소 21명으로 확대 개편함

감염병 경보 단계의 확산

- 우리나라의 감염병 재난단계는 심각성과 유행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하며 전염병의 위기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함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일본)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반드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중앙방역대책본부 (일본)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 (일본) 운영 지속 ● 중앙방역대책본부 (복지부) 설치·운영 ● 필요시 총리주재 방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법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그림 Ⅲ-58] 국가 전염병 재난 발령단계

자료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6

2 비대면 행정수요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리적 공간의 분리 :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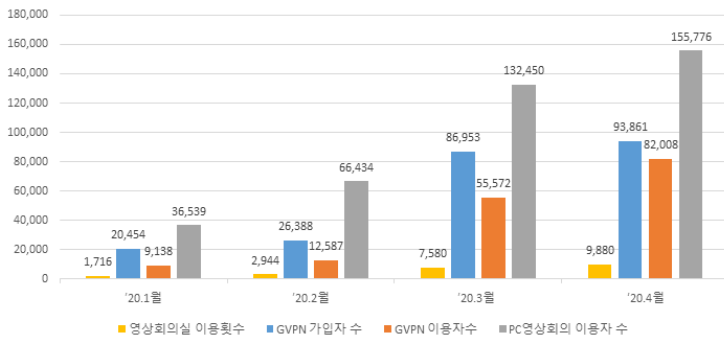
-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전달함

- △사무실에서 대인 접촉 최소화,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제한,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 모임 최소화 등을 골자
-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이후 영상회의, GVPN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률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월 대비 4월에는 약 300~800%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 표 III-25 |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구분	주요내용
사무실에서 대인 접촉 최소화	◆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인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근무 ◆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은 재택근무 대상으로 우선고려(임신부는 임신 검진휴가 활용 가능) ◆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운용 의무화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출근 금지(증상 발생시 즉시 퇴근) ◆ 코로나19 전파 국가·지역 방문 시 복귀일 기준으로 14일간 재택근무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제한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을 원칙 ◆ 국내·외 출장은 본 지침 적용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 ◆ 불가피한 출장, 행사 또는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운영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 모임 최소화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 회식 및 사적인 모임·행사·약속·여행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자료 : 인사혁신처,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지침, 2020.3.24.



[그림 III-59] 비대면 업무시스템 이용

자료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폭증, 2020.5.

■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증가

- 코로나19로 발생 이후 민원실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대폭 증가함
-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 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민원서류의 건수는 33,631,641건으로 전년 동기 26,162,279건 대비 28.6% 증가

| 표 III-26 | 비대면 민원서비스별 민원서류(전체) 발급건수('20.2~3.)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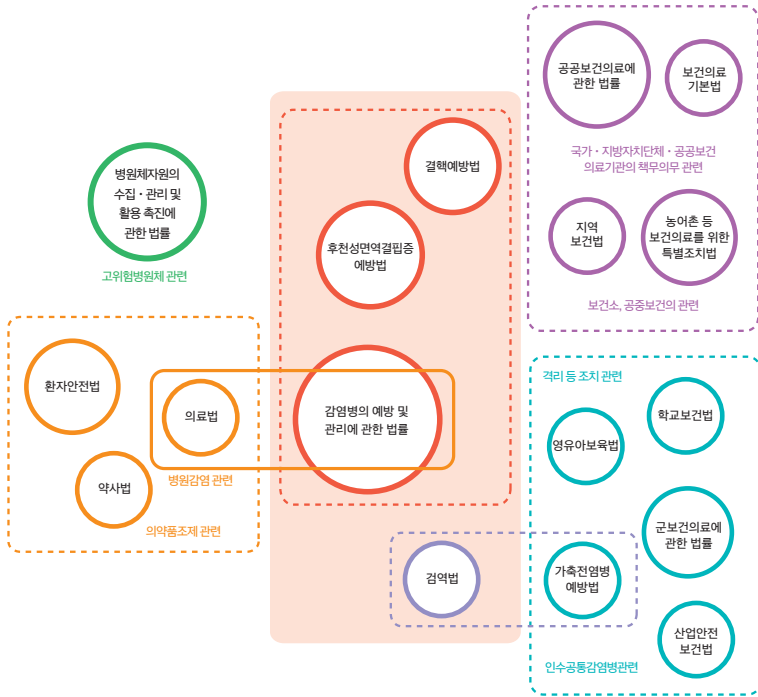
구분	'19.2.~3.	'20.2.~3.	증감	증감률(%)
계	26,162,279	33,631,641	7,469,362	28.6
정부24	20,911,351	27,146,770	6,235,419	29.8
무인민원발급기	5,250,928	6,368,616	1,117,688	21.3
전자증명서	-	116,255	116,255	순증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4.

3 감염병 관련 법령의 정비

■ 감염병 제도 개선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코로나 19와 관련된 전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법률체계는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이 연계되어 있음



[그림 III-60] 감염병 대응 관련 법체계

자료 : 이준서, 감염병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2020., 재인용

- 이러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이 요구됨
- 충청북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를 제정 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음
 - 다만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6.5.13. 제정), 「괴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6.7.1. 제정), 「충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6. 8.12. 제정),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5.8. 제정) 등이 있으나, 나머지 도, 시·군은 미제정

| 표 III-27 | 재난 관련 법령

법령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리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 인사혁신처,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지침, 2020.3.24.

4 국가경제 침체로 인한 국세의 신장성 제약으로 재정 위축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신장성 위축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경기가 얼어붙으면서 2020년 1분기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수출마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WTO는 2020년 세계무역 증가율 하락을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통관 기준, %, 전년비)은 '20년 1월 △6.3%, 2월 4.3%, 3월 △0.7%, 4월 △24.3% 하락하는 등 국세 신장성의 전반적인 위축 예상
- 국내경기의 경우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경기위축이 제조업으로 확산 되면서 내수 침체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면서 국세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위축이 예상됨
 - 소매 판매액지수는 2020년 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생산 중 3월 기준 전월대비 숙박·음식업(△32.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45.9%) 등의 감소세 확인
 - 2020년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0.8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무역 및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인해 법인세, 소비세 등 국세의 근간을 이루는 세목의 신장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국세의 신장성이 위축되면, 지방의 경우 국세에 기반한 지방교부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보조금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방의 사업량이 줄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저하

-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설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설을 포함한 75조원 이상의 기업안정화 대책 마련
 - 한국판 뉴딜 : 2020년 5월 말 계획 발표
 - 특별교부세 : 519억 원(3월18일)
 - 고용안정 특별대책 : 고용유지 지원 0.9조원, 실업대책 3.7조원, 일자리 창출 3.8조원, 고용 사각지대 생활안정 1.4조원에 총 10.1조원을 투입 예정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 기금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1.5%) 대출 공급
- 국세 인하 및 감면 등 지원을 통해 침체한 국내경기에 활로를 찾고 있음
 - 중소기업 세액 감면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20년 한시)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2020년 한시)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해외진출기업 국내 사업장 증설시 세제지원 :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5 상시적 재정구조조정과 신속집행으로의 재정운영 방식 개편

신규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지방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사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부 발주사업의 신속집행을 통해 재정투입의 효과 극대화 노력

- 정부발주사업 계약 등 조건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정투입에 노력하고 있음
 -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속한 재정투입이 가능하도록 개편
- 또한, 계약지침을 통해 금년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으며,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등 노력을 통해 위축된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6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 정부가 2월 28일과 4월 8일에 발표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2년에 걸쳐 중앙과 지방에 2조 1,268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0)
- 현행 세입배분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전체의 53.2%인 1조 1,311억원, 지방세입은 46.8%인 9,957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세제지원 내용	세입효과(감소액)(억원)	
	총세입	지방세입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20년 한시) ▶ 소득·법인세 감면 : 소기업 60%, 중기업 30%	3,400	1565
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 상향 ▶ 3,000만원 → 4,800만원('20년 한시)	200	105
③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20년 한시) ▶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7,100	3,736
④ 자발적 임대료 인하('20년 상반기) 임대인의 세액 공제 ▶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추정 어려움	
⑤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20년 3월~6월 한시) ▶ 한도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세13만원)	5,233	2,095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3월~6월 사용분) 소득공제율 2배 확대 ▶ 신용카드 15% → 30%, 현금 등 30% → 60%, 전통시장 등 40% → 80%), 단 '22년말까지 적용	3,449('21)	1,587
⑦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확대('20년 한시)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0.03~0.05%p 상향	1,886('21)	868
⑧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1년말 限) ▶ 국내 사업장 증설 경우도 국내복귀 기업 수준 세액 감면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5년)+50% 감면(2년) *관세 100%(부분 복귀 시 50%) 감면	세입감소 효과 없음, 단 일정 기간 경과 후 세입효과 발생	

[그림 Ⅲ-61]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주 : 세제지원 방안의 ①~③은 기획재정부 및 ⑥~⑦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값이며, 세입감소 추정액은 2조 1,268억원

자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정부의 대응과제, 2020.5.7.

2. 전략과제

1 공공기관의 일하는 업무방식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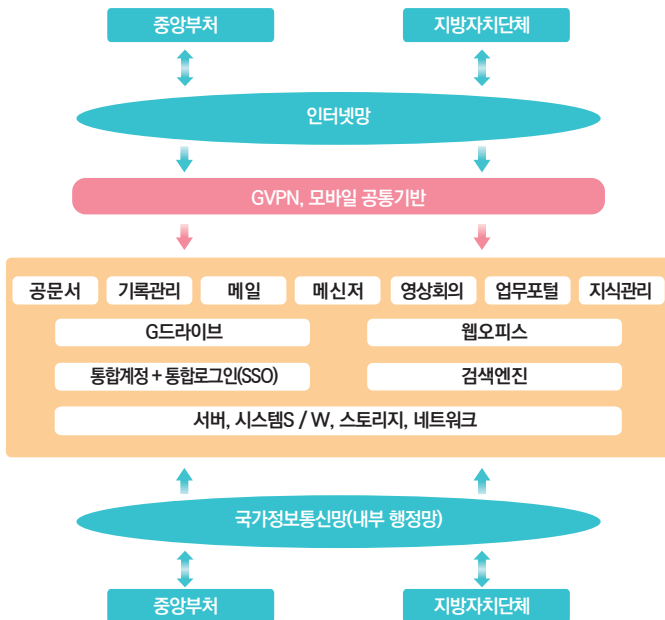
도민의 감염병 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통채널 강화

- 자치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도민들은 경청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은 추가 감염 및 전파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사회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폭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의 파생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 필요(오윤경, 2020)
-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 불확실성의 해소, 명확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및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 충북도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하고 알기 쉽고 상황변화에 즉각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충청북도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관계 중앙부처의 웹사이트에 유기적으로 연계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
- 특히 지역사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감염대책이나 감염상황 등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함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거나 감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제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소통 강화

재택근무·영상회의·유연근무제 확대

- 코로나19가 가진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외부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지연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집에 머무르기(Stay at Home) 등의 지침이 권고함
- 과거에는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재택근무가 도입하지 못했으나,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남
 -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

-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공무원들이 좁은 업무공간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고 상호간에도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재택근무가 필요함³⁷⁾
 - 공무원들이 쓰는 내부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설치하고 업무전화는 착신전환하며 매일 전날의 업무성과와 당일 업무계획을 보고
-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고, 디지털 생활에 익숙해짐에 따라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영상회의 등이 확대해 나가야 함
-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충청북도가 효과적 수단을 활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 요구됨
 - 재택근무와 영상회의를 통한 업무흐름 문제점 개선, 정서적 소통과 소속감,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모바일이나 원격에서도 언제나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 도입



[그림 III -62] 정부 공통 행정업무시스템 구성

자료 : 디지털타임스, 2020.4.16.

37)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연합뉴스, 202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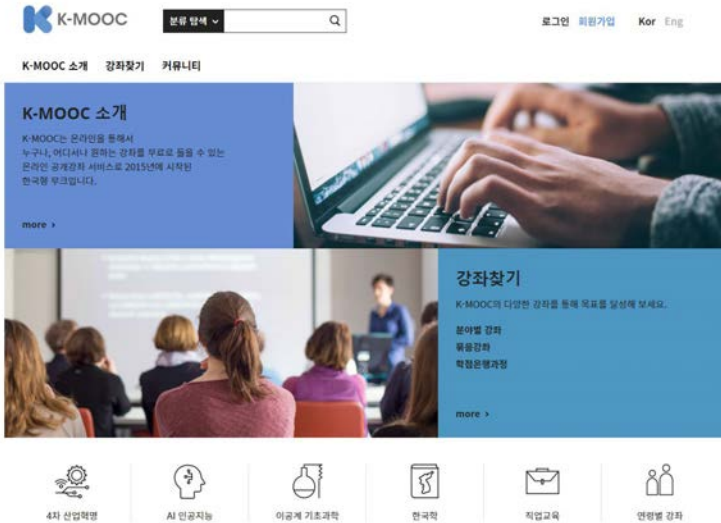
■ 공공기관 채용 등 대면업무 및 관련기관 간의 업무조정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응시생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 제1항,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에 의거하여 채용시험이 연기됨
- 코로나19 이후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상호소통이 없이 공공기관 시험 일정이 조정됨으로써 지방직 시험 중 일부 특수 직렬에 대한 가산특전을 부여받지 못하는 일부직렬은 응시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를 발생함
 - 공무원 시험과 산업기사 시험일정의 중복의 문제 발생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출됨에 따라, 향후 전염병 발생에 따른 공공기관 채용시험 변경 매뉴얼 작성이 필요함

2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디지털 원격교육을 위한 기능강화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충청북도 단재교육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교육기관에서도 방역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교육훈련이 잠정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향후 교육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함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은 대면 교육훈련은 일정연기 혹은 교육 취소로 인해 나라 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집합교육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은 잠정적으로 중단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격상(경계)로 인하여 근거리·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이 불가피함에 따라 교육생 및 공무원의 감염증 예방을 위한 비대면 원격 교육기능이 강화됨
- 온라인 플랫폼기반 온라인 교육으로 비대면 교육활동의 속도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형 디지털 공무원교육 훈련 환경조성이 필요함
 -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및 지식을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기반 구축으로 공무원 기본교육 확대 실시
- 정보통신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 교육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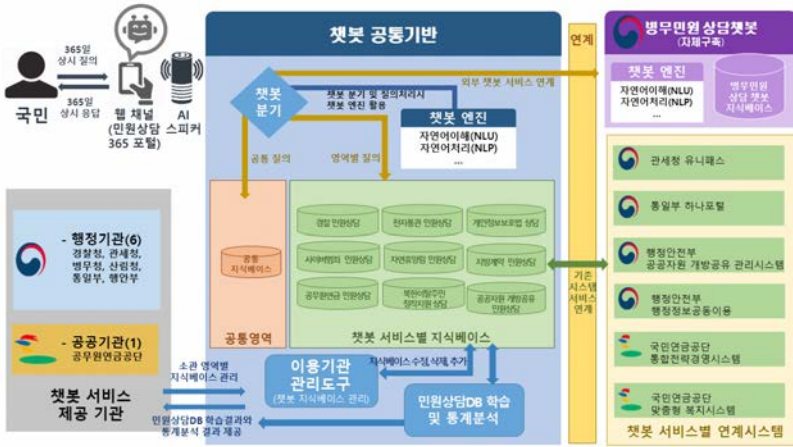


[그림 III-63] 한국형 공개강좌 K-MOOC

자료 : K-MOOC 홈페이지 화면캡처

■ 디지털 민원상담 챗봇 구축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방안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이 대면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증가할 것임
- 디지털 전환 등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민원 서비스의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음
- 행정안전부 '민원상담 챗봇'은 국민이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대해 민원상담을 할 때 하나 챗봇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함
 - 챗봇 지식베이스 : 챗봇이 이용자가 물어본 것에 대하여 답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집합
- 최신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지방정부에 걸 맞는 행정환경을 구현함
-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구축 완료 이전까지 정부24를 통해 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되, 노년층에서는 물리적·정신적 접근성이 어렵기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민서비스를 개선해 나감



[그림 III-64] 챗봇 서비스 전체 개념도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5.13.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가치창출과 현안에 대한 집단지성의 참여

-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으로, 기존 피라미드 지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음
 - 인간의 조직이나 사회 등 지성을 갖춘 개인들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이 일어나고 그 학습의 결과는 공동의 기억으로 보전 활용되면서 더 높은 차원의 협력과 문제해결이 가능
- 집단지성의 힘을 결집하여 지역의 위기·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지향하여야 하며(이왕진, 2020), 충족도는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고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손쉽게 자치단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가칭)충북 집단지성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 미래학자, 정책분석가, 시민사회대표, 기업인,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되어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주요 트렌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 트렌드를 선정

- 이러한 플랫폼은 지역사회의 주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이 플랫폼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들이고 삶에 유용하게 만들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임
 - 지역사회의 갈등³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어떤 개인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필요
 - 사회적 규범과 규칙 안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는 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위기상황에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표 III-28 | 피라미드형 지성과 집단지성 비교

구분	피라미드형 지성 (Pyramidal Intelligence)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정보구성	폐쇄적인 환경	개방적인 환경
지식 원동력	수동적인 상의하달 방식	창의적인 발상 및 참여
지성의 분배	중앙집결적	분산형
변화의 행태	정적	동적
변화의 행태	적음	많음
형성수단	물질적 재산이나 지식	사람(모든 지적 능력)

자료 : 박재천·신지웅, 웹 2.0 플랫폼에서의 집단지성 활용방안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8권 2호, 2007.6.

- 지역사회 공동체 플랫폼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하거나 행정서비스 영역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축적된 경험을 중심으로 전체적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 하고,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

읍·면·동 중심의 방역지원체계 강화

- 충청북도, 시·군 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민참여 방역 및 예방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함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진료소,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방역지원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충청북도, 시·군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

38) 중국 우한에서 송환된 한국 지역교민과 유학생을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나눠 격리 수용의 지역선정과 관련하여 진천군·아산시 주민들이 수용시설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한 반대가 나타남(중앙일보, 2020.1.30.)

- 읍·면·동 방역지원대책상황실은 읍·면 보건진료소를 통해 마을단위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감염예방수칙 교육과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단위 관리체계를 확립함

지역마을공동체 기반 생활자치 유도

- 코로나19는 단기간에 종료될 가능성이 낮으며,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 하더라도 사회문화적으로 예전으로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함
- 이러한 팬데믹 현상이 초래한 혼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될지 모르며, 넥스트 노멀 시대에 따라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중심으로 고령자,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생활자치 실천 매뉴얼을 마련 필요(광주전남연구원, 2020)
- 주민생활을 지원하고, 이웃과 소통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과 함께 사회적 고립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주민자치회를 비롯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통·반장단협의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생활단위의 안전을 실천하는 자치활동 요구

감염병 이후 지역사회의 회복력 재생³⁹⁾

- 코로나 19 이후 충북도는 행정시스템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정책적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도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도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뢰도를 제공
 - 코로나19의 치료법 개발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제공
-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경제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 가 필요함
 - 세계적인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감염현상으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위한 행동방침을 마련하여 대처수준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들이 충분히 협력해 줄 것인지 의심(Gostin, 2004: 2623)

39) 회복력은 개인, 조직, 도시, 국가 등의 재난에 대한 예방능력 혹은 개선능력을 뜻하며, 이는 재난과 같은 외부충격으로부터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춘 시스템의 전환 능력을 내포(서지영, 2014)

- 세계보건기구는 오래전부터 생물·화학 인자 또는 방사능 물질이 우연하게 노출되거나 의도적으로 사용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모색했지만, 때면 국제공조가 부족하여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막지 못함(Institute of Medicine, 2003; Klemperer & Shapiro, 2004).
- 지역사회단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차원의 복원력을 재생시키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함

4 자치단체간 방역·안전관리 역량 강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요구됨
 - 현재 증평·괴산·충주·청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기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미제정
- 충북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 시장·군수의 역할,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 도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지역 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이 요구됨

■ 감염병 전문병원의 구축

-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에는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치료, 위기상황에는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담당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에 있어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함
 -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전국 29개 병원 190개 병상을 운영 하고 있으나, 충북의 경우 충북대병원(1인실 2, 다인실 3인실 2, 2인실 1)에 한정
- 질병관리본부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이 확산할 때 권역 내 환자를 일시 격리·치료를 하는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중부권에 1곳(대전·충북·충남·세종)을 선정할 예정임(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351호)
 - 강원, 충북, 전북 지역의 경우 감염병 전문병원 미확보(박재희, 2020)

-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와 충청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력 및 감염관리역량, 감염병 대응 등 운영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감염병 대응을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충청북도의 빠른 대응으로 확산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과 연계 필요(이재호, 2020)
-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의 전개양상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고, 대응 과정에서 수습과 확산방지 노력이 동시에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청 북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상시방역체계(보건복지국)와 긴급재난대응체계(재난안전실)간 역할 구분 명확
- 일상화된 방역·재난에 대비한 충청도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여, 역학조사·방역·통제 기능 간 연계성을 고려한 질병관리 조직기능을 확대하며,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기반 민관통합 위기관리협의체를 운영을 제안함
 - 컨트롤타워 구축, 위기관리포럼 등
- 코로나 19는 지역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광역적 차원에서 현장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전담조직기능의 확대와 대응과정의 협의·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함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역량 기반강화와 역학조사관 충원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환자발생 이후 긴급진단검사팀을 구성하여 정부의 확진 판정을 신속히 대행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 현재 충청북도 역학조사관은 3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규모 감염병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관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발생원인,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는 것이 필요함

5 제반세제 혜택 및 유동성 확대로 정책의 적시성과 실효성 제고

■ 한시적 지방세 경감으로 지역경제의 유동성 확대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등을 통해 납세 부담 완화하여 휴·폐업 등으로 인해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함
- 또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이 소비 위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영세소상공인 대상 2~3년간 지방소득세 50% 인하
 - 착한임대인 사업에 동참한 건물주 대상 재산세 인하

현재 시행중 제도

-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
- ◆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참여문화의 조성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정책수단임
 -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 지방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시행중 제도

- ◆ 총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원 까지 판매

■ 재난상황에서의 위기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서비스 강화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약금 부담 문제, 계약해지, 거래단절, 손해 배상, 피해보상 등 법적 분쟁 관련 고충이 우려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해야 함
-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적시성 제고

- 중앙정부의 철저한 재정사업관리를 통하여 역대 최고수준의 1분기 조기집행 진도율을 달성함
 - 중앙재정 조기집행은 1분기 35.3%(108.6조원) 집행하여 최근 10년간 최고 실적 달성
 - 사업예산 9.9조원 중 5.12. 기준 8.7조원(88.3%)을 집행하여, 2개월 내 집행 목표(75.0%) 초과달성
- 충북도 또한 예산 조기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부의 예산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필요가 있음

■ 효율성 낮은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3년간 0.3조원을 감축할 계획에 있음
 - 구조조정 비율(사업수 기준) : ('19) 26.3% → ('20) 36.1%, +9.8%p
- 지원 필요성(타 사업과 유사·중복, 목표 기달성 등)이 낮거나,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지방정부는 선제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표 III-29 |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20년 예산		'21~'23년(3년간)
	사업수	예산(A)	감축규모(B)
폐 지	14	1,579	△1,579
통폐합	5	527	△527
감 축	68	20,255	△1,265
사업방식변경	130	54,054	-
정상추진	24	9,112	-
합 계	241	85,526	△3,371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2020.5.8.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 정부는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할 계획임
 -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 정부는 비대면 산업 확대, GVC 재편 등 세원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 유도 계획
- 충북은 정부추진 뉴딜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측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6 지방재정의 분권성 강화 및 효율적 예산집행체계 구축

■ 국세의 신장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 행정안전부는 26일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긴급 지원함
 - 대구 100억, 경북 80억, 서울·경기 각 37억, 부산·경남 각 32억, 광주 23억, 인천 20억,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 대전·울산·제주 각 16억, 세종 14억 등
 - 기지원 현황 : 총 230.5억원(1차 48억, 2차 157.5억, 3차 25억)
- 2020년 특별교부세는 14,451억원 규모로 재난안전수요에 재원의 50%에 해당하는 7,226억원이 배정되어 있음
 - 재난안전수요는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교부·운영
-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난 안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19.24%의 3%를 배분받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재난안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배분률을 높일 경우 교통교부세(97%) 비중이 낮아지게 되며, 이는 지방재정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 필요

■ 확장적 지방재정정책으로 정책기조 전환

- 고용 감소,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국가는 4대 핵심 분야(고용·소득·건강·사회서비스)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도 대응 지방비 매칭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재정안정화기금 전략적 활용

-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는 이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방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법」 제14조, (조성액) '18년 말 0.5조원 → '19년 말 5.4조원
- 당해연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함

■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예산집행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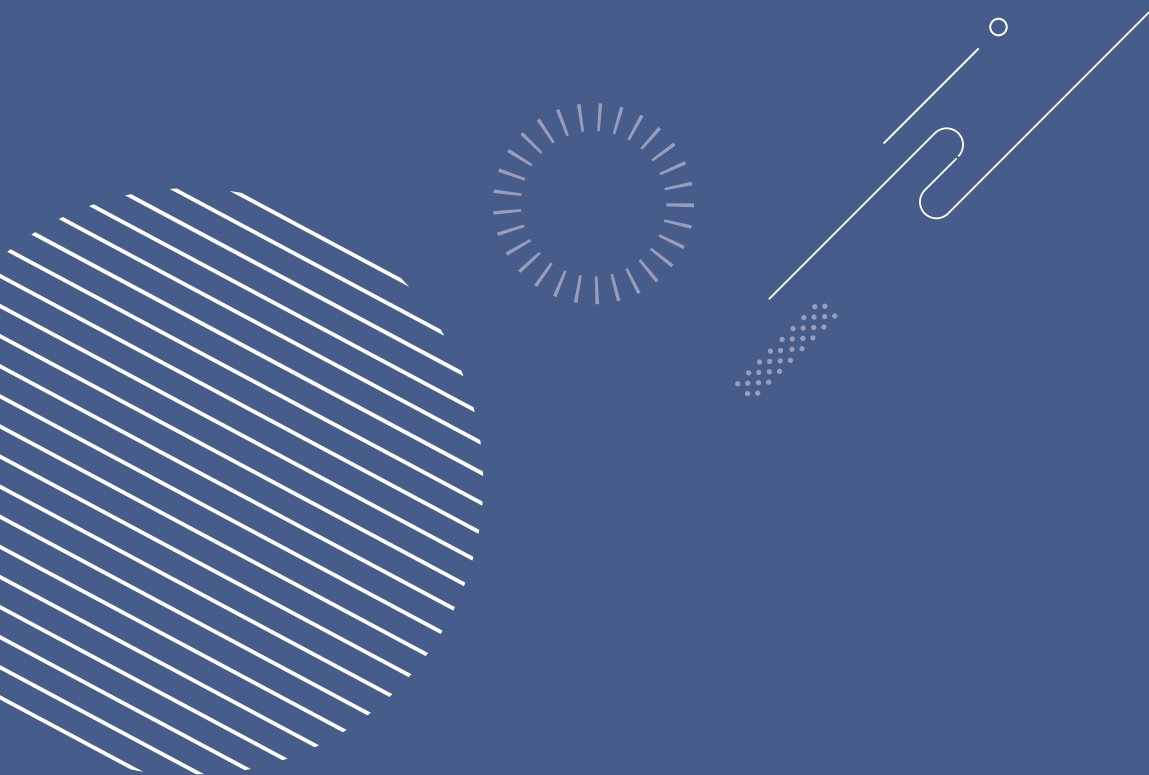
- 집행률은 2019년 80% 중반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결산상 잉여금은 40~50조원 규모로 이·불용액 축소를 위한 신속집행이 필요함
- 예산 편성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연내 집행 가능성, 연차별 추진계획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 추경예산편성 시 집행 부진사업 예산삭감 후 타 사업에 재편성 등 연내 구조조정
 - 국가 기본계획 반영·타당성 조사·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에 미리 대비

시행

넥스트 충북, 미래 설계

제1절 | 전략방향 설계

제2절 | 넥스트 충북을 위한 제언





“Seeing is Believing”

속담처럼 인간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더 많이 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자현미경, 방사광가속기 등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봄으로써
미지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바이러스의 세계는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미지의 영역인 셈이다.

제Ⅳ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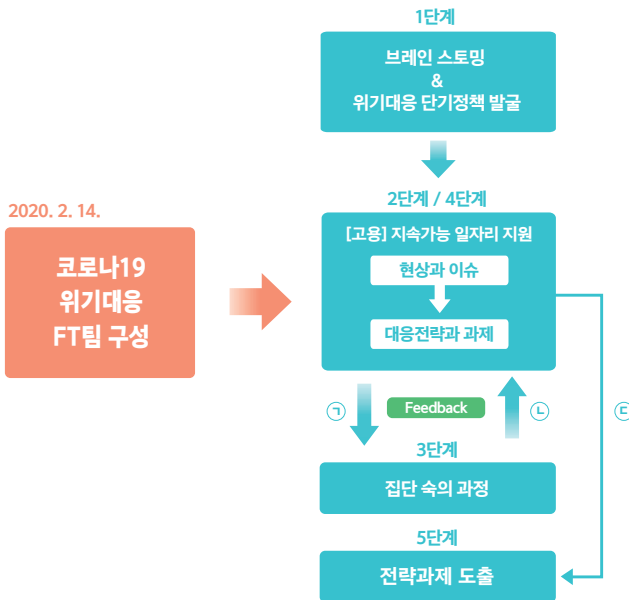
넥스트 중복, 미래 설계

제1절 전략방향 설계

1. 전략과제 구조화

1 도출과정

- 시행방안 모색을 위해 제Ⅲ장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넥스트 중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재구조화 함
- 10개 부문에 대해 △현상과 이슈, △대응전략, △추진과제 및 △시행시기 측면으로 구분하여 재구조화 하였으며, 제Ⅲ장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진 숙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함
 -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과제 발굴시 확장 가능한 형태로 구성



[그림 IV-1] ‘넥스트 중복’ 전략과제 구조화 과정

2 부문별 전략과 과제

산업경제

표 IV-1 | 산업경제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산업경제		
현상과 이슈	◆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피해 확산: 영세 소상공인 피해 직접 노출 ◆ 소비심리 위축 및 비대면(Un-tact) 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 제조업으로 충격 전이의 가시화 ◆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 대두: 글로벌 제조기업의 리쇼어링 현상 가속화 ◆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 가능성 재확인: K-방역 및 K-바이오에 따른 한국의 위상 강화 ◆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대응전략		추진과제	비고
◆ 데이터 기반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한 산업별 리스크 관리 매뉴얼 구축 ◆ 데이터 기반 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적시적 대응체계 마련 (경제충격 대응 시스템,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DB 구축 등)	단기 중장기
◆ 대면서비스 위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원 확대 ◆ 온라인 서비스 진출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스파트픽업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 스마트상점(비대면) 창업 지원	단기 단기 단기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피해기업의 자력회생을 위한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 ◆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단기 중장기
◆ 글로벌 가치사슬 재평가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수출판로 다변화 방안 모색 ◆ 리쇼어링에 대응한 글로벌 기업 및 유턴기업 투자유치 전략 수립	단기 중장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		◆ 감염병 위기대응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항 바이러스 뉴딜사업 추진 ◆ 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육성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디지털 SOC 기반 선제 구축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주 : 제Ⅲ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고용·일자리

표 IV-2 | 고용·일자리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고용·일자리	
현상과 이슈	서비스업 고용 위축과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에 따른 고용쇼크 현실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고용의 양적·질적 문제 발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비대면(Un-tact)과 디지털 중심	
대응전략	추진과제	비고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고용 연계 강화 전략 추진	미래지향적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강화 : 기존 추진 산업과 고용 관련 전략을 연계·세분화	단기
	지역산업 넥스트 노멀 재편	단기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단기
단기적 지원확대 및 미래인력수급 대응체계 구축	소상공인·기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확대	단기
	고용상황 모니터링 및 미래인력수급 대응체계 구축 : 글로벌 경기변동 및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	중장기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법·제도적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보	단기
	전략적인 기업 투자유치와 차별적인 지원	중장기
	기술적 실업 방지, 평생교육 등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에 대한 지원	중장기
충북형 일자리 뉴딜사업 추진	대학-지역-산업 연계 인력양성 시스템 및 창업생태계 조성	중장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충북형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단기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뉴딜 추진	단기
	지역 노후 인프라 정비를 통한 SOC 인프라 혁신	단기
	디지털 연계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대응	단기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개선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	중장기

주 : 제Ⅲ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과학기술

표 IV-3 | 과학기술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과학기술	
현상과 이슈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국제공조 노력	
	◆ 스마트 비대면 헬스케어 기술 수요 증대	
	◆ 주요국 감염병 대비 정책 추진	
	◆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R&D 추진	
	◆ 언택트 지원기술 수요 증대	
대응전략	추진과제	비고
◆ 초고속통신기술 보급 확대	◆ 5G 이동통신 활용 언택트(Un-tact) 기술 개발 및 응용서비스 발굴	단기
	◆ 5G 네트워크 장비의 글로벌 역량 확충	중장기
◆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확산에 따른 지원강화	◆ 비대면서비스 R&D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단기
	◆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호정책 수립	단기
	◆ 언택트 산업 응용기술개발 기업 지원	단기
	◆ 비대면 제품의 국산화 지원	단기
	◆ 비대면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 UX/UI,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중장기
◆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연계한 정책 방향 설정	◆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활성화	단기
	◆ 기업간 연대 및 협력	단기
	◆ 바이러스 백신/치료제 연구기반 구축	단기
	◆ 교육, 관광, 산업 분야 가상/증강현실 SW 콘텐츠 개발	단기
	◆ 방사광가속기 활용 소부장 기술개발 R&D 발굴	중장기
	◆ 바이러스 지역역학조사 대응 DNA기술 개발	중장기
◆ 국제/국가적 공동연구 체계 구축	◆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 'R&D-규제-인프라'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정책 재점검	중장기
	◆ 국제공동연구의 강화 : 글로벌 관점에서 문제 해결	중장기

주 : 제Ⅲ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농축산

| 표 IV-4 | 농축산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농축산	
현상과 이슈	◆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 국내 생산 및 자급의 중요성 공감 ◆ 농업위기와 식량충격: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낮은 식량 자급률 지속 ◆ 학교급식 중단과 농촌관광 침체에 따른 농가경제 악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농업의 구조 및 정책 변화	
대응전략	추진과제	비고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노동력 확보	◆ 창업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 마을단위 감염 확산 방지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농업·농촌 노동인력 수급 점검 및 인력 대책 마련	단기 단기 중장기
◆ 첨단농업 도입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절감	◆ 스마트팜 도입 적극 지원 ◆ 지형에 맞는 농기계 개발 및 도입	단기 중장기
◆ 농산물 안정적 수급·유통 시스템 확립	◆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산물꾸러미 사업 확대 ◆ 지역 농수축산·식품 홍보 및 마케팅, 판로 확대 지원 ◆ 온라인 판매 교육 및 지원 확대 ◆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 간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단기 단기 단기 중장기
◆ 농산물 수출 및 농촌관광으로 新소득 창출	◆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구축 ◆ 새로운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마이크로투어리즘'과 같은 소규모 여행 형태 변화 ◆ 1~3차 산업이 집적화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확대 추진	단기 단기 중장기

주 : 제Ⅲ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도시공간

표 IV-5 | 도시공간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도시공간	
현상과 이슈	◆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 고밀 · 집중에서 저밀 · 분산으로	
	◆ 스마트 도시 서비스 수요 대응: 스마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도시공간의 환경 변화	
	◆ 공원 · 녹지시설의 효용성 증가	
	◆ 상업 및 주거공간의 기능 변화: 상업지역의 기능 둔화와 최소 주거면적의 확대	
	◆ 농촌지역(비도시지역) 어메니티(Amenity) 가치 활용: 농촌지역에 대한 높은 거주 수요라는 기회요인 존재	
대응전략		
◆ 성장거점도시 중심,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및 SOC 디지털화 추진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1개 시·군 구축 완성 ◆ 충북혁신도시 연계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사업 추진 ◆ 스마트 교육환경 선도모델 구축 : 충북혁신도시	중장기 중장기 단기 단기 단기
◆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계획 수립	◆ 스마트 워크 공간계획 수립 ◆ 공간의 다기능화 및 유연성 강화 : 수요에 대응해 용도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단기 단기
◆ 공간구조 연계 공공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 방재거점빌딩 건축 유도 ◆ 생활권 단위 공공보건지소 확충 및 병원 설립	단기 중장기
◆ 도시 내 공유공간으로의 공원 · 녹지체계 구축	◆ 도심공원의 확충 및 접근성 향상 추진 ◆ 주거지 연계 생활권 녹지체계 구축 ◆ 생활 밀착형 쉼터 조성	단기 단기 단기
◆ 상업공간의 기능 재편 도모	◆ 전통시장 공간 혁신 도모 ◆ 상업용도 밀도 조정 및 기존 상업지역의 다운 조닝(Down Zoning)	단기 중장기 중장기
◆ 주거시설의 위생 강화 및 안전 공간 설계	◆ 실내 환기 등 다양한 위생 방역시설 도입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기준 강화 ◆ 고위험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시급	단기 단기 중장기
◆ 농촌공간(비도시지역)의 활용 극대화	◆ 안전한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 증대 ◆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마을 (Urban Village) 조성 계획 수립 : 은퇴자 및 고령자 중심의 주거복합단지 ◆ 농촌과 중소도시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도시 구축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 세계 방역선진국의 성장거점 기관 유치(가칭 생명·평화 유엔대학)	◆ 충북 청주시 입지의 우월성 홍보 ◆ 국가사업으로서의 당위성 논리 전개 ◆ 효율적 유치전략 수립	단기 중장기 중장기

주 : 제Ⅲ 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교통물류

표 IV-6 | 교통물류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교통물류	
현상과 이슈	◆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객통행량 급격히 감소 ◆ 대중교통의 위기, 지속가능한 이용환경 마련 요구 ◆ 개인교통 선호에 따른 도시교통 혼잡 완화방안 필요 ◆ 쇼핑, 외식 문화의 변화로 택배·배달수요 증가 ◆ 넥스트 노멀 문화인 언택트 교통수요 증가	
대응전략	추진과제	비고
◆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단계별 대응	◆ 운행비용 절감 방안 강구 ◆ 한시적 재정지원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단기 단기 중장기
◆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이용체계 확립	◆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 수요에 대응하는 시내버스 배차계획 조정 ◆ 시내버스 혼잡도 관리기준 및 정보제공 인프라 확충 ◆ 버스교통의 표준운영절차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단기 단기 중장기 중장기
◆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수요 관리	◆ 재택근무/화상원격회의 환경조성 ◆ 근무시간 시차제/유연근무제 도입	단기 단기
◆ 교통서비스 다양화 및 SOC 디지털화 추진	◆ 유희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통학버스 한시적 운행 지원 (공유교통) ◆ 퍼스널모빌리티 등 신교통수단 도입 및 활성화 ◆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 SOC 디지털화 추진	단기 중장기 중장기
◆ 넥스트 노멀 시대 디지털 물류 신산업 육성	◆ 도시 내 물류량 증대에 대비한 스마트 물류센터 및 생활물류 기반시설 확충 ◆ 도내 물류기업과 연합한 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육성 ◆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콜드체인 물류기반 조성 ◆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지원	단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주 : 제Ⅲ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문화관광

표 IV-7 | 문화관광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문화관광		
현상과 이슈	◆ 전 세계 관광산업 유례없는 불황 : '20년 국제관광객 '19년 대비 80% 감소 전망		
	◆ 언택트 시대, 랜선으로 향유하는 문화예술		
	◆ 코로나 역설,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문화예술계의 진화		
	◆ K-방역, 충북 위상 제고 및 국제관광 기회		
	◆ 공익과 사생활 보호와의 갈등		
대응전략	추진과제	비고	
◆ 백두대간, 호수 등 자연자원 기반 청정관광 지향 지속	◆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비대면 관광시스템' 선제 구축	단기	
	◆ 충주호 수상레저 활성화	중장기	
◆ 온라인 MICE 산업 특화 육성을 통한 재난회복 탄력성 강화	◆ 오송이 가지고 있는 MICE 산업 잠재력 활용	단기	
	◆ 온라인 특화 컨벤션 충북청주전시관(Green CONFEX) 조성	중장기	
	◆ 청주 오송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통한 융복합관광 육성	중장기	
◆ K-방역 기반 거점시설 조성 및 충북형 의료 관광 육성	◆ 오송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중장기	
	◆ 국립 감염병(K-방역) 교육관 건립	중장기	
	◆ 충북형 의료관광 육성	중장기	
◆ 언택트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	◆ 언택트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디지털플랫폼 구축	단기	
	◆ 랜선 공연 · 전시콘텐츠의 연결성 강화	단기	
	◆ 언택트 문화예술 디지털플랫폼 개발	중장기	
◆ 다 함께 행복한 민주 시민사회 성숙	◆ 소규모 공동체문화 활성화 지원	단기	
	◆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콘텐츠 개발	중장기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	중장기	

주 : 제Ⅲ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환경

표 IV-8 | 환경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환경		
현상과 이슈	◆ '20년대 인류가 맞닥뜨릴 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환경문제(파괴, 오염) 대두		
	◆ 코로나19로 인한 대기환경의 국내·외 대기환경의 변화		
	◆ 언택(Un-tact) 소비문화로 쓰레기 발생량 급증		
	◆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개발로 세계적 감염병 발생빈도 증가		
	◆ 생물 다양성 감소에 따른 인간의 생태면역력 감소		
	◆ 팬데믹 상황 대응에 취약한 도시 종속적인 공간과 사회구조		
대응전략	추진과제	비고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 처리과정의 체계적 관리	◆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홍보 및 교육 강화	단기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	단기	
	◆ 주민 자발적 폐기물 감축, 재활용 운동 및 사업 지원	단기	
◆ 소비제품의 전과정평가(LCA) 제도 강화	◆ 소비제품의 전과정평가(LCA) 제도 도입(조례 제정) : 소비제품의 포장, 택배포장의 최소화 및 회수체계 마련	중장기	
◆ 정부 주도에서 주민주도의 블록형 환경관리체계로 전환	◆ 환경기반시설(상·하수도, 폐기물 수거, 환경처리시설 등)의 블록관리체계 구축	중장기	
◆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인간의 생태면역력 강화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총복도 시행계획 수립	단기	
	◆ 생태면역력 증진을 위한 농촌지역 생태놀이터 조성 과 도시지역과 연계	단기	
	◆ 생물다양성보호구역 지정 및 주민주도형 관리체계 구축	중장기	
◆ 공간 및 사회의 분산형 구조로의 대전환	◆ 유턴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단기	
	◆ 분산형 자립공동체로의 도시-농촌 공간구조 대전환	중장기	

주 : 제Ⅲ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 보건복지

| 표 IV-9 | 보건복지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보건복지	
현상과 이슈	◆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계층 증가로 긴급지원 대상 확대 : 보편적 복지 논쟁 재등장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가정 돌봄 부담 증가 ◆ 불평등한 위험의 재분배 필요 : 불합리한 코호트 격리 및 취약계층 높은 감염 노출 등 ◆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 가중(CIPS, Corona Induced Panic Syndrome) ◆ 감염병에 대한 취약한 대응역량 : 병실 수,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초래	
대응전략	추진과제	비고
◆ 사회복지정책 재구조화	◆ 보건복지관점 전환 : 잔여적 → 보편적, (지방)정부중심 → 도민과 협력	중장기
	◆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보완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중장기
◆ 돌봄 안전망 구축 및 소통체계 강화	◆ 사회적 소통체계 강화 : 포용과 연대, 공존과共生, 심리적으로 다가서기	단기
	◆ 돌봄서비스 컨트롤 타워 구축 : 충북 사회복지서비스원 설치 ◆ 주거(생활)시설 격리실 운영 의무화	중장기 중장기
◆ 디지털 복지 활성화	◆ 상설 온라인(모바일) 복지서비스 운영	단기
	◆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 확대	단기
◆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 감염병 환자 배분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마련	단기
	◆ 시군 보건소 중심의 공공보건 시스템 정비 및 확충	단기
	◆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중장기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미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	단기
	◆ 도민 헬스케어 프로젝트 시행 : 건강 충북 프로젝트	단기
	◆ 보건의료인력 양성 확대 : 국공립 의대 정원 확대, 충분한 역학조사관 확보	중장기
	◆ 원격의(진)료 제도화 준비 : 부작용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북 시스템 점검	중장기

주 : 제Ⅲ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행정재정

표 IV-10 | 행정재정 부문 전략과제

분야별	행정재정	
현상과 이슈	◆ 전자정부의 인프라 기반, '디지털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 ◆ 비대면 업무의 확산과 비대면 민원서비스 증가 ◆ 감염병 관련 법령의 정비 요구 ◆ 국가경제 침체로 인한 국세의 신장성 제약으로 재정 위축 ◆ 상시적 재정구조조정과 신속집행으로의 재정운영 방식 개편 ◆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대응전략	추진과제	비고
◆ 공공기관의 일하는 업무방식의 개선	◆ 국민의 감염병 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통채널 강화 ◆ 재택근무·영상회의·유연근무제 확대 ◆ 공공기관 채용 등 대면업무 및 관련기관 간의 업무조정	단기 단기 단기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디지털 원격교육을 위한 기능강화 ◆ 디지털 민원상담 챗봇 구축	단기 단기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새로운 가치창출과 현안에 대한 집단지성의 참여 확대 ◆ 읍·면·동 중심의 방역지원체계 강화 ◆ 지역마을공동체 기반 생활자치 유도 ◆ 감염병 이후 지역사회의 회복력 재생	단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 자치단체간 방역·안전 관리 역량 강화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역량 기반강화와 역학조사관 총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감염병 전문병원의 구축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	단기 단기 중장기 중장기
◆ 제반세제 혜택 및 유동성 확대로 정책의 적시성과 실효성 제고	◆ 한시적 지방세 경감으로 지역경제의 유동성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참여문화의 조성 ◆ 재난상황 위기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서비스 강화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적시성 제고 ◆ 효율성 낮은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중장기
◆ 지방재정의 분권성 강화 및 효율적 예산집행체계 구축	◆ 재정안정화기금 전략적 활용 ◆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예산집행체계 구축 ◆ 국세의 신장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개편 ◆ 확장적 지방재정정책으로 정책기조 전환	단기 단기 중장기 중장기

주 : 제 III 장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숙의를 통해 재구성

2. 대이전 전략 체계도



[그림 N-2] ‘넥스트 종북’ 대응전략 체계도(Type 1)



[그림 IV-3] '넥스트 충북' 대응전략 체계도(Type 2)

제2절 ‘넥스트 충북’을 위한 제언

1. 사업추진체계 구축

1 조직 및 제도 확충

넥스트 충북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 포스트 코로나 ‘넥스트 노멀 시대, 넥스트 충북 설계’를 위한 전담조직(기구)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조직적 대응체계를 보면 코로나19 초기 상시적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대응하다, ‘비상경제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비상경제회의’→‘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의 형태로 확대 발전
- △국정 핵심과제들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타 과제들을 기획, 수행 및 관리하며,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력적 네트워크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기구)의 설립·운영을 제안함

모든 실·국의 전 방위 대응체계 구축

- 포스트 코로나 대응정책은 전 분야에 망라하게 제안되고 있기에, 충북도의 모든 실·국이 전 방위적으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실·국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제안·검토·수집하는 역할과 함께, 부여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집행 담당
- 한편 전술한 전담조직(기구)을 통해 개별 실국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조정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신속한 관련제도 정비

- 충북도 측면에서 시행가능 한 조례 및 지침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
 - 제도개선에 대한 수요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 및 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경우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적극 검토
- 가장 빠른 실천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이 필요함

2 분야별 전략계획 수립

폭넓은 정책의견 수렴과 정책 모니터링

- 코로나19는 지금껏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없던 다음 세대의 기준(Next Normal, AD; After Diseases)을 만들어 가야함
 - 즉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인만큼, 그동안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정책방향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시도해 보아야 하는 미션 부여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한 탈피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책의견 수렴과 정책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보고서 권두언에 언급된 것처럼 무엇보다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

구체적인 전략계획 수립

- 본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제안보다는 비교적 폭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방향과 과제의 제안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Insight)’를 제공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정책 방향성과 목표가 정해지면 해당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전략계획 수립이 요구됨

3 모두가 단합하는 총복

모두가 한 배에 탄 것을 인식

-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가 한 배에 탔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함(프레시안, 2020.6.4.)
 - 실제 금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앞으로 우리 인류는 다양한 ‘전 세계적 문제’들을 마주칠 것이라 예상 가능
-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한 배에 탄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즉 공동체를 더욱 중요시 하는 의식들이 공감·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지자체 및 시민사회 모두에게 책임 있는 역할론 대두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정책적 담론 형성

- 행동경제학자 사무엘 보울스는 '대전환을 위해서 정부와 시장, 두 축으로 이뤄져 있던 기존 세계에 시민사회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함(CAC 글로벌 서밋, 2020.6.2.)
- 모두가 함께 바꾸어야 할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발전된 시민사회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체계 모색을 병행하여야 함
 - '넥스트 충북 전담조직'에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검토

■ 격차와 낙오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 방향성 설정

-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사회변화 중 하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야기하게 됨
 - 뿐만 아니라 선별적 재정지원의 경우, 의도와 다르게 계층 간 갈등 유발 사례 발생
- 시행에 있어 상기의 문제점이 최소화 되고 하나 된 충북, 나아가 하나 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하고 균형 있는 검토(보완책 마련)가 이루어져야 함

2. 정책연계를 통한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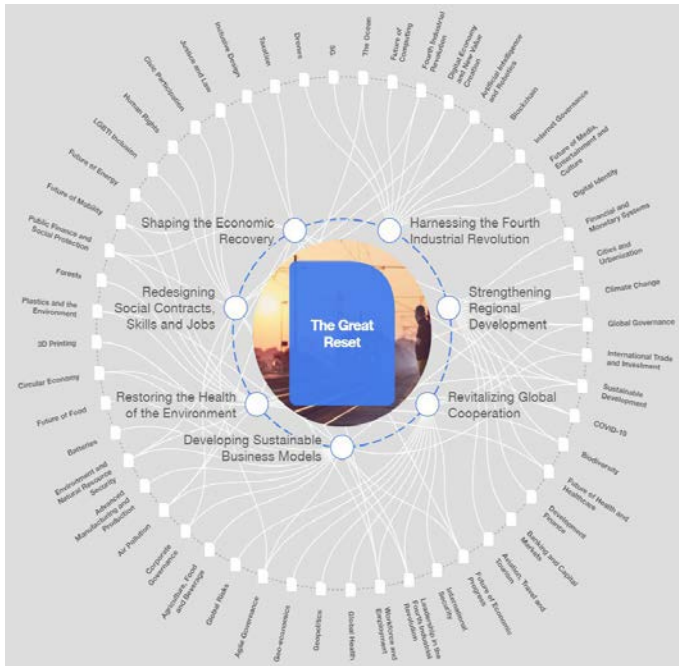
1. 도정방향과 정합성 유지

■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향하여...

- 현재 충북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주요 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
- '넥스트 충북의 대응 전략'과 '기존의 도정방향' 간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정책 기획을 통하여 도정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핵심 키워드에 집중한 대응계획 수립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혹은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키워드들이 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 '언택트', 'K-방역', '리쇼어링' 등을 들 수 있음(기타 다수)
- 사회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키워드에 기반 한 정책과제의 재정립 및 추가 발굴을 통하여,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갖추어야 함



[그림 IV-4] The Great Reset by COVID-19

자료 : WEF, Strategic Intelligence, 2020

충북의 미래자산 적극 활용

- 지난 5월 8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부지로 충북 청주가 최종 확정 되었으며, 이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미래자산 중 하나임
- ‘꿈의 빛’으로 불리 우는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신약 개발, 바이러스 구조 관찰 등 미래 산업발전의 핵심으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관련 분야 관심도를 감안할 때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현재 다양한 계획이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
-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태양광, 미래차 산업 등 우리 충북의 다양한 미래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리딩 프로젝트(Leading Project) 선정

- 다양한 정책수립에 있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리딩 프로젝트의 발굴 및 운영’은 전체적인 사업수행의 긍정적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임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충북형 뉴딜 사업’도 이러한 맥락 속에 진행될 것을 기대하며, 대표적 사업이 선두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넥스트 충북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방식은 정량적 사업성과 이외에도 다양한 정성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협력체계 구축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국정방향에서 기회요인 발굴

- 정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이어 6월 3일 이를 반영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함
-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국판 뉴딜’을 필두로 다양한 투자방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국정방향과 일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발굴하고, 선도적이고 집중적인 시행 노력이 필요함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정건의

- 코로나19로부터 야기된 위기를 극복하고, 넥스트 노멀 시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이에 지방정부의 범위를 벗어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 ‘목목화’하고 ‘개선방향 설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선제적인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긴급복지지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들을 본문에 제안

K-방역의 중심지, 충북 오송

- 도취하기는 이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방역체계 일명 ‘K-방역’은 글로벌 노멀(Global Normal)로 많은 찬사를 받음
 - ‘한국판 뉴딜’에 따르면 K-방역의 고도화·산업화·세계화와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2조 5천억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
- 자연스레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위치한 충북 오송의 공간가치(장소성)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오송이 ‘K-방역과 바이오헬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여야 함

3 '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 성장'으로...

■ 환경과 시민에 집중한 선도정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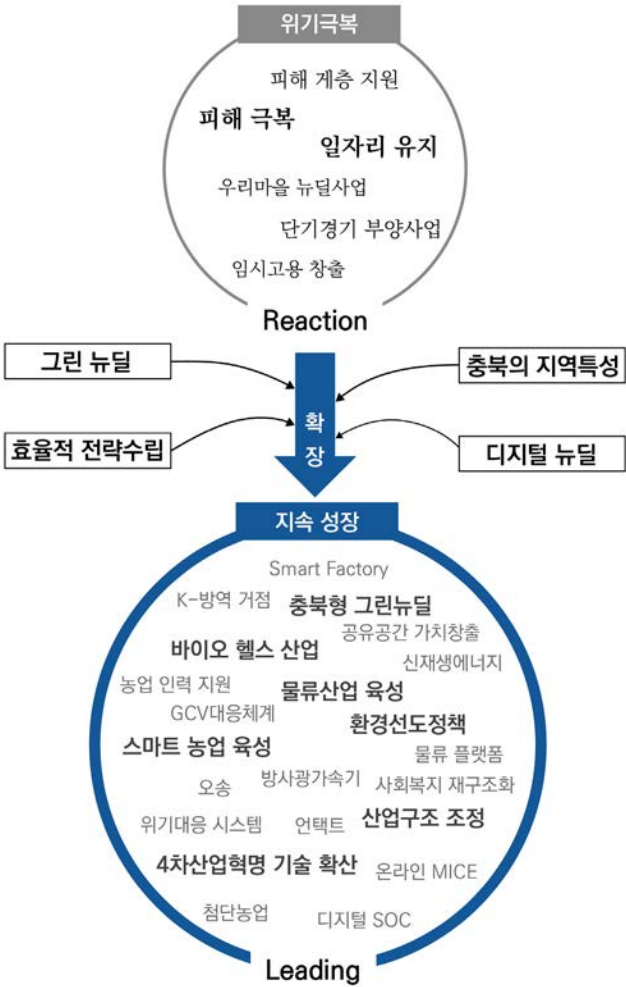
-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관통하는 이슈의 흐름은 ①최초 감염병 그 자체에서, ②민생경제 문제로, 이후 이를 통해 벌어지는 ③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언택트)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④과학기술 변화 현상에 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변해옴
- 이러한 흐름은 다시 감염병의 핵심요인인 '환경'과, 그 대상인 '사람'에 대한 이슈와 관심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리드할 수 있는 선도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함
 - '주민 주도의 블록형 환경관리체계로 전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충북도 시행계획 수립' 등 일부 과제 본문 수록

■ 위기와 기회, 국가균형발전

-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
 -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간의 갈등 양상 관측
- 비록 국난에 준하는 상황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정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충북형 뉴딜사업 방향성 확장

- 현재 충북도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충격 극복을 목적으로 '충북형 뉴딜사업'을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 입안을 예고하고 있음
 - 1호 '우리 마을 뉴딜', 2호 '투자유치 뉴딜', 3호 '시·군 대표 뉴딜사업'
- 1, 2호 뉴딜사업이 구제(Relief)와 회복(Recovery)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3호 뉴딜사업을 비롯한 향후 정책은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개혁(Reform)에 중점을 두고, '충북의 산업 경쟁력 증진과 지속 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 방향성을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임



[그림 IV-5] 충북형 뉴딜사업의 방향성 확장

참고문헌

충격 제 I 장 팬데믹의 충격

- 국민일보, “나이키형도 낙관적” 끝없는 추락… ‘I자형’ 경기전망까지 등장, 2020.5.13.
- 관계부처합동,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2020.4.22.
- 뉴스원, [바이러스 대란-②] 코로나 팬데믹 어디까지 왔나, 2020.4.20.
- 동아닷컴, 코로나 백신 개발 1년 이상 걸려…빠른 시간내 사용 불가능, 2020.3.26.
- 삼성 KPMG경제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 방향, 2020.3.
-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충북 경제 휘청…피해 규모 4천억원 넘어, 2020.4.4.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일문일답], 2020.5.1.
- 장철훈, 감염병과의 전쟁 어디까지 왔나, Future Horizon 44권 1호, 2020
- 중앙일보, 코로나 치료제 “상반기 임상 결과” vs “연내 개발 어려워”, 2020.3.21.
- 중앙일보, 백신 출시에 보통 5~10년 걸리지만, 코로나19는 단축 가능, 2020.4.11.
- 충북연구원, 코로나19가 충북 경제에 미치는 손실 · 효과 분석보고서, 2020.2.
- 충청북도 보도자료, 코로나19 충북 피해상황, 2020.4.
- 하나금융그룹, HIF월간 산업 이슈, 2020.4.
-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Novel Coronavirus(COVID-19)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 CNN, Coronavirus may ‘never go away,’ says WHO official, 2020.5.13.
- The Scinece Times, 모든 균종을 뜻하는 ‘팬데믹’, 2020.3.17.
- Mckinsey & Company, ‘Beyond coronavirus: The path to the next normal’, 2020.3.
- 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4, 2020
- 네이버 지식백과
- 질병관리본부
- 위키사전
- KOSIS
- K스피릿

전망 제II 장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 전망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0.4.3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6.3.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2020.2.19.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화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2020.2.28.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 2020.5.7.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6.1.



- 경북일보, 포항시 호미곶에 드라이브 스루 강도다리 활어회 판매장 등장, 2020.3.14.
- 뉴시스, 전국 킥보드 공유시장, 6배 상승, 코로나 19사태로 이용 급증, 2020.5.26.
- 동아일보, 한국발 입국제한 142곳…페루·가나 등 입국금지 잇따라, 2020.3.16.
- 리처드 볼드위 외, 세계교역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경제전쟁』, 매경, 2020.4.
- 매일경제, 포스트 코로나 20가지 생존법칙, 2020.5.5.
- 아주경제, '식품 ↑ 여행 ↓'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소비추이, 2020.5.7.
- 연합뉴스, 사상 초유 '840만명 원격수업' 미래교육 초석될까, 2020.4.26.
- 연합뉴스, 전국 12개 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2020.5.12.
- 연합뉴스, 사상 첫 온라인 삼성고시 무사히 끝나...새 트렌드 될까, 2020.5.31.
- 연합뉴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2020.5.5.
- 조선비즈, 프로야구 무관중 첫날 TV중계에 야구팬 216만명 몰려, 2020.5.6.
- 중앙일보, 한국 또 증명 외신 찬사 쏟아진 한 방역 총선, 2020.4.18.
- BBC코리아, 코로나19 : 그래프로 보는 이전과 달라진 한국, 2020.5.11.
- KBS 뉴스, [카드실정 전수분석] 코로나19 얼마나 강한가? 데이터로 본 소비 충격, 2020.5.30.
- SBS 뉴스, 마스크 쓴 채 '입맞춤'…필리핀의 대규모 합동결혼식, 2020.2.24.
-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KOSIS

과제 제Ⅲ 장 넥스트 노멀 시대, 총복의 전략과제

제1절 산업경제

- 뉴욕타임즈, How the Virus Transformed the Way Americans Spend Their Money, 20.4.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2020
- 무역협회, 지자체 수출입, 해당연도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020.5.
- 충청북도 내부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현대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2020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020.5.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실 승인실적 기준)
- CJB 청주방송

- The New York Times
- World Bank, UNCTAD-EORA database

제2절 고용 · 일자리

- 강성은, 2020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역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1), 2020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2020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국제노동기구, COVID-19와 일의 세계 보고서, 202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4.14.
- 문화일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 2020.5.4.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2020.5.6.
- 오호영,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2016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일문일답], 2020.5.1.
- 정도숙, 포스트 코로나19 중국 유망 상품, 유망 서비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33만 실업대란 가능성, 지금 필요한 건 주사바늘 아닌 메스!, 2020.4.20.
- 한국은행 충북본부, 2020년 4월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2020
- KOSIS 산업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
- KOSIS, 경제활동 인구조사
-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LY CHAIN TRADE, AND WORKERS IN A GLOBALIZED WORLD, World Trade Organization, 2019
- World Bank,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제3절 과학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4.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2020.4.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202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020
- 보건복지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19
-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12호, 2020.4.
- 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 모델과 정책 과제, 2020.5.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정책과,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2020.5.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 2020.5.11.
- 이명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 모델과 정책 과제, 202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외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과 과제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2020

제4절 농축산

- 광주전남연구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지역차원의 대응방향, 2020
- 김상호 외 3인, KREI현안분석 제74호, 2020.5.20.
- 류호천, 농가·고객 “농산물 꾸러미는 효자 꾸러미”, 농민신문, 2020.5.18.
- 박성진·박지원·강두현·안정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2020
- 농수축산신문, 스마트팜을 더 스마트하게, 2018.4.
- 이명기·송병민·우성희,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KREI 현안 분석 제7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5.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미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농업 제조공정의 변화 및 사례, 2019
- 이용선, 농수산식품시장의 온·오프라인 통합과 진화, 농촌경제연구원, 2020
- 양석훈, 물 들어오는 농촌관광 프로그램 다양화로 노 저어야, 농민신문, 2020.5.13.
- 정석완,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점검, 이슈브리프,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0
- KBS 뉴스, 농번기 농촌 인력 수급 비상, 2020.4.17.
- KBS 뉴스, 진천군 지역 농산물 꾸러미 온라인 판매, 2020.4.20.

제5절 도시공간

- 국토지리정보원, 2017 국토모니터링보고서, 2018.
- 부산연구원, Post COVID-19 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2020.4.
- 서울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자료집, 2020.5.12.
- 이형주, 코로나19 시대, 한국 공원 방문율 증가 이유는?, 환경과 조경, 2020.4.16.
-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로 공원 품은 아파트 수요 는다, 2020.5.3.
- 중앙일보, 코로나가 바꾼 동선, 구글은 안다…伊 올스톱, 한국은 공원 51% ↑, 2020.4.3.
- Google, 지역사회 이동성보고서
- KBS, 상가 수요 줄어드는 ‘포스트’코로나 대비해 도시계획 틀 바꾼다, 2020.5.13.
- REES, Pacific Plaza Continuing Care Planning Retirement Community, 2020
- Youtube, Urbavirius/Podcast 3/The 15 minute city, 2020.

제6절 교통물류

- 김용섭, 언컨택트, 퍼블리온, 2020
- 내손안의 서울, 서울시 버스환잡정보 서비스 의미와 개선방안, 2017.7.4.
- 뉴스1, 신종 코로나에 택배물량 최대 14% 증가…택배사·이커머스도 ‘방역’ 비상, 2020.2.10.

- 동아일보, 코로나19 뚫고 라이더는 달린다.. 외식 출고 배달 증가, 2020.3.15.
- 서초구민신문, 버스정류장? 디지털공간? 첨단 버스정류장, 2019.1.
-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자, 이륜차 교통안전협의회 발족, 2020.5.25.
- 한영준, 코로나 19로 배달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파이낸셜 뉴스, 2020.5.19.
- 청주시 내부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IT조선, 자율주행 기술로 이동우체국 시대 열린다, 2020.5.28.
- Alon Levy, How U.S. Public Transit Can Survive Coronavirus, CityLab, 2020.4.24.
- Amazon Scout 홈페이지
- Hu Shixiong, Hunan Provincial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CMP, 2020
- Sandy Smith, Coronavirus Outbreak Triggers New Thinking About Transit's Essential Role, Next City, 2020.4.9.

제7절 문화관광

- 경향신문, 코로나 19 직격탄, 2020.4.1.
- 관계 부처 합동 국가관광전략회의, 케이(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2020.5.26.
-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
-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 충청북도 홈페이지
- 한국화랑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 KBS 뉴스, 빅데이터로 본 문화예술·스포츠·여행업, 2020.5.26.
- BBC 홈페이지
- UNWTO, Impact assessment of the COVID-19 outbreak on international tourism, 2020.5.

제8절 환경

- 미국항공우주국(NASA)
- 중앙일보, 낚선 트럭 따라가니 250t 폐기물, 불법 투기 잡은 주민 순찰대, 2020.5.28.
- 청주시 내부자료(자원정책과)
- EU Science Hub, Life Cycle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bioeconomy, 2019
-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2020



제9절 보건복지

- 광대경,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 대인관계 고민은 ↓, 가족갈등은 ↑, 복지타임즈, 2020.5.6.
- 경기매일, 코로나19 고령 기저질환자 위험 알아도... 요양시설 속수무책, 2020.3.6.
- 박정은, 코로나19 사태 의료인력 부족 난항, 공공의과대학 설립해야, 메디컬투데이, 2020.4.21.
-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s, 20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인력 수급관리 대책 나서, 2017.5.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년도 신임 공중보건의사 724명, 코로나19 현장배치 대비 직무교육 실시, 2020
- 손의연, 코로나19 확산 후 아동학대 신고 13.8% 늘어, 경찰 주의 깊게 분석, 이데일리, 2020.4.6.
- 손지민, 가정폭력 4.9% 줄었다고? 일상도 통제, 신고조차 어렵다, 서울신문, 2020.4.26.
- 이슬기, 코로나19 확진 시설장애인 병원 돌봄 지원인력 모집, 에이블뉴스, 2020.6.6.
- 윤강재, 보건복지 ISSUE&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3.
- 조선예듀, 코로나19 확산에 돌봄공백 심각, 2020.3.2.
- 충청북도 내부자료

제10절 행정

- 김기환, “우한 교민” 수용 앞두고 아수라장된 진천·아산 인재개발원은, 중앙일보, 2020.1.3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2020.5.8.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정부의 대응과제, 2020.5.7.
- 박재천·신지웅, 웹 2.0 플랫폼에서의 집단지성 활용방안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8권 2호, 2007.6.
- 박재희,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재난 대응의 진단 및 과제,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88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6
- 서지영·조규진,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STEPI Insight 제147호, 2014
- 양상희, 정부의 코로나19사태 대처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 : 「국제보건규칙」(2005)과 메르스 사태 분석을 비교하여, 인문사회21 제11권 2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오윤경·류현숙·허준영·김형열·김대훈, 코로나 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ISSUE PAPER, 한국행정연구원, 2020
- 이왕건, 코로나19 시대 도시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No.763, 2020
- 이재호 외 3, COVID 이후 국가·사회회복력(Resilience)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의 방향. ISSUE PAPER, 2020
- 이준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2020.
- 인사혁신처,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지침, 2020.3.24.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NO 125, 2017.3.2.
- 행정안전부,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폭증, 2020.5.
- 홍윤철, 바이러스의 습격,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포르체, 2020
- K-MOOC 홈페이지
- 디지털타임스

실행 제Ⅳ장 넥스트 총북, 미래 설계

- 관계부처 합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6.1.
-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6.3.
- 나무위키, 뉴딜 정책
- 프레시안, 〈총·균·쇠〉교수 재난 재정 정책 지금 하는 것 두배로 해야, 2020.6.4.
- WEF, Strategic Intelligence, 2020.6.

충북연구원 모두가 참여하였습니다.

성장동력연구부

성장동력연구부장	설영훈
수석연구위원	정삼철
수석연구위원	우장명
선임연구위원	윤영한
연구위원	남윤명
연구위원	김미옥
전문연구위원	양서우
전문연구위원	이유환

공간창조연구부

공간창조연구부장	정용일
수석연구위원	이경기
수석연구위원	원광희
선임연구위원	오상진
선임연구위원	채성주
선임연구위원	변혜선
연구위원	홍성호

상생발전연구부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수석연구위원	정연정
선임연구위원	배명순
선임연구위원	김덕준
선임연구위원	배민기
연구위원	김미경
연구위원	조진희

사회통합연구부

사회통합연구부장	최은희
수석연구위원	김진덕
수석연구위원	김양식
수석연구위원	최용환
선임연구위원	최승호
전문연구위원	황명구

■ 연구지원 : 연구원 이종수, 유용식

포스트 코로나 | **Post COVID-19**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

1판 1쇄 발행 2020년 6월 15일

발행처	충북연구원
발행인	원장 정초시
연구책임	공간창조연구부장 정용일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07
팩스	043-220-1199
홈페이지	http://www.cri.re.kr
편집 및 디자인	라임 043-267-0101

ISBN 978-89-6455-459-3 9333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충북연구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